

202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가을 학술회의

저물녘의 대학, 돌아봄과 내다봄

일시 2021년 11월 13일(토) 13:00-18:00

장소 ZOOM 화상회의실

주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가을 학술대회

□ 대회 취지문

‘벗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는 자조 섞인 우려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 미달이 현실화하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학 대부분이 한꺼번에 존립 위기에 처했다. 대학 안팎에서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학의 존재 목적과 사명에 대한 논의와 성찰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얼이 빠진 인간을 좀비라고 부르는데, 대학이 존재 근거와 이상을 저버리고도 생존했다면 그것을 대학으로 불러야 할까?

모든 위기 담론이 그렇듯이 ‘대학의 위기’도 오래된 논의이다. 다만 그 위기를 운위하는 주체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다니기만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육부, 경제계, 대학의 여러 구성 세력 등이 저마다 위기라고 외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대학의 공적 의무를 나열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학문과 교육 측면에서 근원적인 성찰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과연 우리 대학은 막스 베버가 말한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실천하고 있는가? 뒤르케임이 요청한 ‘시민적 도덕 교육’에 응답하고 있는가?

일찍이 우리 학회는 ‘오늘의 우리 대학: 반성과 개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고(1993년 5월 25일), 그 결과를 『현상과인식』 17권 1호에 실었다. 1981년과 1984년에는 한국 대학의 풍토를 성찰하는 특집호를 묶어내기도 했다. 대학의 전성기에 이미 한국 대학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했던 그 학술사적 전통에 기대어, 이제 우리는 오늘 대학의 위기 그 밑뿌리를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주제: 저물녘의 대학, 돌아봄과 내다봄

□ 일시: 2021. 11. 13.(토) 13:00-18:00

□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순서

- 12:40-13:00 온라인 접속 (ZOOM 입장)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윤리교육
 13:00-13:10 개회사 / 정 갑영 (본회 회장)
 13:10-14:00 2021년 손보기기념강연(동영상)

발표자	발표제목
오 세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자본주의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

14:00-14:10 휴식

14:10-14:40 기조강연 사회: 임 상현(경희대)

발표자	발표 제목
조 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전환의 시대, ‘원천’ 서 배우고 ‘미래’ 에서 행한다

14:40-16:00 1부 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임 상현(경희대)

발표자	발표 제목
박 영신(연세대)	대학의 소명
최 대권(서울대)	대학의 존재 이유
조 관자(서울대)	지성사로 본 일본의 대학과 비판적 지식인

16:00-16:10 휴식

16:10-17:30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이 황직(숙명여대)

발표자	발표 제목
김 영선(성공회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여성학의 도전과 새로운 실천
양 혜원(이화여대)	아카데미적 노마디즘: 소명으로서 연구와 연구자의 삶/생존에 대한 소고
박 치현(대구대)	탈콧 파슨스의 대학론과 한국 대학

17:3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목 차

□ 2021년 손보기기념강연	
사회 [이 황직 (숙명여대)]	
강연 “자본주의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 (동영상)	
[오 세철 (연세대)]	1
□ 기조강연	
사회 [임 상헌 (경희대)]	
강연 전환의 시대, 원천서 배우고 미래에서 행한다	
[조 인원 (경희대)]	17
□ Session I	
사회 [임 상헌 (경희대)]	
발표 1 대학의 소명	
[박 영신 (연세대)]	27
발표 2 대학의 존재 이유	
[최 대권 (서울대)]	43
발표 3 지성사로 본 일본의 대학과 비판적 지식인	
[조 관자 (서울대)]	53
□ Session II	
사회 [이 황직 (숙명여대)]	
발표 4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여성학의 도전과 새로운 실천	
[김 영선 (성공회대)]	71
발표 5 아카데미 노마디즘: 소명으로서 연구와 연구자의 삶/생존에 대한 소고	
[양 혜원 (이화여대)]	81
발표 6 탈콧 파슨스의 대학론과 한국 대학	
[박 치현 (대구대)]	9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1년 손보기기념강연

「현상과인식」/한국인문사회과학회는 2012년부터 해마다 <손 보기 기념 강연>을 열고 있다. 손 보기 (1922년 7월 7일 ~ 2010년 10월 31일) 선생은 「현상과인식」의 학술고문으로서 커다란 학문의 발자취를 남긴 학자이다.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고고학자로 그는 일제 식민사관의 틀을 허문 학문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강연은 그가 보여준 학문의 자주성과 그가 지켜온 삶의 지조와 비판 정신을 기리고자 함이다.

[이 황직 (숙명여대)]

사회

자본주의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

강연

[오 세철 (연세대)]

자본주의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

오 세철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1. 들어가며

「코뮤니스트」 12호 “코뮤니스트 좌파진영 최근 내부 논쟁(3)”의 머리글에서 나는 앞선 논쟁 (1)과 (2)를 정리하면서 ‘역사의 경로’에 대한 논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코뮤니스트」, 12호(2020. 11): 172-173).

첫째, ICC(국제코뮤니스트흐름)는 ‘역사의 경로’ 개념이 ‘해체’ 시기에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데 반해, ICT(국제코뮤니스트경향), IGCL(코뮤니스트 좌파 국제그룹), NC(신경로), GCCF(걸프만 코뮤니스트 분파) 등은 ‘혁명인가 전쟁인가’의 의제가 여전히 유효하며, ICC는 계급투쟁을 폐기했다고 비판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대한 이해,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이해 등의 근본적 논쟁을 내포하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문제 제기와 논쟁이 요구되는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자.

둘째, (자본주의의) 해체 시기를 양대 제국주의 블록의 소멸(소련 해체로 인한)로 보고 계급의 힘의 균형이 더는 의제가 아니라는 ICC는 소련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미 세계 자본주의 틀 안에 ‘국가자본주의’의 몰락을 자본주의 해체라는 새로운 의미로 규정하기에는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계급투쟁은 필연적인 역사발전의 동력이기 때문에 ‘해체’ 문제를 자본주의를 넘어선 ‘인류의 파괴’로 본다면 우주적 차원의 더 넓고 깊은 인식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셋째, 코뮤니스트 좌파진영 논쟁이 맑스주의 원칙, 정치 노선, 강령 등의 본질적 개념과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회주의’, ‘기생주의’라는 조직 문제로 한정되고 서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세계혁명과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이루어낼 세계혁명당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의 경로’ 논쟁이 깨닫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 : 새로운 토론, 논쟁 그리고 연대-단결을 전망하며”에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윗글: 189).

(첫째, 둘째, 셋째는 생략)

넷째, 그러나 논쟁이 시작된 ‘혁명인가 전쟁인가’의 중심 의제는 ICC가 전쟁을 ‘세계적 혼돈’으로 대체하면서 이윤을 강조한 ICT 등의 입장과 혼돈, 야만 등의 질적인 차원이라는 인류문명 차원의 ICC 대립 구도는 앞으로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팬데믹 위기가 자본주의 위기,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전망, 맑스주의와 코뮤니즘 원칙에 굳건히 서 있는 젊은 코뮤니스트들의 성장과 발전, 계급 정체성을 회복하는 혁명적 노동계급의 복원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그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와 코뮤니스트들의 연대, 단결, 통일을 위한 자기반성, 상호비판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2021년, *A Free Retriever's Digest*, 5호부터) 자본주의의 쇠퇴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면서 위에 언급한 ‘역사의 경로’ 논쟁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계기를 만나게 되었다. ICC의 「자본주의의 쇠퇴」를 번역했고(2009년),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 (2006)에서 「자본주의의 쇠퇴」를 둘러싼 코뮤니스트 좌파 내의 논쟁을 정리한 글을 발표했던 나로서는 「자본주의의 쇠퇴이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코뮤니스트 좌파의 미래를 전망하는 글을 준비해야만 했다.

2. 자본주의 쇠퇴 이론에 대한 회고

(1) 2006년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

나는 「좌익 공산주의 : 혁명적 맑스주의 역사와 논쟁」의 편집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오 세철, 2008: 5-6).

2006년 10월 23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가 열렸다. 그 대회에 참가한 조직은 ‘국제코뮤니스트흐름’(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과 ‘국제주의자전망’(Internationalist Perspective), (초청 받은 ‘혁명당국제서기국’(International Bureau for Revolutionary Party)은 참여하지 않았다)이며, 한국에서는 주최자로서 ‘사회주의정치연합’, ‘노동해방당건설투쟁단’, ‘노동해방연대’, ‘울산노동자배움터’가 대회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나는 주최 측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곳에서 정기적으로 맑스주의자 대회(모임)가 열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강단의 추상적 논리나 자본주의의 좌파에 속한 정치적 세력들의 연대를 위한 행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자본주의 쇠퇴 시대의 객관적이고 주체적 조건이 야만과 전쟁을 넘어서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혁명적 정치 세력은 전망을 분명하게 열어젖히

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 혁명운동이 국제주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던 역사를 뿌리로부터 반성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현장,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을 넘어서는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번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는 한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자들과 세계의 좌익공산주의자들과의 소중한 만남과 토론의 마당이며 혁명적 맑스주의 진영 내의 입장과 노선 차이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첫 번째 경험이 될 것이다.

대회의 주제를 이론, 실천, 전망으로 구분하고 이를 꿰뚫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요 목표이다. 우리는 이번 국제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의 혁명적 맑스주의 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하여 세계혁명을 향한 힘을 축적하고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그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를 바란다.”

이 대회에서 내가 발표한 글은 「자본주의의 쇠퇴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이다(윗글, 262-278). 코뮤니스트 좌파 내부에서의 자본주의 쇠퇴에 관한 논쟁은 주로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논쟁은 주로 ICC와 IBRP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IP는 자신의 입장을 ICC/IBRP와 구별하면서 제출하고 있다. 이번 호는 이들 세 흐름의 최근 글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¹⁾ 자본주의 쇠퇴이론은 맑스 역사적 유물론의 중심 이론으로 앞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략의 기초가 되며 코뮤니즘의 전망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논쟁의 지점을 정리하고 각 세력의 입장을 대비하여 그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였고, 주로 직접 인용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쟁의 쟁점들은 1) 쇠퇴 이론(개념)을 포기했는가 의 문제, 2) 쇠퇴 기원에 대한 논쟁, 3) 경제 결정론인가의 문제, 4) 쇠퇴의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 문제, 5) 전통적 맑스주의 문제 등이고, 더 공개적인 논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 결론을 제시했다(오세철, 2008: 277-278).

첫째, 자본주의 쇠퇴이론과 개념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코뮤니스트 사회 건설의 핵심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 경제 이론의 양적 기준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유물론에 철저하게 기초하면서 총체성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경제 메커니즘과 계급투쟁의 변증법적 통합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부르주아지의 저항 능력이나 기술발전의 힘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는 부적절하다.

1) ICC의 경우, *International Review*, 96, 97, 105, 115, 117, 118, 119, 121호를 볼 것. IBRP의 경우, *Prometeo*, 8호, *Revolutionary Perspectives*, 32호, *Internationalist Communist*, 21호를 볼 것.

다섯째, 쇠퇴와 자본의 실질적 지배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체로서 노동계급에 대한 인류학적, 문화적 연구가 쇠퇴와 관련되어 폭넓게 연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자본축적에서 포드주의, 포스트-포드주의의 이분법을 넘어 쇠퇴 시대의 ‘울트라 포드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맑스주의 핵심과 그의 이론적 간극과 빈틈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자본주의의 쇠퇴」(ICC 지음, 오세철 번역, 빛나는 전망, 2009년)의 출간

코뮤니스트 좌파 정치조직 가운데 자본주의의 쇠퇴이론을 앞장서서 주창하고 책으로 출간한 조직은 ICC(국제코뮤니스트흐름)이다. 2006년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그 대회의 중심이론이 자본주의 쇠퇴이론이었음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나는 이 책을 한국어로 옮기면서 다음과 같이 옮긴 이의 글을 썼다(오 세철, 2009: 1-2).

생산관계의 근본적 모순의 심화가 생산력 발전의 족쇄가 되어 결국 그 족쇄를 깨뜨리는 생산양식의 단절이 필연적이라는 맑스의 역사유물론은 인류 역사의 발전에 대한 탁월한 과학적 사상이론이다. 봉건제 이후의 자본주의가 상승기를 경험하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기에 접어들어 그 자생적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몰락의 길로 나가고 있음은 지금 세계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공황과 자구적 처방의 숙절없음을 보아도 자명하다.

1919년 코민테른 창립대회에서 자본주의 선택의 길을 ‘전쟁이나 혁명이나’고 단언한 이래 자본주의의 쇠퇴에 대한 이론적 입장은 혁명적 맑스주의 진영의 중심적 화두였고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 소책자는 1970년대에 발간되었으나 최근에 ICC가 수정 보완한 수정판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잉여가치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윤율저하 경향법칙과 잉여가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자본주의 시장 포화론 사이에서 ICC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입장인 후자에 기반하고 있고 이는 현재 세계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 쇠퇴이론의 몇 가지 핵심을 말하고 있다.

임노동 관계의 본질로 인해서 자본주의는 그것이 추출한 모든 잉여가치를 그 자신의 사회적 경계 내에서 실현할 수 없다는 맑스의 주장에 기초하여,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 역사적 하강은 자본주의적

총생산에 따라 창출된 잉여가치의 양에 비해 자본주의 외부의 시장들이 모두 소진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룩셈부르크에게 자본주의는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매개나 토양으로 다른 경제체제가 필요한 최초의 경제 양식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세계적 보편 체제가 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체제가 될 수 없어서 파괴되고 마는 것이었다.”(「자본축적론」). 요약하면, 자본주의는 지구 전체를 지배하게 된 그 시점에 과잉생산의 영원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덧글: 19)

룩셈부르크의 인터내셔널 그룹, 레닌의 볼셰비키 분파, 브레멘의 좌익급진파 등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한 세력들로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맑스가 예측한 ‘전쟁과 혁명’의 시기의 시작을 나타냄을 확인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의 혁명적 투쟁으로써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덧글: 20)

쇠퇴론은 ICC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맑스주의 전통 전체로부터의 진정한 유산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관된 혁명적 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 정치조직의 강령은 그 분석과 계급 내 개입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지향성을 가질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캠프를 구별하는 계급 경계가 확고하게 방어될 수 없다.”(덧글: 36)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덧글: 41-218).

제1장_ 계급사회의 변영과 몰락(43-85)

제2장_ 위기와 쇠퇴(89-98)

쇠퇴의 징표들 (경제적 수준에서, 상부구조의 수준에서,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에서)

제3장_ 자본주의에서의 쇠퇴(101-120)

제4장_ 쇠퇴: 생산력의 총체적 정지?(123-134)

제5장_ 1914년 전쟁이라는 전환점(137-159)

제6장_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163-177)

제7장_ 쇠퇴의 위기들(181-188)

제8장_ 총체자본의 개념(191-216)

그리고 “자본주의 쇠퇴 문제가 이것으로 모두 다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중에서 조사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다” 라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덧글: 221).

우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의제라는 우리 확신의 기반을 설명하는 것, 둘째, 자본주의 사회가 거쳐 온 심각한 변화를 다루는 것. 이러한 변화는 혁명가의 전통적 입장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즉 19세기에 유효했던 전술들(의회주의, 노동조합에서의 활동, 민족투쟁에의 참여)이 오늘날 반(反)혁명적으로 되었다.

(3) 역사유물론, 자본주의 쇠퇴론 그리고 코뮤니스트 혁명

맑스는 「요강」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Marx, 1975: 133-134).

임금노동과 자본을 양측 면으로 가진, 인간 활동이 취한 노예체제의 마지막 형태는 그리하여 마치 허물이 벗겨지듯 사라진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에 대응하는 생산양식의 귀결점이다. (스스로 이미 부자유한 사회적 생산의 이전 형태들에 대한 부정인) 임금노동과 자본의 부정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조건들은 자본의 생산과정 자체의 산물이다. 사회의 생산력 발전과 현존하는 생산관계 사이에 점증하는 부조화는 모순, 위기, 변동으로 표현된다.

맑스의 이 대표적 언명은 자본주의 쇠퇴론을 말하는 축약된 표현이며, 역사유물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여기서 쇠퇴 의미는 사회주의 기초 형성과 파국을 향한 모순을 포함한다. 자본주의 쇠퇴론의 쟁점들 속에는 위기, 자동붕괴, 상승기와 쇠퇴기의 구분, 이행의 의미, 주체와 객체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가 담겨있다.

한편 엥겔스가 확립한 에르푸르트 강령은 당 강령의 중심에서 자본주의 쇠퇴론과 자본주의의 붕괴를 지지한다.

이러한 (사유) 재산체제를 지키려는 노력은 더는 사회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가 정체와 쇠퇴로 가게 한다. (...)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은 단순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 문명은 지속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로 나아가든지 야만으로 전락하든지 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관념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누구의 바람이나 번덕이 아닌 특정한 기본법칙에 복종하면서 저항할 수 없이 진보하는 경제발전으로 결정된다.” (카우츠키, 2003: 117-119)

에르푸르트 강령은 내부모순에 의한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몰락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개량주의적 목표와 전술도 담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유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가 상속받은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다. 이처럼 제2 인터내셔널이 맑스의 “경제학” 만을 채택해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형식 비판으로서가 아니라 경제학으로서 정치경제비판을 한 것은 맑스의 공헌이 경제학이 아닌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대한 비판, 즉 경제학 비판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

1916년 이후 부하린과 레닌의 이론은 제국주의와 전쟁을 금융자본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보았고, 이러한 금융자본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나아가는 자본주의 쇠퇴로 보았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다른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면 코뮤니스트 좌파는 프롤레타리아트 패배와 투쟁의 고립에 직면하여 자본주의가 쇠퇴한다는 객관적 분석에 몰두하게 된다.

그로스만(Gossman)과 그 추종자들은, 첫째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가면서 쇠퇴하고 있음을 보이는 경제학을 이해하였고, 둘째 새로운 경제 질서를 도입하는 정치혁명의 필요성을 보았다. 그들은 맑스의 「자본」을 자본주의 몰락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완전한 경제학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와 경제의 연결 관계가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본」의 완결이 자본주의 정치경제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정치경제라는 맑스의 총체적 이해 부족이었다.

이러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그로스만의 입장을 비판한 판넬은 혁명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지막 위기를 믿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위기에서 위기로 이어지고 프롤레타리아트는 투쟁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 자기해방이야말로 자본주의 몰락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입장이 아닌) 노동계급 입장에서 자본주의 쇠퇴와 몰락을 이해하고 있다.

21세기 오늘날 코뮌리즘의 역사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코뮌리스트 좌파는 다음과 같이 결론 맺고 있다.²⁾

맑스주의 혁명적 기초는 자본주의가 위기 체제일 뿐만 아니라 자기 확장의 객관적 한계에 직면한 생산양식임을 증명하는 능력에 있다. 이 견해는 코뮌리즘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것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이러한 필요성은 21세기 오늘날 자본주의가 그 위기를 (전쟁이라는) 가치의 물질적 파괴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이 인류 전체를 절멸시키려고 위협하고 있기에 더욱 절실히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맑스주의 핵심이론인 역사유물론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쇠퇴이론에 대해 정통 맑스주의 입장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자본주의 쇠퇴론에서 이탈과 포기는 사실상 맑스주의 포기일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폐절이 아닌 수정주의나 개량주의로의 노선 전환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2차 세계대전 후 호황과 되풀이되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단기적 국면의 주체성 이론들의 등장과 소멸을 지켜보았다.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과 계급투쟁을 뒤섞은 조류인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 동반 몰락은 자본주의 쇠퇴론이라는 정통 맑스주의 입장을 다시 한번 힘차게 부여잡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자본주의 쇠퇴라는 객관적 자본 법칙과 이를 폐절하려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의 투쟁이 상호작용하면서 21세기의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코뮌리즘의 객관적 물질적 기초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생산력으로서의 혁명 세력을 강력하게 형성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코뮌리즘 본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최대강령의 원칙을 찾아내야 한다.

3. 자본주의 쇠퇴론에 대한 최근의 문제 제기와 토론

(1) 자본주의는 1914년 이후 쇠퇴에 들어섰는가? (1차 토론)

2) "The Accumulation of Contradictions or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Rosa Luxemburg," *Revolutionary Perspectives*, 43호(2007년 여름).

최근 ICC의 자본주의 쇠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이 발표되어 자본주의의 쇠퇴 문제를 다시 토론하고 논쟁하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 *A Free Retriever's Digest* (2020년 vol. 6)는 'ICC의 오류' 라는 제목의 C.Mcl의 글을 싣고 이를 토론하는 세 개의 블로그 토론을 잇달아 게재하였다.³⁾

C.Mcl의 글은 ICC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로 위장해왔던 모든 국가의 자본주의 본질로,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른바 '좌파' 조직의 제도적 통합, '혁명적 의회주의' 의 낡은 성격, 임금노동자의 자기착취 같은 자주관리 등의 정치적 입장을 비판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ICC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론적 틀은 쓸모없고, 사실과 모순되며, 역사유물론에 따르면 시대착오적이고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초월하고 있기에 객관적 기초가 없는 설명의 혼합으로 실제로는 관념적 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⁴⁾

그 결과 위험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어 1914년 이래 실질적 개혁을 획득하기 위한 즉각적 투쟁의 불가능성, 20세기 실질적 국가발전의 불가능성, 인간 본질과 도덕(관념)적 개념, 노동계급의 객관적 분화를 고려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ICC의 기본입장은 진화(민족문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917~1923년 봉기 운동의 패배 이후 개량주의 세력이 차지한 위치 등)에 기초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ICC 입장에는 젠더, 인간 본질, 자연과 관계, 신기술, 프롤레타리아트 구성과 변화, 이행기, 생태 등의 수많은 문제가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 글은 1914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하여 1부에서는 생산력 제동인가 아니면 가속인가의 문제를 절대적, 상대적 부의 생산, 인구, 소득분배, 노동계급의 발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통계적 경험치로 비교하면서 생산력의 증대를 분석하고 있고, 2부에서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1914년 전후로 구분하여 임금, 노동시간, 착취율, 실업, 노동조합 본질과 기능으로 세분하여 통계분석을 하며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⁵⁾

C.Mcl의 글은 첫째, ICC의 혁명적 맑스주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개량주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둘째, 의회주의, 노동조합주의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ICC의 입장과 기본 입장이 다르다는 점, 1914년의 전후 시기의 통계수치 비교는 자본주의 쇠퇴론 본질과 크게 연관이 없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토론은 내가 <혁

3) *A Free Retriever's Digest - An internationalist Articles Selection & Review*, 5권 1호 (January - March, 2021). C.Mcl의 글 출처는 다음과 같다: Les impostures du CCI (Courant Communiste International) <http://leftcommunism.org/spip.php?article468&lang=fr>. Translation: H.C., September 2020. Reviewed by the author. Latest corrections: 17 November 2020. 그리고 '1914 이후 자본주의는 쇠퇴에 들어섰는가?' 의 블로그 토론은 다음에 실려 있다: *A Free Retriever's Digest*, November 2020.

4) C.Mcl의 글, 6쪽.

5) 윗글, 7~27쪽.

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에서 정리한 자본주의 쇠퇴에 대한 코뮤니스트 좌파진영 내의 토론과 전혀 다른 개량주의 세력의 문제 제기일 수 있다.

그러나 C.Mcl의 글에 대한 세 가지 토론 글과 C.Mcl의 답변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⁶⁾

첫 번째 토론자 Link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Link는 C.Mcl의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경험적 사실의 제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ICC가 비자본주의 시장에 의존하는 룩셈부르크의 축적이론에 간혀 있음을 지적하지만, 이것이 쇠퇴의 개념을 거부하거나 ICC가 오류라는 제안으로 이끄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룩셈부르크주의는 1960년대 세계발전의 맥락에서 정당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와 세계인구의 지속적 성장의 확장된 시기만 유효하다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나아가 룩셈부르크주의의 오류가 제국주의와 세계시장의 완결, 그리고 자본주의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쇠퇴하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이 개량주의, 민족문제 등을 거부하는데 위해(危害)를 가하는 정치적 탈선으로 이끈다고 인식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쇠퇴는 그 스스로 경제 위기가 아니지만, 자본주의 내의 모순이 점점 커져 위기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발전이다. 다시 말해 쇠퇴는 생산력 성장에 대한 족쇄이지 그 하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토론자 Fredo Corvo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다른 나라 코뮤니스트 좌파의 역사적 공헌을 종합하는 ICC의 영웅적 노력의 필요한 수정에 C.Mcl의 글이 이바지하지만, 실제 계급투쟁에 공헌하고 입장을 취하는 실제 분석 작업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그의 최근의 출판물이 중동으로부터 인도차이나까지 그리고 코스타리카로부터 리비아에까지 프롤레타리아트를 사로잡은 제국주의 전쟁의 일반화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C.Mcl은 자본주의의 지속적 생존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생산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본주의 쇠퇴 이후의 ICC를 반박하는 목적을 위해 1914년 ‘전과 후’라는 장기적 관점을 따랐지만, 쇠퇴이론의 본질인 전쟁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Fredo Corvo는 자본주의도 모든 생산의 역사적 양식같이 상승, 최고점, 하강이라는 곡선에 따라 발전하는가를 되묻고, 맑스와 엥겔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맑스가 「프랑스 내전」 초고에서 ‘코뮌’이 프롤레타리아 경제를 실행할 유일한 형식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ICC가 보기에 ‘레닌주의자/트로츠키주의자’에게

6) 블로그 토론, Link, November 6, 2020, 13~16쪽.

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들을 ‘스탈린주의의 맑스’로 비난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제국주의 전쟁을 통한 세계재분할이 이루어지고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의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는 지속한다고 전망하면서, 1914년 전후가 아닌 경제, 인구 수치의 분석이 중요하고 자본과 노동의 ‘실질적 발전’에 따라 전쟁, 재건, 위기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셋째, 첫 번째 토론자였던 Link는 2020년 11월 13일에 추가토론을 블로그에 올린다. 그는 C.Mcl의 텍스트에 대해 자본주의가 아직도 부흥기에 있다는 말인가를 묻고 20세기 착취율 통계가 전체로서의 세계 경제의 대표치가 아닌 영국의 통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은 쇠퇴(decadence)를 위축(obsolesce)으로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1914년 제국주의 전쟁은 자본주의의 전환점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자본주의 위기의 어떤 경제이론도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변화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어서 1914년 후 이 시기의 변화가 세계시장의 완결,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그리고 민족경제와 국제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자본주의의 출현, 나아가 ‘혁명과 전쟁’의 시대라는 룩셈부르크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결론짓는다.

넷째, 세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C.Mcl의 답변(2020년 11월 15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자본주의가 중국과 인도(더 일반적으로는 아시아 대륙)를 통합했을 때 자본주의가 쇠퇴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1945년 안톤 판네쿱의 분석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의 하강국면을 시작으로 자본주의가 서서히 쇠퇴 시기에 들어섰다는 자신의 입장을 새롭게 제시한다.

또한, 1914년 전후를 비교하는 실증분석을 통해 ICC를 비판한 것이 쇠퇴의 개념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1차 세계대전이 자본주의의 삶에서 중요한 단계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발 물러선다. 그리고 코뮤니스트 좌파가 방어하는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만, ICC처럼 관념적 틀이 아닌 실제 자본주의의 진화에 대한 일관된 분석을 근거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1914년 이후의 쇠퇴이론은 세계와 노동계급의 역사적이고 즉각적 이해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2) 자본주의 쇠퇴 문제에 관한 토론 (2차 토론) (2021년 3월, *A Free Retriever's Digest*)

앞의 토론(1) 이후 2차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는 Anibal & materia인데, 그의 토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⁷⁾ 현재 논쟁에 관한 한 자본주의 쇠퇴는 유지될 수

있는 틀이 아니라고 보는 Aníbal & materia는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Fredo Corvo, 21세기 초에 쇠퇴에 들어섰다는 C.Mcl, 그리고 자본주의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미래시기로서 쇠퇴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이 있다고 정리한다.

그는 발전되는 이 논쟁의 맥락을 다음 몇 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첫째, 위기-전쟁-재건-위기의 순환이 타당한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정확한 접근이 되려면 중국, 동남아시아 영역이 자본주의로 통합된 후 쇠퇴로 들어섰는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점.

셋째, 쇠퇴이론은 필요한데 과거의 오류와 맑스주의의 부적절성과 약점은 쇠퇴이론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쇠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견해이지만,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가 하는 것은 전략, 전술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

다섯째, 쇠퇴 시기 이전의 가정적인 혁명 과정에 직면했을 때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들은 그 조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

여섯째, 요약하면 1917~23년의 혁명적 물결의 경험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적절한 조건을 발견하지 않는 혁명 과정에서의 참여를 피하도록 한다는 것.

일곱째, 소련의 경험은 대리주의적 자본주의(프롤레타리아독재가 코뮤니스트 당독재라는데 종합되어 있는)가 코뮤니스트당과 노동자평의회 사이의 나쁜, 유명무실해진 접근임을 되새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여덟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대조되고 경쟁하는 체제로 자본주의 내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Fredo Corvo는 이미 첫 번째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자본주의는 끝나고 있는가, 그러나 어떻게?」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입장을 추가하고 있다.⁸⁾ 그는 중국의 자본주의로의 통합이 자본주의의 쇠퇴

7) Aníbal & materia, February 5, 2021 (Translation of March 2021) A Free Retriever (2021년 3월 14일).
<https://afreeretriever.wordpress.com/portfolio/discussion-contributions-on-the-question-of-capitalisms-decadence/5/>

8) Fredo Corvo, January/March 2021
A Free Retriever (2021년 3월 14일)

<https://afreeretriever.wordpress.com/portfolio/discussion-contributions-on-the-question-of-capitalism/>

로 이끄는가를 묻고 자본주의 생존이 일을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그 당시 맑스의 ‘산업예비군’ 또는 ‘잉여인구’의 개념) 판네크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몰락한다는 견해에 반대하고 ICC가 의존하는 룩셈부르크의 시장포화론을 비판한다.

또한, 그는 사회민주주의의 생산력 발전의 의미가 기술적 의미(기계, 설치물 등)로만 이해했다는 한계, 불세비즘에 따른 생산력 발전도 일면적 기술적 개념에 머물렀고 모든 유파(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가 자본주의 개념을 사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단계에 한정하고 동구 블록,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을 사적 자본주의의보다 우월한 약한 자본주의로 보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일깨운다는 판네크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문제로 제국주의 전쟁이 세계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잉여노동의 재분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 전쟁은 위기, 환경, 보건의 쟁점과 함께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삶의 주요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쇠퇴이론이 더는 차지할 위치가 없는데, 현실과 반대될 뿐 아니라 맑스주의의 이론적 기초에도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4. 결론 - 자본주의 쇠퇴론의 토론이 남긴 과제

자본주의 쇠퇴론의 중심에 있는 ICC는 2020년 12월 「팬데믹과 노동계급」에 대한 논쟁을 온라인(영상) 토론회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ICC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시대의 일반적 특징으로 부흥(상승), 쇠퇴, 그리고 해체로 규정하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성장하지만, 뿌리로부터 썩어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근본 모순, 역사의 주요 동력으로서 계급투쟁을 무시하지 않지만, 혁명으로 전복하지 않으면 상호 유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⁹⁾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자본주의의 황폐한 조건」이라는 글에서는 커뮤니티 혁명이 가능하다는 보다 적극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¹⁰⁾ 그러나 「독자 편지 :

sms-decadence/4/

9) ICC, Netto (2021년 2월 20일)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980/icc-virtual-discussion-meetings-contacts-december-2020-lively-debate-pandemic-and>

10) ICC, Sylver (2021년 2월 17일)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983/covid-19-pandemic-reveals-dilapidated-condition-wor>

왜 ICC는 ‘역사적 경로’의 개념을 포기했는가?」라는 글에서는 ICC의 기존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¹¹⁾ ICC는 맑스의 방법과 맑스주의 운동을 채택해왔고 그에 따라 1989년 동구 블록의 몰락 이후 ‘역사의 경로’ 개념이 철 지났다고 판단하고, ‘세계전쟁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가 아니라 ‘일반화된 혼돈에서의 인류의 파괴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다 라고 결론짓고 스탈린주의 체제의 몰락이 마치 ‘코뮤니즘의 몰락’이라는 부르주아지의 캠페인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과 전투성이 약화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근에 제기된 자본주의 쇠퇴에 대한 논쟁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이들 입장이 코뮤니스트 좌파진영의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나의 추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쇠퇴론 논쟁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잠정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ICC가 의존하는 룩셈부르크의 ‘시장포화론’만으로 자본주의 쇠퇴를 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자본주의 시장과 자본주의 시장의 구획은 1차 세계대전의 시점과 그 이후 비자본주의 시장이었던 식민지국가들이 자본주의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1960년대 이후는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전쟁, 금융자본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봉기와 생산관계의 모순 심화가 생산력 발전의 족쇄가 되는 역사적 계기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아직도 세계전쟁인가 세계혁명인가의 문제는 1차 세계대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며,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의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의 전망 아래에서도 더욱 유효하다는 코뮤니스트 좌파의 기본입장은 더욱 원칙적인 맑스주의 방법과 맑스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넷째, 몇몇 토론자들이 제기한 판네킨의 입장, 즉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해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코뮤니스트 좌파가 되새겨야 할 혁명원칙임을 상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자본주의 쇠퇴론은 역사적 경로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총체적 틀로 분석하고 코뮤니스트 사회를 전망하는 코뮤니스트 좌파의 역사적 책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ld-capitalism

11) ICC, Sofiane (2021년 3월 5일)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982/readers-letter-why-has-icc-abandoned-concept-historic-course>

도움 받은 글

오 세철(위고 지움), 「좌익공산주의 : 혁명적 맑스주의 역사와 논쟁」(과천: 빛나는 전망, 2008).

오 세철, “옌긴이의 글,” 국제공산주의흐름, 「자본주의의 쇠퇴」(오 세철 옮김)(과천: 빛나는 전망, 2009).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코뮤니스트」, 12호(2020년 11월).

카우츠키, 카를, 「에르푸르트 강령」(서 석연 옮김)(서울: 범우사, 2003).

Marx, Karl, *Grundrisse*, in K. Marx and F. Engels, *Collected Works* (Lodon: Lawrence & Wishart, 1975, Vol. 29).

「코뮤니스트」,

A Free Retriever's Digest,

Internationalist Communist

International Review,

Revolutionary Perspectives.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기조강연

[임 상헌 (경희대)] | 사회

전환의 시대, 원천서 배우고 미래에서 행한다 | 강연

[조 인원 (경희대)]

전환의 시대, 원천서 배우고 미래에서 행한다

조 인원 / 경희학원 이사장

반갑습니다.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원 여러분과 「현상과인식」을 이끌어 오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학의 위기, 시대의 위기를 고민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물녘의 대학, 돌아봄과 내다봄.”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마음에 두면서 이야기 하나를 보태려고 합니다.

학술대회 취지에 저는 많은 공감이 갑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운위되는 대학의 위기.”

취지문의 진술처럼 대학은 특정 이익의 전유물일 수 없습니다.

그 이익이 시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진리’ ‘인간’ ‘미래’를 향한 대학의 소임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취지문에 언급된 베버와 뒤르케임의 문제의식은 중요해 보입니다.

학문함은 현실의 도구일 수 없습니다.

자체가 소명이어야 합니다.

교육의 근본 목표도 진리와 인간의 미래를 지탱하는 시민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산업사회의 세파가 드세지면서 대학의 본령은 표류했습니다.

‘절대 진리’처럼 여겨져 온 산업시대의 가치와 좌표.

그 속에 꽃피던 경제성장과 현대문명.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학의 가치는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영혼을 잃어가는 대학’에 관한 위기의식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대학의 위기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변화를 향한 ‘패러다임 순간(paradigm moment)’의 관점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본령을 되찾자’란 문제의식과 함께 미래를 위한 ‘발상 전환’과 ‘대학의 공적 책무’라는 시대의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역사의 분기(分岐)에 처한 결정적 순간엔 그런 인식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

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 “전환의 시대, 원천서 배우고 미래에서 행한다” 는 그렇게 보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전환의 시대: 산업문명의 어제와 오늘

지난 300년,

인류사회는 전례 없는 신화를 써내려 왔습니다.

현대사회, 현대문명이란 신화입니다.

그 역사를 구성했던 많은 요인들.

복잡해 보이는 그 근저엔 체제의 축을 이룬 일관된 서사가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희망이다.’

‘성장이 미래다.’

보수와 진보, 좌우를 초월해 존재하던 이 짧고 강력한 메시지는 현대사회의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나라의 발전궤적을 만들었고, 사회문화 창달과 정치의 향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의 이성과 가치, 욕망을 규정하는데도 시대의 진리처럼 작동해왔습니다.

‘시대의 진실.’

‘거스르기 힘든 산업문명의 거대한 흐름.’

그 서사와 역사를 만든 관념의 세계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제 짧은 생각으론 이렇습니다.

현대사회가 이룬 지구 산업문명의 거대한 물결 이면엔 삶의 근저를 이룬 사유, 과학적 사유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질세계의 선형적 인과(因果).

세계 내 그 인과의 치환(fungibility) 가능성.

물질과 물질, 물질과 세계를 관류한다고 믿어온 현대의 관념이 산업문명의 팽창과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경쟁 관념이 있었지만, 산업혁명 전야에 태동된 뉴턴의 ‘자연의 보편법칙’ 에 관한 생각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초미립자와 질점(mass points)으로 이뤄진 원자의 특성과 기계론적 상호작용에 입각한 인과론.

이에 대한 믿음이, 과학철학자 어빈 라즐로(Ervin Laszlo)의 표현처럼, 뉴턴보다 더 뉴

턴처럼 생각하던 후학들의 영향으로 물질주의와 기계론적 사유로 승화했습니다.

현대인은 그 인식의 수혜자입니다.

물질주의와 성장경제의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은 지난 수 세기 문명사의 화려함만큼이나 큰 폐해를 남겼습니다.

근현대사의 여정과 함께했던 인간소외의 문제.

확장된 이윤과 권력의 편중 문제.

민주주의와 정치사회적 갈등.

수많은 눈물의 역사, 피의 역사를 부른 현대의 뿌리 깊은 경제와 사회, 정치 문제는 산업화의 도정과 함께했습니다.

산업혁명 300년.

누적된 역사의 추동력과 함께 산업화 담론은 근래에 들어 또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흔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의 미래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은 거대한 자연 파괴를 불렀습니다.

급증하는 세계 인구는 그 파괴의 속도를 유례없이 가속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이익과 편익을 위해 급증한 화학물질도 생명 다양성의 위기, 대규모 종의 멸종을 초래했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The Sixth Mass Extinction) 사건’ 이 지금 학계의 큰 관심사입니다.

인류 역사의 단 1%.

그 1%에 해당하는 시공의 압축혁명이 인간의 유일한 안식처인 지구의 운명,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 지구행성의 급변하는 기후체계는 그 우려와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당사국총회(COP 26, Conference of Parties 26)’ 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미래세대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텐버러(David Attenborough) 경의 열정적인 기조연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만 년, 인류문명의 진전을 가능케 했던 안정된 기후체계가 혼돈에 빠지면서 “잔인하고 예측 불허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는 현실 인식을 전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현장의 기립박수를 받은 그 연설의 배경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지구행성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환경오염.

매일 150여 종이 멸종을 거듭하는 지구의 생태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40만 개 분량의 에너지를 연일 뿜어내는 탄소 문명과 이로 인한 지구과열 현상.

극적인 해동 현상을 보이는 북극의 바다 얼음과 전 지구의 빙권(氷圈).

혼돈에 처한 기류와 해류...

‘급격하고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abrupt and irreversible climate catastrophe)’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선 초강경 어조의 ‘경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서 심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인류사회에 Code Red를 발령합니다.’

‘화석연료에 조종을 올려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지구 운명의 날(Doomsday)’을 말하는 것이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마치 시민운동 현장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유엔과 교황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원천과 미래

카뮈는 ‘인간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그것을 인간의 일로 환원하는 일, 그것에 인간의 인장으로 봉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아인슈타인도 칸트의 말을 빌려 유사한 고뇌를 토로했습니다.

세상의 불가사의한 경험은 ‘밤하늘의 별을 이해하는 일’ ‘인간이 도덕률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개별적 삶의 체험 현장에서 스스로 갖게 되는 실존적 세계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진리와 도덕의 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인간의 마음.

사람이 사람인 이상 이 모든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시대가 정한 인식의 폐쇄회로에 갇히면 인류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대적 자아 관념에 갇힌 생각의 위기.
산업문명에 매몰된 세계관의 위기.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 성장을 꿈꾸던 역사의 흐름이 유례없는 삶의 위기, 문명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문명의 미래를 말할 때 저는 이런 문구를 인용하곤 합니다.
‘인간이 신이 아니면 인간은 인간도 될 수 없다.’
‘인간은 신처럼 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신처럼 돼야 한다.’

‘신처럼 돼야 한다.’

무신론자인 저에겐 신은 ‘절대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초능력’ 범주도 아닙니다.
현대 우주론이 추정하는 138억 년 전 대폭발의 원천, ‘무의 요동(無의 搖動, fluctuation of nothingness)’에 관한 ‘그 무엇’입니다.
무의 요동.
‘이 모든 것’의 기원에 갖든 의미는 무엇일까.
부질없어 보이는 이 질문엔 인과의 고리를 끝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기원의 신비와 문명사적 사유의 출구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고대 철학에 갖든 ‘축의 시대’를 말했습니다.
인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기원전 동서 철학과 정신세계에 주목하면서,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성찰했습니다.
‘태초의 혼돈과 빛’ ‘경계의 초극과 불성을 향한 궁극의 물음.’
텔포이 신전에 아로새겨진 인간의 숙명적 과제 ‘자신 알기.’
힌두철학의 ‘참나’와 우주 깊은 곳을 가리키는 물질·비물질의 근원인 ‘공(空)의 세계.’
‘나는 누구이고 또 세계는 무엇인가.’
이에 관한 큰 사상의 의미를 숙고하는 일은 시대를 넘어 유효할 것입니다.
문명의 출구를 찾아 나서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문제를 야기한 시선으로 결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 전환의 활로가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활로 찾기엔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유와 사상의 자유가 시대정신으로 굳게 자리 잡은 오늘의 시점에 더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의 방안은 다양해진 정신사의 흐름에서 ‘역사적 합류(historical

confluence)’의 과정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단한 사유 세계를 넘어 공유할 수 있는 철학과 세계관을 끝없이 탐색하는 일.

그 일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함께 찾아 나서는 길이 새로운 출구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 들어 ‘양자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초엽부터 진전된 이 세계에 대한 탐색은 물질과 비물질의 중첩 상태, 인간 의식의 결정성을 말해왔습니다.

물질이면서 파동으로 ‘관찰’되는 미립자의 세계.

그 세계의 초연결성과 중첩 가능성.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된 그 ‘가능성’은 시공을 초월해 존재하는 ‘본질적이고 (inherent)’ ‘즉각적인(instant)’ 상태 중첩의 의미를 전합니다.

물리의 세계에서도 ‘인간 의식’과 ‘바라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물리적 성장과 팽창의 역사가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s)”으로 다가선 이 시대엔 인간, 자연, 세계의 연결과 중첩 가능성에 관한 인식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사상과 철학, 이론, 종교의 종합과 융합을 모색하면서 문명의 결실을 이어가고, 전망되는 미래를 헤쳐 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소명은 학문함의 소중함과 탁월성을 최우선 가치로 받드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이 걸어가야 할 시민의 길을 밝히는 일 역시 대학의 또 다른 소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문명이 만들어낸 성취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문제를 전일적 안목에서 성찰하는 노력입니다.

부분적이지만, 이에 관해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미래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어떤 미래일지.

우리의 앞날이 답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의 물음입니다.

미래는 어제와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간의 성취와 한계, 오늘의 인식과 실천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미래는 미래로부터도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 것인지.

그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실천할지.

이에 대한 성찰과 모색이 미래역사의 반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상상과 실천의 과업을 ‘미래의 회상’ 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의 현실을 이끌어내는 일.
지금과 다른 경로를 찾아 나서는 일.
그 일이 이 긴급한 시대의 과업이자, 대학의 본령과 함께 교육기관이 숙고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또 다른 과제?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몇 차례 망설임을 거듭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최고 의사결정자 빌 넬슨(Bill Nelso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 속에 담긴 그의 인간관, 문명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 두 주 전 버지니아대학교 정치연구원이 넬슨 원장(Administrator)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미 국가정보국장 명의의 특별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지구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확인 항공 현상(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흔히 ‘UFO 목격 사건’ 으로 알려진 일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004년경부터 수백여 건의 UAP 사례가 군 당국에 의해 보고되고, 오바마 전 대통령과 CIA 전 국장이 최근 그 ‘물리적 실체’ 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우린 그게 뭔지 모릅니다.
계속 조사하는 일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저 밖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문명사회를 이뤘는지...
제 개인적 견해는 우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고, 복수의 우주를 말하는 이론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인간과 같은 생명 형태(life form)와 조직된 문명을 갖고 있는 지구가 유일하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미 항공우주국.

그 기관 책임자의 답변이 마치 인간 존재와 실존의 한계를 성찰하는 철학자의 고뇌처럼

럼 들립니다.

행간에 묻어 있는 인간 존재에 관한 그의 생각이 외계의 지적 생명체, 우리 우주의 또 다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큰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식의 지평을 한껏 넓혀야 하는 의미심장한 역사의 경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인문, 사상과 철학, 종교와 실천..

그 세계의 새로운 종합과 융합을 통해 고양된 인식의 실천적 지평을 열어가는 일이 큰 ‘시대적 의미’ ‘미래사적 의미’ 를 갖습니다.

지난주 클래스고 시위 현장에서 한 어린 소녀가 든 피켓 문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구니까? (If not you, who?)”

“지금 아니면 언젠까? (If not now, when?)”

“지금 행동해주세요. (Act now.)”

이 시대 미래의 책무를 떠안아야 할 기성사회와 정치, 교육기관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문구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Session I

[임 상헌 (경희대)] | 사회

대학의 소명 | 1

[박 영신 (연세대)]

대학의 존재 이유 | 2

[최 대권 (서울대)]

지성사로 본 일본의 대학과 비판적 지식인 | 3

[조 관자 (서울대)]

대학의 소명

박 영신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1. 앞에

오늘의 대학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곳곳에서 대학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인구 감소 추세를 들먹이며 학생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고심 끝에 대학들이 벌써부터 중흥하여 연합체를 만들어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하면, 대학의 사회 적절성에 대한 자기 의심에 빠져 대학생들을 자격증 따기와 맞춤형 교육으로 몰아가고도 기이한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대학은 현실을 피하지 못한다. 현실 밖에 있지 않고 현실 안에 있다. 현실 조건에 에워싸여 현실과 함께 한다. 하지만 대학은 현실의 조건에 묶여 ‘자기 참모습’을 내팽개치지 않는다. 대학의 탈을 쓴 거짓된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의 뜻과 길을 다시금 헤아려 스스로 추스른다. ‘대학의 문제’란 끊을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온 「현상과인식」/한국인문사회과학회가 이 해 가을의 학술모임을 열면서 던졌던 물음처럼, 대학의 밑바탕 문제를 살펴야 하고 ‘위기’라 하는 그 밑뿌리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아래의 글은 이에 대한 화답이다. 작은 ‘돌아봄’ 이고 ‘내다봄’ 이다. 대학은 현실 안에 들어서 있다. 어찌지 못하는 현실의 한 부분이고 조건 지워진 현실의 사회 항목이다. 하지만 대학은 현실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현실의 조건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돌파한다. 대학다운 대학의 ‘자기 참모습’ 이다. 이러한 생각의 줄기에 이어 오늘날의 대학 모습 하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학의 일

가을을 맞을 때면 마음에 떠오르는 대학이 있다. 비텐베르크대학이다. 이제로부터 5백년 전 10월 마지막 날 이 대학의 교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의 횃불을 들었다. 개혁의 동지 칼슈타트와 멜랑히톤이 그와 생각을 같이했다. 칼슈타트는 개혁을 더 급진화하기 위하여 대학을 떠나 평범한 교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개혁 운동을 일구고자 했다(Zachman, 2007: 25; Bainton, 1995: 81-82, 198-201). 이해할 만한 결단이다. 대학 강단에 오르는 교수의 삶이 너무도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우월 의식에 그 자신 더 이상 휩싸여 있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의 급진성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가 걸고자 한

길은 귀하다. 대학과 인민 일반 사이에 쉽게 오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지 않아 소통의 장벽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으니 더욱 그러하다. 개혁 운동은 대학 안팎으로 널리 번져야 했고 그렇게 벌어져야 했다. 하지만 대학에 남은 멜랑히톤의 개혁 지향성이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분명 비텐베르크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일상인을 낮춰보고 우월감을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지만 대학 안에서는 다급한 개혁 운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거나 대학인의 삶이란 무가치하고 무력하다고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는 루터의 길을 따라 그가 생각한 바른 믿음을 밝히고 지키며 그 믿음을 짜임새 있게 적어 널리 알리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서 있는 개혁의 뜻도 분명히 인식해야 했고 그가 맞서야 했던 로마가톨릭교회가 저질러온 온갖 부패의 행태를 명쾌히 분석하고 그렇게 된 원인을 밝힘과 아울러 교회 체제의 정체를 꿰뚫어 캐보아야 했다. 이러한 깊은 지식과 넓은 지식을 두루 파헤치는 일이 대학 안에서 이루어졌다. 대학은 큰 배움터였다. 대학에 들어오는 자들 또한 대학에 들어와 대학의 사람들이 갖고 닦아온 깊고 넓은 지식과 만나 자신의 생각과 삶, 자기의 됃됨이를 되새겨보는 배움터이기도 했다. 이는 대학의 오래된 정신 전통이었다.

이러한 대학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대학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교회와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였다. 사회의 두 기둥이 계속 버티어 서 있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했던 만큼 대학은 거기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대학은 이러한 데서 멈춰 있지 않았다. 현실의 ‘요구 충족’ 그 수준을 넘어 삶의 문제 상황을 파헤치고자 했다. 교회가 엄연히 지켜야 할 교리가 있고 신앙 전통이 있음에도 이 모두를 방기한 채 면죄부를 팔아 치부하는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회의 타락을 문제시하여 발언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려 듣기보다는 이들의 입을 막아 발설하지 못하도록 혹독하게 박해하고 정죄했다. 비텐베르크대학의 개혁자들은 중세 말부터 만연하기 시작한 교회와 성직자의 부패를 보고만 있지 않고 그 이전의 순수성을 되찾고자 믿음의 본바탕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갔다. 연구에 연구를 더하였다. 성경의 빛으로 당대의 교회 문제를 비춰보고 성경의 해석을 비롯한 모든 영역을 독점해온 교회의 권위를 질문할 수 있었다. 온갖 치부가 가감 없이 드러났다. 신앙의 원리가 교권 세력의 유지를 위하여 무참히 왜곡되어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해성사니 면죄부니 미사 따위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미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공했다(박 영신, 2017). 면죄부로 팔아 벌게 된 돈이 비텐베르크대학의 수입원이기도 했던 만큼 면죄부 비판은 대학에 손해를 끼칠 것이 뻔했지만 루터는 이런 일로 주춤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탈리아 로마 중심의 교권 세력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르만 민족주의의 반감이나 정서에서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손실에도 불구하고 루터 연구가 베인턴이 말한 것처럼(Bainton, 1995: 55-56) 교중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끝없는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워야 하고 “영혼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할 책임이 있다고 믿고 이를 감당코자 했다. 그와 동료 개혁가들은 고해성사와 성인 숭배에 대한 비판은 물론 연옥설과 돈과 재산으로 사고팔던 면죄부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퍼부으면서 로마가톨릭교회의 교리와 부패를 파헤쳐 교회 개혁의

정당성을 체계 있고 정교하게 논리화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학문하는 연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들 대학인들이 기독교의 본래 가르침과 로마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사이에는 건성으로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모순과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드러내어 외쳐 가르쳤다. 이에 터하여 이 개혁가들은 거짓된 교회를 바꾸어 참 교회를 되찾아야 한다는 도덕 이상을 내세워 거대한 교회의 기득권 체제에 도전했다. 루터는 기득권 교회를 재구성해야 할 개혁 운동을 절감하고 이를 앞에서 이끈 운동가가 되었다. 교회의 위선을 벗겨야 한다는 만만찮은 결의를 실천코자 하여 함께 개혁의 대열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루터, 1993). 대학은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가톨릭교회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지성 공동체의 소임을 수행했다(Ozment, 1980: 204-222). 그렇게 대학이 진리의 파수꾼이 되었다.

도이칠란트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비텐베르크는 변방에 자리한 작은 도시였다. 종교개혁 당시 거주민은 2,500명인데 학생은 1,500명~2,000명 사이였으니 이름에 걸맞은 대학 도시였다. 학문이 주목거리가 된 루터는 이 신생 대학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을 만났고 이들과 함께 ‘개혁 학문’을 펼치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¹²⁾ 그가 앞장선 종교개혁의 학문 지향성은 유럽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에 이끌려 수많은 학생들이 비텐베르크로 찾아들었다(George, 2011: 172-173). 덴마크를 비롯하여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도 유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여기서 공부한 다음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 개혁 운동에 불을 지핀 선구자가 되었다(Lande, 2007: 130-132). 임 철규 교수가 상기시켜 다시금 보게 되었지만,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대학에 주목하여 덴마크 왕자 햄릿이 친구 호레이쇼와 함께 비텐베르크대학에서 유학한 학생으로 설정해둔 것은 전혀 엉뚱하지 않다. 다만 지리나 역사 때문이 아니다. 햄릿의 복수 결심과 기획을 늦추게 된 원인을 인간 행위의 최종 잣대는 더 이상 교황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이라고 본 루터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해석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임 철규, 2016: 특히 442-455). 말하자면 신부에게서 해답을 구했던 기존의 의식 행태가 비텐베르크대학의 학문 정신을 만나면서 깊은 내면의 도전을 받고 뒤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자기의 복수 행위를 되새기며 망설이게도 되었다는 풀이이다.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의 권력 체제에 대한 비판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때의 교회와 교회 의례는 일상인의 삶과 뗄 수 없게 서로 겹치고 갈라놓을 수 없게 녹아 있었던 탓에 이 운동은 다만 교리와 성직 계급에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민 일반의 삶과 의식과도 맞부딪쳐 혼란을 자아내고 이를 교란했다. 개혁의 생각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타격을 받고 휘둘렸다. 마침내 유럽 온 땅에 도덕 차원의 개혁을 불러일으켰다. 이어마어마한 개혁 운동의 중심에 비텐베르크대학이 있었고, 이 대학이 개혁 운동을 이끈 길잡이였고 지팡이였다.

12) 이 흥미로운 자료는 벤디스가 ‘프로테스탄트 윤리’ 논지를 일본의 역사 경험에 이어 논하기 위하여 끌어 쓴 문헌(Herbert Schoeffler, *Wirkungen der Reformation*, 1960)에서 다시 따온 것이다(Bendix, 1971: 203). 이 문헌에는 유럽 대륙과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에 대한 독특한 비교 분석의 시각도 들어있어 베버 논지를 둘러싼 또 다른 해석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덧글: 204-206).

3. 대학의 뜻

잘 알려진 대로 교육은 ‘사회화’의 뜻을 맡는다. 이는 사회학의 창건자 반열에 올라서 있지만, 사회학을 가르치기에 앞서 교육학을 가르쳤던 뒤르케임의 생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화는 집안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회화는 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무이다. 이 때문이다. 교육은 사회의 요구에 맞추고 따라야 한다. ‘기계처럼’ 엮인 결속 관계 밑에서는 그러한 결속 관계의 ‘집합 가치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유기체처럼’ 엮인 결속 관계 밑에서는 그러한 결속 관계의 ‘집합 가치 의식’을 넣어주어야 한다.¹³⁾ 교육을 통하여 모두가 좁은 자기의 틀을 벗어나 더 큰 사회의 틀에 대한 감수성을 익혀 개인이란 사회에 속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뒤르케임은 사회체제의 유지에 관심을 쏟은 ‘보수주의’의 연구 노선을 걸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는 통념에 지나지 않는다. 뒤르케임의 학문 관심은 사회 체제의 지지와 옹호에 매여 있지 않다. 그가 이해하는 ‘사회’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사회’라는 이 낱말은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뜻을 지닌다. 일찍이 뒤르케임 해석의 새 차원을 연 벨라에게서 우리가 배운 바다(Bellah, 1973: ix; 박 영신, 2008). 뒤르케임이 말하는 ‘사회’는 현존하는 다양한 집단 자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집단이라면 당연히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자체의 이상을 뜻하기도 한다. 궁극의 뜻에서 사회란 자체의 존재 이유가 되는 ‘도덕 이상’을 이른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뒤르케임은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절대화하여 이상화하지 않는다. 그것이 표상해야 할 ‘이상’에서 벗어나면 이를 바로잡아 고결한 뜻에서 ‘순화’하기 위하여 현존 사회를 타파하고 폐기하여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풀이로 나아간다. 바로 이 점을 마음에 새겨 벨라는 뒤르케임이 말하는 ‘사회’란 ‘경험 과학’에서 통용되는 뜻보다는 ‘고전 신학’에서 쓰는 뜻에 더 가깝다고 풀이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 구성원이 협소한 자기의 우물에서 벗어나 더욱 큰 삶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세계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그의 사회학 생각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의 이념 성향을 선부르게 보수주의자로 규정해온 틀에 박힌 생각과는 달리 사회의 혁파를 염두에 둔 ‘변혁주의’ 사회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3) 내가 뒤르케임이 쓴 프랑스 말 ‘conscience collective’를 ‘집합적 가치 의식’이라고 옮겨놓은 것이 1978년이었으니, 오래된 일이다(박 영신, 1978). 그의 사회학에 대한 우리나라 학계의 비좁은 생각을 바로잡으려는 뜻으로 뒤르케임의 학문 진수는 ‘도덕성’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자 하여 강의에 열을 올리며 쓴 글에서였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주로 집단/집합 ‘의식’으로 옮겨놓고 있어서 이 속에 담긴 ‘양심’이라는 뜻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 사회 과학의 생각에 어울리게 ‘가치 의식’이라고 표현코자 하였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적어둔 윗글(230, 그리고 232의 달음 9) 볼 것.

이처럼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도덕 이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도덕 이상이 사회의 존재 이유이다. 사회에는 엇갈리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대립한다(Durkheim, 1977). 개인들 사이에, 집단들 사이에 갈등은 멈추지 않고 일어난다. 이 도덕 이상을 사회 구성원들이 표명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가 하나로 뭉쳐 통합을 이룬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한다. 행위를 규제하고 제재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 이상에서 나오는 도덕 기준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뒤르케임을 다만 좁은 뜻에서 기능주의자든가 갈등론자라고 갈라보는 것 또한 어설프다(Saha, 2001: 29). 그는 이 모두이고, 그가 그토록 중시한 ‘도덕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지울 수 없는 역사 현실이라고 보면 그는 근본의 뜻에서 갈등과 투쟁으로 사회를 이해한 사회학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¹⁴⁾ 실제로 그는 결단할 때가 오면 서슴없이 도덕 이상을 저버리는 다수와 맞서 그 다수와 쟁투하며 갈등했다. 이는 그가 생각한 피할 수 없는 지성인의 책임이었다. 드레퓌스 사건으로 나라가 침예하게 대립할 때 그는 지켜야 할 도덕 이상을 위하여 갈등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 싸웠다(뒤르케임, 1979/1980; 박 영신, 윗글).

현실을 뚫고 그 너머로 뻗쳐올라야 할 도덕 이상을 내세운 뒤르케임의 생각은 뜻밖에도 또 다른 사회학의 창건자 막스 베버의 생각과 어우러진다. 그들을 둘러싼 문화 전통과 정치 상황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세운 사회학의 방법론도 서로 달랐지만, 현실을 인식하는 마음가짐에서는 함께 만나고 있다. 베버는 역사 변동의 긴 과정을 밟으면서 삶이 체제의 일부가 되어 체제의 틀 안에 갇혀 삶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문제시한다. 현실 체제에 들붙어 그 부속품으로 나날을 살아가는 삶이란 온전한 삶이 아니라 생기를 잃고 찌들어 갈기갈기 찢어진 조각난 물건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쇠우리’라는 말로 이러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 개념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여전히 서양 문명권의 긴 역사 변동 과정을 뜯어보며 다다르게 된 분석의 결과였기에 이 문명권과는 다른 역사 경험을 해온 사회에도 꼭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확답할 수 없다. 겉으로는 서양의 도시와 동양의 도시가 다를 바 없이 같게 보이지만 도시를 움직이는 작동 기제를 찾아 견주게 되면 반드시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없는 다른 원리로 짜여 있음을 알게 된다. 서양은 친족의 사슬을 깬 다음에 세워진 합리스턴 도시 형태라면 우리나라는 친족의 사슬 위에 합리스턴처럼 보이는 외장을 덧씌운 도시 형태이다. 바로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대(竹)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 특유의 짜임새를 그려보고, 이것이 ‘쇠우리’와 함께 겹쳐져 우리 식으로 삶이 이지러지고 있다고 풀이한 바 있다(박 영신, 2014). 이 ‘(쇠/대)우리’는 현실이라는 막강한 현실 체제의 위력에 굴복하여 체제에 맞춰 사는 비좁은 삶을 보여주며, 이러한 삶의 테두리 넘어 다른 가능성에 대하여 문을 닫아두는 부자유한 상황을 가리킨다.¹⁵⁾ 모두가 현실 안에서 득세하기 위하여 현실에 매끄럽고 날렵하게 순응하여 한 줄로 서서

14) 뒤르케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 글의 주제가 아닌 데다 이에 대하여 내가 앞서 몇몇 글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보기, 박 영신, 1978, 1986/1987, 1987, 2008) 여기에서 더 논의하지 않는다.

15) 이 분석 개념은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 대한 이해에도 유용하다. 대학의 작동 원리를 살피고자 한 나의 글(1994/1995) 볼 것.

같은 목표물을 향하여 땀 흘리는 무한 경쟁의 삶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현실에 순응하여 이를 강화한다. 모두가 현실 체제화의 종복이 된다. 이러한 삶의 동기는 핏줄로 엮인 가족에서 나오고, 기껏 자기 나라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 삶이 온전하다 할 수 있으며 최선이라 할 수 있는가? 베버는 서양 문명권에 관심을 쏟아 탐구한 학문의 길목에서 굳혀진 체제 순응을 넘어 ‘체제 거부’의 삶을 내다보고 이러한 삶의 지향성에 희망을 건다. 그는 현세 순응의 자기중심성을 돌파하여 ‘현세 부정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형제애’를 그려보고 ‘이웃됨’을 그리었다.¹⁶⁾ 오늘날 여지없이 축소되다 못해 아예 제거되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고 바람이었다.

이 두 사회학의 창건자는 현실에 장단 맞춰 현실을 두둔하며 거기에 고착하지 않고 이를 뚫고 나아가 더욱 높은 도덕 이상을 향하여 현실을 거부하고 초월하는 삶의 지향성을 일깨운다. 이는 현실 안에 들어서 있으나 현실에 묶여 있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 초월의 도덕 이상에 대한 관심이다. 이 생각을 대학에 이어보면 대학은 의당 현존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교육의 책임조차도 다만 현존 질서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가 놓치지 않고 줄기차게 추구해야 할 도덕 이상에 지향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에 이른다. 마치 비텐베르크대학이 그러했듯이, 대학은 진리에서 벗어난 현존하는 질서를 분쇄하고 이를 되찾기 위하여 기꺼이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는 자기 결의를 말한다.

4. 대학의 길

오늘날의 대학은 어제의 대학과 다르다. 500년 전의 유럽 어느 대학과 21세기의 대학이 같을 수 없다.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경제 영역의 확장과 세력화를 불러왔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 참여 영역의 확장과 세력화를 또 불러왔다. 다른 말로, 사회 분화의 과정으로 풀어보면 시장 영역과 시민 영역이 분화하여 자율성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에 초점을 맞춰보면 대학은 교회의 권력 체제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바깥 영역과 소통하면서 자체의 연구 주제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전문화의 길을 달려왔다. 이는 과학 발달의 증표이자 그 결과이다. 관심 있는 문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집중하여 탐구하는 연구자들이 내놓은 업적은 앞 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다. 그러나 업적은 외곬수였다. 새로운 세계는 곧 처참한 세계로 변모했다. 쉬지 않고 깊게 파고 들어가고 넓게 두루 살피며 할 아직도 미진한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귀히 다루지 않고, 이익 창출의 황금을 쫓 수 있는 개척과 개발 대상으로 마구 대하면서 탐욕의 군상이 몰려들었다. 이에서 비롯된 인간의 과오는 중첩되었다.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평에 시달리는 인간의 아픔을 눈여겨본 사회 비평가들이 평등과 공평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자고 깃발을 들고나왔다. 적어도 지

16) 벨라(Bellah, 2006)가 베버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 “중간 고찰” (“Zwischenbetrachtung”) (Weber, 1915/1958) 볼 것.

난 19세기 이후 이 불의에 대항하려는 투쟁의 역사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강렬하였다. 하지만 불의는 인간이 겪는 불평등과 불공평에 한정되어 있을 것이 아니었다. 깊은 뜻에서 온 인류가 마주하게 된 문제 상황은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인간의 생존과 멸종 위협이었다. 평등과 공평의 가치를 깎아내리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을 그러한 항목에 한정시키지 않고 그 너머 더욱 넓고 큰 다급한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화가 빠져든 관심의 축소 관행이 빚어내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 영역 ‘사이’에 다리를 놓고 소통하자는 학제간 연구나 그 모두를 ‘넘어서는’ 초학제간 연구에 문을 열어두자는 시도가 있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학문 관심은 비좁은 전문화의 어리석음을 뚫고 온전한 지식을 지향코자 하는 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연구자의 자격요건이자 마음가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학문의 ‘자폐증’에 대한 교정이자 소통과 공공성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박 영신, 1992: 20, 451-466). 하지만 이 관심은 더 큰 과제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의 ‘공시성’에서 머물지 않고 ‘통시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연구의 관심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인류의 생존 문제가 다급하고 절실하게 되면서 과학과 기술이 이룩한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구가하는 동안 놓치고 있던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한 갈급함을 체험케 된 것이다. 이 문명을 낳은 ‘오늘의 서양’ 그 바깥도 살펴보아야 하고 나아가 서양의 지난날도 되돌아보고자 하는 자기 성찰의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조상들의 이야기들로 엮인 역사의 공동체의 기록인 ‘굴대 문명’에 대한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다. 이 새로운 자극제에 힘입어 거대한 문명사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케 했고, 이에 대한 관심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자기 성찰의 계기도 마련해주었다. 할 걸음 더 나아갔다. 인식의 관심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한정 짓지 않고 자연과 이어 살펴보고 생태계에 이어 이해하는 더욱 넓은 논의로 뻗어나갔다.

대학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큰 그림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 거역할 수 없는 전문화의 연구가 인간의 생존, 생명체의 멸종이라는 위기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삶의 의미 틀 안에서 체질하며 새김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어느 전공 분야에 맡겨진 일이 아니라 모든 전공 분야가 함께 들어서 특정 전공 영역을 잇대어 비춰보는 거울이어야 한다. 만일 대학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이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전문화로 치닫는 과학기술의 연구 공간이 대학 안에 들어설 이유는 없어진다. 무섭게 위력을 더해가는 재벌 기업의 공장 옆에 자리하여 서로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내 과학기술대학으로 기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그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기하급수의 이익 창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안에 있는 까닭은, 그리하여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보람은 소스라쳐 자기 전공이 비좁아지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이웃한 학문과 만나 고립된 섬처럼 떨어져 나온 자기 전문 영역이 다른 영역과 어떻게 이어지고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피고, 왜 같은 하늘 밑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를 겸허히 마음 문 열고 생각을 나누며 서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들으며 잇대어보는 일이다.

이 일은 대학에 대한 고정 관념을 부수는 일이다. 대학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하여, ‘출세’하기¹⁷⁾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자기 믿음의 정당성을 회의해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믿음은 자기에게서 갑자기 태어난 자생물이 아니다. 대학에 들어가라며 밀고 당기는 부모의 강압과 시달림에서 다져지고 그가 태어난 사회의 ‘사회화’ 과정을 밟으면서 짝이 트고 자라 굳어진 확고부동한 믿음이다. 이에 대하여 의심한 바도 없고 의심할 수 있는 여유도 갖지 못하였다. 자기 나이 또래 사이에서 어떤 의심도 없이 한 줄로 서서 등교하고 하교한 다음 학원을 오가기만 했으니, 그 삶은 넓고 깊게 그리고 높게 모든 것 너머를 상상하고 꿈꾸는 가장 싱그러운 시기를 압살시킨 자기 협소화를 불러온 슬픈 나날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¹⁸⁾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그 공부는 삶에 대한 물음이란 한 번도 던져본 바 없었다. 던져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두렵고 무서운 느낌에 곧바로 목 졸라 뒤틀어 잘라버리는 자기 학대의 잔인성을 태연스럽게 저질러왔다. 모두가 이러한 삶의 길 걸음을 거쳐 온 이상한 존재들이다. 물론 이 이상함은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 질환의 범주에 들지 않고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대학은 이들의 응석을 받아주며 마냥 감싸주는 곳이 아니다. 이들에게 차라리 혼란을 맛보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 자유는 이러한 혼란의 체험과 대가의 뒷밭에서 영근다. 이러한 뜻에서 대학은 오랫동안 다져온 의식의 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마침내 깨질 수 있는 배움터이고, 이전의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되는 ‘의식 해방’의 공간이다.

‘소명’이라는 낱말은 널리 쓰여 왔고 널리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베버의 논지에 따라 말하면, 이 낱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안에서 구현하는 일 자체를 도덕 차원에서 정당화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전의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달리 현실 안에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개인의 ‘도덕 행위’로 보고 이를 값있게 여기도록 했다(Weber, 1904-1905/1958: 79-80).¹⁹⁾ 이 생각은 칼빈으로 이어지면서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는 더욱 강력한 뜻을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이 낱말은 원래 도덕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별달리 깊은 새김질 없이 현실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순응의 행동 지향성에서 벗어날수록, 뒤집어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현실 안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현실과 대결하는 부정

17) 이와 이어,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를 논하면서 헌법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대학 입시 중심 교육, 출세 중심 교육” 이외에는 뚜렷한 교육의 목표가 없다는 논지를 펴고 있는 글(최 대권, 2001: 13) 볼 것.

18) 이와 같은 어둡고 슬픈 교육 현실에 대한 기록은 많겠지만 대학을 떠난 ‘김 예술’을 우리의 교육 문제로 보고 비감한 감정을 어찌지 못하여 글로 토해낸 박 정신의 글(2013: 15-29) 볼 것. 서로들 “죽고 죽이는 ‘정글’로 내모는” ‘체제 교육’의 정경을 자신의 역사관 곧, ‘탐욕의 역사’에 이어 적은 다음, 그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생명체다. 서로 도우며 서로 모여 말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며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삶의 교육’을 제창한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대학은 ‘산 대학’이 아니라 ‘죽은 대학’이다.

19) 소명(Beruf, calling) 개념의 역사는 흥미로운 만큼 매우 복잡하다. 베버는 이에 대하여 ‘달음’에서 그다운 해박한 지식을 담아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윗글, 204 아래). 그리고 종교개혁이 서양법에 미친 영향을 깊이 있게 논한 버만과, 이에 몇몇 값진 달음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둔 김 철의 글을 볼 것(버만, 2016: 특히 125 아래).

의 행동 지향성으로 나아갈수록 ‘소명’의 도덕의식은 더욱 강렬해진다. 대학의 경우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대학이 떠맡아야 할 의무 영역은 넓다. 당장의 얕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로부터 멀리 내다보는 깊은 욕구에 이르는 실로 폭넓은 의무를 대학이 수행한다. 하지만 대학의 도덕 이상은 깊은 데를 향한다. 그러할 때 대학의 소명은 분명해지고 무거워진다. 오늘날 이 낱말이 베버가 풀이하는 뜻에서 벗어나 세속화되었다고 해도 그가 말한 도덕 행위의 의미 전통을 새긴다면 ‘소명’의 뜻은 더욱 큰 무게를 지닌다.

대학은 큰 배움터이다. 어느 한두 가지 배움 거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곳이다. 현실에서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에 들어오기에 이 일을 위해서도 성의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은 이 일 너머, 또 다른 일을 수행해야 한다. ‘자기 넘어’의 가치를 지향하는 일이다. 되풀이하거니와, 소명은 현실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순응 지향성에 묶이지 않고 이를 넘어서는 돌파 지향성을 이룬다. 대학의 소명은 이 삶의 문제를 두고 배우며 대화하는 ‘지성 공동체 됨’에 놓여 있다.

5. 대학의 뜰

위에 적었듯이 대학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의 세계는 비좁다. 가장 왕성한 상상력과 독창성을 키울 수 있는 원기 왕성한 시기를 희생시키면서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못할 ‘정답’을 일방으로 주입하는 체제 밑에서 그 정답 너머의 어떤 가능성이란 아예 그려볼 수도 없게 쳐놓은 차단막에 막혀버린 비좁은 공간에서 자라야 했던 ‘정답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달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일방하달’의 교육을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강요 통제’된 교육을 받으면서 모르는 사이에 정답의 주입 행위에 길들여져 날개가 꺾이고 만 것이다. 정답의 목록을 만들어 놓은 다음 이를 의심하지도 않고 토론하지도 않은 채 머릿속에 채워 넣어 암기토록 하는 교육의 굴레를 쓰고 살아야 한다. 내가 자주 말하는 바를 다시 여기서 되풀이해 적어본다면, 이러한 공부(?) 풍토에서 모범 답안이라는 정답 체제의 경쟁 도시에서(박영신, 2002) 점수를 ‘잘’ 따서 공부를 ‘잘’ 한다고 인정받는 이른바 ‘모범생’일수록 ‘꽉 막힌’ 자가 된다. 그러한 공부에 열중하여 그러한 공부를 잘할수록 생각의 세계는 닫힌다.²⁰⁾ 이는 희극이자 비극이다. 실제로 이들은 깊은 뜻에서 비판 능력이라고는

20) 오래 전 한국사회이론학회에서 발표한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많은 생각과 깊은 반성을 요구하는 논쟁적인 행동 내용조차도 규격화된 획일적 정답(正答)으로 처리하여, 이러한 정답을 사회 구성원들이 의심하지 않고 복종적으로 수용하기를 강요”한다. 그렇지 않은가? 학교 교육이란 모두 정답으로 짜여 있고, 시험의 정수라 할 대학 입학 학력고사도 모두 정답을 갖고 있어 그것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맞히었는가 하는 기계적 과정이 10대 말의 젊은이들을 획일적으로 서열화하는 평가의 내용이 된다. 누구 하나 그 성적 순위에 따른 획일적 서열의 타당성을 깊이 질문하지 않는다.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이다. 시험을 치는 학생, 부모, 교사, 아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치의 의

찾아볼 수 없는 체제 순응의 멍한 인간이 되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협소한 이기주의자로 세상을 산다. 그들이 민첩하다면 체제 순응의 마당에서 그러할 뿐 체제 변혁의 마당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체제의 노예를 양산할 뿐 체제의 개혁자를 기르지 않는다.

이들은 어떤 주제를 두고 자기다운 생각을 해본 바도 없고 그러한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는 소통을 체험한 바도 그 가치를 배운 바도 없이 그저 위에서 내리는 지시와 명령과 통보에 익숙하기만 하다. 아무리 저항한다고 해도 그 저항은 단순 저항이다. <삼국지>를 읽고 배운 것이란 잔피이고 간교함이다. 작당을 즐기고 모략을 꾸밀 뿐 소통을 통한 협력의 가능 세계에 대해서는 알 턱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이에 어떤 마음문도 열어두지 않는다. 오로지 딱 막힌 좁은 자기 속에 갇혀 참된 뜻에서 ‘배우지 못한’ 몸집 큰 소소리패로 자랐던 탓이다.

대학은 이들의 시중을 듣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은 이들 반지성 세력과 대결한다. 대학은 탈입시 교육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했던 이전의 공부 관행을 새김질하도록 대학은 이들에게 혼란을 던져주어야 한다. 베버가 ‘당장의 행동’을 요구했던 당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중을 향하여 정당의 우두머리가 당원을 향하여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대학이 그러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Weber, 1958). 이 시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 비텐베르크대학의 학문 정신에서 도전을 받고 판단의 동요와 행위의 의심을 체험했던 햄릿처럼 대학은 이전의 확실성을 질문 대상으로 삼아 생각과 마음의 혼돈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의심’의 값을 높이 보고 ‘물음’을 던지는 일은 확실성의 성마른 오만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시대에 ‘회의의 믿음’을 지켜온 ‘세속 인문주의’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Kronman, 2007: 특히 255), 이와는 다른 쪽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박 정신은 짧은 글에서 예수를 예루살렘의 교만한 확실성에 물음을 던지고 이 도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소동’의 본보기로 삼아, 확실성을 내세우는 예루살렘과 짝하기를 거부하고 현실 권력과 짝하기를 거부하는 “‘소동’의 예수 모습”을 그려준 적이 있다(박 정신, 2008: 110-112). 소동은 자유의 첫걸음이고 해방의 조건이다. ‘확실한’ 직장의 목표와 ‘확실한’ 출세의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대학은 혼란을 불어넣어 드디어 다시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자유의 공간이고 이들을 너무도 오랫동안 얽어매고 있던 굴레를 풀어주는 해방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본 과목은 여럿이다. 대학 바깥에서 할 수 없는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역사의 안목’에서 찾고자 한다. 역사의 눈으로 인간의 삶을 살피고 오랜 문명의 길 걸음에서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의 뜻을 또 무엇이라고 풀이코자 했는지 속속들이 견주어보는 비교 문명사의 연구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는 대학이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를 들어, 문명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거기에서 놓친 것

심도 없이 그 서열을 밟고 있는 것이다. [...] 바로 이 ‘정답 사회’가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켜 왜곡하고 드디어 삶에 대한 반성적 자유와 논쟁적 탐구를 앗아가, 성찰 부재의 도덕적 황폐화를 가속화한다” (박 영신, 1987: 300).

은 없는지, 귀 기울일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새겨볼 것은 없는지도 둘러보게 하는 지성 공동체의 몫을 맡을 수 있다. 대학은 인류의 문명이 담고 있는 삶의 문제를 캐보면서 놀라움과 깨달음을 받고 자기 살핌과 자기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공부의 참 ‘즐거움’을 누리도록 젊은이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함께 생각을 나누자며 부추길 수도 있다. 취직이 급선무라는 경직된 입학 동기에도 불구하고, 현실 체제에 부드럽게 진입하기 위한 공부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뜰에 들어서서는 긴 세월 동안 삶의 문제를 두고 고뇌하며 영감을 얻게 된 위대한 역사의 기록에 마주하여 자신을 비취보도록 삶의 새로운 도덕 성찰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대학이 깊어져야 할 일이고 깊어질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산학협동을 외치고 산학 일체화를 부르짖을지라도 이 일을 저버리거나 게을리한다면 대학의 존재 이유는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마침내 대학 바깥의 산업 경제 세력에 의하여 삼켜버림을 당하고 말 것이다.²¹⁾

그러므로 대학 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담은 향연의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직장을 생각으로 대학에 들어왔더라도 이전에 마주할 수 없었던 생각할 거리를 보고 이에 이끌리다 못해 마음의 동요를 체험하고 충격을 받아야 할 곳이어야 한다. 완고한 ‘자기’의 의식 세계에 간혀 있기를 거부하고 펼쳐 밖으로 나오라고 도전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별난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세계가 파열하고 확장하는 삶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뜰은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자리이다. 획일화된 정답 사회에서 토론해본 적도 없고, 따라서 토론의 의미와 가치를 알 까닭도 없기에 상대의 생각을 귀담아듣기보다는 자기 입장만을 일방으로 전하자 한다. 토론이라는 것조차도 정형화되어 모범 정답이 전제되어 있다. 그 너머 더욱 넓은 생각의 터전으로 올라가 도덕 이상을 다져보려는 토론의 가능성은 전혀 이해받지 못한다. 대학은 이 가능성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곳이다. 도덕 이상을 두고 엇갈리는 생각, 역사의 길 걸음을 통하여 다투어온 생각에 대한 연구 자료를 내놓고 이를 두고 따져 가늠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마당은 대학 밖에서 찾을 수 없다.

절박한 토론의 주제는 한두 가지로 줄일 수 없다. 이 문제는 저 문제와 동떨어지지 않고 서로 잇대어 있을 수 있기에 생각의 만남 터는 언제나 넓다. 이러한 전제에서 대학은 오늘의 문명이 처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여 전공의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뜰이 된다. 보기를 들어본다. 오늘날 ‘기후 변화’ 처럼 절박하고 긴급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 문제를 다룰 능력과 자격을 갖춘 곳이 대학이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문제시하여 연구해온 업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두말할 것 없이 ‘과학의 문제’이다.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가 돌변하고 바닷물이 높아지고 극심한 가뭄에 사나운 홍수가 나고 격심한 더위에 빈번한 산불

21) 이는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의 문제이고 어제의 문제였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국가 주도의 정책에 짓눌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가치”는 명목상으로만 인정될 뿐 무시되었다(김 철, 2000: 특히 34 아래). 이와 함께 경제주의 논리와 경제 세력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삶의 의미 문제는 관심거리로 삼지 않게 되었다는 논지도 볼 것(박 영신, 2001).

로 온 지구가 참화를 입는 자연 생태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도덕의 문제’이다. 부자 몇 나라 때문에 대다수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불공평과 불평등의 문제를 과학의 문제로 축소하여 과학자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이는 이 지구 위에 사는 인류 공동체가 맞닥뜨려 함께 풀지 않으면 안 될 도덕 실천의 문제이다. 베버가 일러주는 대로(Weber, 1966: 143-144), 과학은 삶의 의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도 던지지 않고 물론 이러한 물음에 답해주지 않는다. 의학이 ‘삶의 가치’ 물음에 대하여 답할 수는 없다. 과학은 가치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수단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도덕 관심에서 우러나 오고 도덕 영역에서 답해야 할 삶의 궁극 의미에 속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득세하여 삶의 의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도덕 관심을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삶의 의미와 도덕 관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학은 과학 연구의 중심부로 소임을 다함과 동시에 지구 공동체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도덕 이상의 문제를 두고 겸허하게 함께 생각을 나누는 대화와 교육의 소임도 다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획일화하는 문화 습속에서 자라 거기에서 승승장구한 자들이니 대화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하고 대화를 통한 소통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방의 전달에 일방의 순종이 가장 효과 있는 소통(?) 방식이라는 우리의 습속에 젖어있는 덩치 큰 소인배들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대학은 소통의 문화를 가꾸어 소통을 통하여 절박한 지구의 위기를 도덕의 위기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성의 삶은 검토됨이 없는 인습을 수용하지 않으며 논의를 거치지 않은 관행을 추종하지 않는다. 나아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고작 자기 울타리 안에서 통용되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는 무절제한 행동을 허용치 않는다. 지성 공동체로서의 대학은 이러한 반지성 행태와 대결한다. 대학은 모름지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말은 이러한 지성의 삶을 맞보고 이를 자기 품성의 일부로 내재화할 수 있는 배움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6. 끝에

대학이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졌다고 느끼거나 당장 현실 속에 뛰어들고픈 욕구에 대학을 박차고 나가는 자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낮춰볼 필요는 없다. 그들의 길 또한 귀하기 때문이다. 보기로, 어느 누가 대학의 울타리 안에 마냥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저리나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라면 대학 저 바깥 실리콘밸리로 들어가 전자 기업체를 꾸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만들어내는 기업가로 우뚝 서겠다는 그 꿈을 값없다 할 수 없다. 차라리 존중받아야 할 삶의 길이다. 여기까지는 온당하고 타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의 ‘실리콘밸리화’이다. 바야흐로 모든 대학이 실리콘밸리의 하수인 되기를 자청

하여 대학의 자기 참모습을 실리콘의 제단 앞에 제물로 바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사내 대학’ 되기를 명예로 여겨 다투어 자청한다. 그렇게 온 강토가 법석을 떨며 한 목소리로 ‘실리콘밸리가 되자’ 고 읊는다.

이에 대학은 기업가/창업자를 기르는 곳이라고 장단 맞춰 내는 요란한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여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분명 그들이 할 몫이 있고 그 몫은 크고 값지다. 하지만 대학은 오직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세워지지 않았고 중도 자퇴하는 자들이 잠시 멈추는 정거장이 되고자 하여 세워진 배움터가 아니다. 창업하려는 자들이나 하루속히 기술자로 직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날의 대학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없이 괴짜괴짜하고 허름하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되는 관점에서 대학의 허망함을 폭로하고 대학 교육을 송두리째 날려버려야 한다고 버럭 화를 내는 소리도 있는 터다. 그럼에도 대학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존재 이유를 새기며 이를 지켜 왔다. 대학은 몇몇 빼어난 세기의 기업가들이 만들어내는 부와 견줄 수 없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인류에게 주는 삶의 편리함이나 삶의 변화와는 다른 삶의 가치를 두고 씨름해온 기나긴 정신 전통을 가지고 있다. 눈앞의 화려한 기술의 곡예를 보고 초라하게 보이는 대학의 외형에 가려 좀처럼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길 걸음 속에 깃들여 숨 쉬어온 엄연한 대학의 영혼이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다름 아니다. 대학은 삶의 깊은 뜻을 새김질하려는 인간의 근본 욕구에 답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이 놓치지 않아야 할 도덕 이상을 위하여 현실과 부단히 씨름해왔으며 이러한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소명으로 여겨 가슴에 담아 왔다.

대학은 지난날과 견줄 수 없게 사무행정으로 분주하다. 누그러들지 않고 강화되는 안팎의 관료제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곳저곳에서 대학의 순위를 매겨 시도 때도 없이 서열화하는 평가 보고서가 매체를 타고 널리 퍼져 화제가 된다. “논문의 개수나 SSCI급 학술지 게재” 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대상” 으로 삼아 ‘경쟁’ 을 부추긴다(이승훈, 2018). 우리나라 대학들 사이의 순위는 어떻게 나왔고, 우리나라/우리 대학이 아시아 지역 대학과 세계 대학의 순위 ‘톱 00/000’ 에서 몇이나 들고 또 몇 단계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어느 대학 총장이 내게 들려준 대로, 이 서열화 평가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나 근본의 것이 아님에도 대학으로서는 무시할 수도 없는 궁지에 내몰린다. 평가 기관마다 점수 배정의 항목과 기준 그리고 비율이 다르기는 하다. 하지만 대동소이하다. 어느 평가 기관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형제애나 이웃됨과 같은 ‘현실 거부’ 의 도덕 지향성을 헤아리지 않고 ‘도덕 이상’ 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교육’ 은 제쳐둔다(박영신, 2016). 점수화하기도 난감하겠지만 애당초 이러한 항목은 관심 밖이다. 그러나 진실한 대학은 어떤 바깥 힘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살필 줄 아는 학문 양심을 값지게 여긴다. 멈춤 없이 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본다. “목적과 수단 모두가 다 선한 실천 행위” 를 귀히 여기는 “도덕 이상의 구현체” 이기 때문이다(작은대학, 1991).

대학은 자기 소명을 새삼 새기며 자기 품위를 되찾아야 할 결단 앞에서 있다.

도움 받은 글

- 김 철,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현상과인식」, 24권 1/2호(2000년 봄/여름).
 뒤르케임(뒤르켁), 에밀, “개인주의와 지성인” (박 영신 옮김), 「현상과인식」, 4권 4호(1979년 겨울). 또는 박 영신, 「변동의 사회학」(서울: 학문과 사상사, 1980), ‘부록’ .
- 루터, 마르틴, 「종교개혁 3대 논문」(지 원용 옮김)(서울: 컨콜디아사, 1993).
- 박 영신,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도덕적 위기—에밀 뒤르케임의 현대 사회 인식,”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이론」(서울: 일지사, 1978).
- , 「역사와 사회 변동」(서울: 사회학연구소/민영사, 1987).
- , “ ‘대학의 장막’ 과 정당성 위기,” 「현상과인식」, 17권 1호 (1993년 봄), 또는 「우리 사회의 성찰적 인식」(서울: 현상과인식, 1995).
- , “역사 사회학자 뒤르케임을 아는가?,” 테다 스카치폴, 「역사 사회학의 방법과 전망」(박 영신/이 준식/박 희 옮김)(서울: 민영사/한국사회학연구소, 1986)., ‘덧붙이는 글,’ 또는 박 영신, 「역사와 사회 변동」(서울: 사회학연구소/민영사, 1987).
- , “뒤르케임의 갈등 인식과 사회주의,” 「사회학연구」, 다섯째책(1987), 또는 「사회학 이론과 현실 인식」(서울: 사회학연구소/민영사, 1987).
- , “현대 학문의 폐쇄성과 열린 대화,” 「진리·자유」, 1990년 여름호 또는 박 영신, 「사회학 이론과 현실 인식」(서울: 사회학연구소/민영사, 1992).
- , “정복자와 노예,” 「현상과인식」, 25권 4호 (2001년 겨울),
- , “교육의 두 도시,” 「사회이론」, 2002년 봄/여름(통권 21호).
- , “뒤르케임과 지성인,” 「사회이론」, 34집(2008년 가을/겨울호).
- , “베버의 ‘쇠우리’ --'삶의 모순' 역사에서--,” 「사회이론」, 2014년 가을/겨울호 (통권 46호).
- , “범세계화 시대의 대학: ‘삶의 교육’ 제창” (제35회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6년 9월 23일 10:40~12:00/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로비). 또는 “수단’ 에 대한 물음에서 ‘지식’ 과 ‘가치’ 에 대한 물음으로 나아갈 때,” 「교수신문」, 2016년 9월 27일/교수신문 (<http://www.kyosu.net>)
- , 「그 개혁의 뜻으로」(서울: 여울목, 2017).
- 박 정신, 「상식의 역사학 역사학의 상식」(서울: 북코리아, 2008).
- , “체제의 교육, 삶의 교육: 백년 전 베어드 그리소 백년 후 김 예슬,” 「현상과인식」, 37권 1/2호 (2013년 봄/여름),
- 버만, 해롤드, 「법과 혁명 II」(김 철 옮기고 주석)(과주: 한국학술정보, 2016).
- 이 승훈, “ ‘평가’ 를 생각한다,” 「현상과인식」, 42권 1호 (2018년 봄).
- 임 철규, 「고전: 인간의 계보학」(과주: 일지사, 2016).
- 작은대학, “작은대학운동선언서”(1991년 10월 21일).
- 최 대권, “위기의 교육,” 「현상과인식」, 25권 4호 (2001년 겨울),
- Bainton, Roland H.,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A Marian Book, 1995)[1955].
- Bellah, Robert N., “Introduction,” Emile Durkheim, *On Morality and Society* (Robert N. Bellah 엮음)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 , “Max Weber and World-Denying Love,” Robert N. Bellah/Steven M. Tipton (엮음), *The Robert Bellah Reader*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2006).
- Bendix, Reinhard, “Japan and the Protestant Ethic,” Reinhard Bendix/Guenther Roth, *Scholarship and Partisanship: Essays on Max Web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 Durkheim, Emile, *The Evolution of Educational Thought: Lecture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econdary Education in Franc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 George, Timothy, *Reading Scripture with the Reformers* (Downers Grove, Illinois: IVP, 2011).
- Kronman, Anthony T., *Education’s End: Why Our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Given Up on the Meaning of Lif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 Lande, Aasulv, “Nordic Protestantism to the Present Day,” Alister E. McGrath/Darren C. Marks (엮음), *The Blackwell Companion to Protestantism* (Oxford: Blackwell, 2007).
- Ozment, Steven, *The Age of Reason 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 Saha, Lawrence J., “Durkheim’s Sociology of Education: A Critical Reassessment,” *Education and Society*, 19권 2호(2001년 12월).
- Weber, Max, “Religious Rejections of the World and Their Directions” (1915), Max Weber,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Hans H. Gerth/C. Wright Mills 엮고 옮김)(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 “Science as a Vocation” (1918/1919), Max Weber,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Hans H. Gerth/C. Wright Mills 엮고 옮김)(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Zachman, Radall C., “Protestantism in German-speaking Lands to the Present Day,” Alister E. McGrath/Darren C. Marks (엮음), *The Blackwell Companion to Protestantism* (Oxford: Blackwell, 2007).

대학의 존재 이유

최 대권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확실히 현재 우리나라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의 하나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가느라고 선진국들이 가진 대학제도를 도입 또는 모방했다.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들도 최선진국 수준이어서 학문교류를 위해서는 몰라도 선진 외국대학으로, 그것도 박사학위 등 학위취득을 위해서 유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대학들도 선진국대학인가?²²⁾

둘째로 한국이 앞선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인문, 사회, 과학, 공학 등의 고급 인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히 양성하고 있는가? 더구나 세계를 선도하는 인력을 길러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관한 최근의 언론의 관심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대학졸업생들이 기업 등에 취업한 후 오늘의 현장 상황에 알맞는 새 훈련이 필요하더라²³⁾ 라든지, 20세기에 교육받은 교수가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시키고 있더라²⁴⁾ 라든지, 일류대학-지방대학-이·문과 별 취업률 비교²⁵⁾ 등의 반응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관심사나 반응을 보면 대학을 취업 훈련기관 정도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셋째로 “학문” 과 대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위의 첫째 및 둘째 질문과는 어떻게 연계되는가? 특히 학문은 진리탐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지, 위의 첫째 및 둘째 질문은 사회적 국가적 필요성 차원의 질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

22) 언론은 한국대학도 선진국대학인가를 묻고 있다. 「조선일보」(2021년 11월 3일)는 1면 타이틀을 “아시 아서도 밀리는 한국대학들” 이라고 뽑고 있으며, 3면에서는 “2류로 추락하는 국내대학, 논문수 톱100에 中·日 49곳, 한국 5곳” 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2021년 11월 4일) 30면 ‘만물상’ 란에는 “서울대의 추락” 이라는 기사를 쓰고 있다. 추락의 내용으로 “대학교육의 핵심인 연구의 양과 질이 악화” 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신문 11월 3일자 3면 기사에서는 추락의 원인으로 정부의 대학규제와 대학의 현실 안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들고 있다.

23) 「조선일보」, 2021년 9월 7일, 3면. “게임회사는 신입에 코딩 과외, 배터리 회사는 물리학 수업 개설” 등 기사 참조.

24) 윗글, ‘사실’. “세상 변화는 ‘빛의 속도’ 대학 시계는 30년 전, 청년들에게 못할 짓 한다”; 「조선일보」, 2021년 9월 8일, ‘사실’ (“20세기 교수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한국대학”); 2021년 9월 9일, 1면 “전기차 달리는데, 대학은 기름차만 가르친다” 및 3면 “日 잠을려 만든 70-80년대 커리큘럼으로, 21세기 공대생 가르쳐” 등 기사 참조.

25) 「조선일보」, 2021년 9월 6일, 1면 “ ‘SKY’ 문과는 구직난, 지방대 이과는 구인난” 및 3면 “문과 등 용문 ‘마케팅·재무·인사’ 마저 . . . 이과 우대로 돌아섰다”; 9월 7일, “ ‘원하는 인재’ 뽑는 기업은 20%뿐” 등 기사 참조.

은 사회적 국가적 필요성을 이끄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에 한 미션스쿨이기도 한 대학과 관련해서 미션스쿨이 아닌 대학과 공유치 아니하는 미션스쿨인 대학의 독자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닐까 하는 질문도 지니게 되었다. 또 연세대에 세워져 있는 비석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구절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학문에서 탐구하는 진리는 같은가, 다른가,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는 호기심을 지니게 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질문이나 호기심들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을 살펴보고 싶다.

대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실 대학의 개념(concept)이란 그 내용이 풍부해서 그것을 서술해 내려면 장황하게 몇 권의 책으로도 다 소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정의(define)해 보라고 하면 그리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정의는 결국은 자기가 보는 관점이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해야지 다양하고 풍부하게 정의하다 보면 정의의 맞은 잃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를 찾아보았더니 1차적으로 “an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providing facilities for teaching and research and authorized to grant academic degrees.....”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대로 보면 우리가 몸담았거나 담고 있는 대학이 대학인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옛 성균관이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점은 틀림없으나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은 아니었으니 그러면 대학이 아니라는 것인가? 내가 익숙하게 접했던 한국의 대학이나 미국 대학은 전공 중심의 과와 단과대학으로 이뤄져 있는데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은 전공 중심의 단과대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전공과 상관없이 이를테면 기숙사로 이뤄진 ‘college’ 들을 엮는 ‘university’ 라는 점이 참 신기했다.

아무튼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대학의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직간접으로 몸 담고 있는 한국대학의 내가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점을 서술하고 분석해보려고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나는 한국 우리나라 대학의 존재 이유(raison d' être)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여 대학을 정의하고, 그리고 이 질문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나는 대학이란 고상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준비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이라기보다는 학문연구를 하며 가르치는 기관, 아주 간결하게 “학문하는 곳” 또는 “학문하는 곳이어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리고 학문이란 “진리를 탐구·발견하는 작업” 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새로운 진리 탐구·발견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하자면 학문은 이 세상의 발전을, 좁게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앞장서 이끄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리라. 새로운 진리의 발견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게 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해마다 나오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치 못하는 이유를 나는 대학이 (기초)학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대학이 진리 발견으로 이 세상을 이끄는 학문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내가 전공하는 법학을 학문으로서의 법학으로서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험으로 획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것이다. 그 하나①가 우리나라의 민주화(1987)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헌법학자로서 헌법소송의 정착·발전과 함께하게 된 체험이고, 둘째②로는 미 감리교 선교사들이 그들 나라의 헌금과 그들의 노력으로 마련한 터 위에 그들이 미션스쿨로 세운 이화여자대학교가 최근에 내가 속한 기독교감리회 소속 교회를 상대로 교회 부지가 단지 명목적으로만 등기부상 자기 소유임을 근거로 교회철거소송을 제기해오며 따라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체험이 그것이다.

이전에도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일반법원형 등 여러 형태의 헌법재판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였으나 지나간 권위주의체제 등의 여러 사정으로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87년의 민주화와 함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이래 헌법쟁송은 역동적인 우리나라 민주정치과정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다만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법률 등 하위 법규범보다 상위의 헌법규범에 관한 이해의 부족이랄까 결핍이라는 헌법학적인, 즉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적으로 법관자격을 갖춘 사람으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관자격을 지니지 아니한 헌법학교수 등 헌법학자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헌법소송심판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종래에 법과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법대생들과 사법시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장차 교수를 지망하는 소수 법대생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양분화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헌법재판관은 자연스럽게 평생 전직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로서 주로 민·형사사건을 다루어온 경력을 지닌 사람들로서만 구성되게 마련이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헌법재판관들은 사법시험 준비 때 터득한 헌법 지식 이상의 헌법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헌법학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재판연구원(미국의 law clerk에 상당)의 조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사정은 로스쿨 체제가 도입된 오늘날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사정은 더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헌법학뿐만 아니라 법학 전반에 걸쳐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에 대신하여 도입된 변호사시험은 판례 위주로만 출제되는 까닭에 로스쿨 강의는 주로 판례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헌법학을 포함해 기초법학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한 까닭에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실무를 통해 헌법학을 터득하기에 이를 무렵이 되면 벌써 (독일의 12년과는 달리) 6년 임기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까닭에 헌법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일이 자주 일어났었고, 다른 한편 헌법학자가 헌법소송에 법정참고인(amicus curiae)²⁶⁾으로

26) 필자는 2015년 12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정당화하는 참고인 진술을 하고, A4 용지 8쪽에 해당하는 참고인진술서 “주요 헌법적 쟁

서나 판결례비판²⁷⁾을 통하여서, 그리고 정부나 정당의 행태에 관하여, 기여하거나 분석 내지 비판해야 하는 일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 사실 헌법학은 ① 헌법의 본질, 효력, 국가, 정당, 선거, 헌법개정 등으로 이뤄진 기본부분, ② 입법·행정·사법 등 정부구조부분 및 ③ 기본권부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헌법소송으로 다뤄지는 부분은 주로 기본권부분이다. 그리하여 지금 로스쿨에서 배우는 헌법부분은, 그리고 판·검사변호사 등 실무법률가들이 주로 헌법소송으로 다뤄져 판결례를 형성해 터득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기본권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학에서 다루는 헌법의 위 세 부분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작용하게 되어 있다. 학문적 조망 없이 헌법 조문만을 읽고 판결례만을 터득해서 헌법을 제대로 그 논리를 전개해서 말할 수 있는 헌법 부분은 없다. 그러한 까닭에 기초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은 사실은 입법·행정·사법 전반(the legal process)에 걸쳐 실무를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²⁸⁾ 무엇보다도 지금 로스쿨 체제는 이 중요한 기능을 망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학문이 나라를, 세계를, 그리고 시대를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모든 학문영역에 걸쳐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은 기초학문의 이러한 기능을 담보하는 기구여야 한다고 믿는다.

지난 2004년에 수도이전에 관한 국회 특별법이 나왔을 때(2004.1.16.) 나는 신문 칼럼²⁹⁾과 소논문³⁰⁾을 통하여 그해 10월 21일에 헌법재판소가 소위 관습헌법에 근거를 두어 내린 이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2004헌마554·2004헌마566)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수도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600여 년 동안이나 이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던 수도 서울을,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나 개헌의 경우처럼 가중된 절차도 아니고, 국회의 단순 과반수 투표만으로 그 이전 결정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헌법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겠느냐는 이론(헌법)적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수도 서울 말고도 온 국민이 관련된, 중요사항이라 헌법사항이라 할만한 사항, 예컨대 국어나 (예)국가나 국기(태극기) 같은 사항의 경우에는 비록 성문 헌법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회의 단순 과반수 표결로 다른 것(예컨대 한국어를 영어 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항들은 불문헌법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듬해 2005년에는 행정부처 일부를 소위 세종시로 이전하는 특별법(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행정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이 채택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학이론상 이 법은 위 위

점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음. 그리고 이 김영란법의 합헌결정(2016.7.28.결정 2015헌마236·412·662·673)도 참조요.

27)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담아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위헌결정(1989.1.25.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는 판례연구로 최 대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근거의 제시,” 서울대학교 「법학」, 30권 3·4호, 246-256면; 최 대권, 「사례중심 헌법학」(서울: 박영사, 2001 증보판) 등 참조.

28) 최 대권,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韓國立法學會」, 12집 1호(2015), 1-24면 참조.

29) 「문화일보」, 2004년 6월 22일,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이다” (칼럼).

30) 최 대권,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 「시민과 변호사」, 127호(2004년 8월), 15-23쪽.

헌결정에 대한 일종의 탈법행위를 구성하며 또 위 위헌결정의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 47조제1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한 위헌적인 입법이라 말할 수 있다.³¹⁾ 그러나 그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됨(2005.11.24.)으로써 사실상 합헌화되었고 소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이뤄져 오늘의 세종시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세종시로의 이전과 함께 이에 따르는 장관 등 고위공무원들의 출퇴근 등에 따르는 얼마나 큰 국가 차원의 낭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금년에는 세종시국회의사당분원설치법까지 통과(2021.9.28.)되었다. 장차 통일이 이뤄졌을 때 세종시의 의미는 무엇일지 참으로 궁금하다.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적 접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이론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이끌어 여러 개의 결정에 대하여는 오관인 결정들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소위 사죄광고 위헌결정(1991.4.1. 89헌마160)과 국유재산에 대한 민법상의 취득시효제도의 적용 배제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위헌결정(1991.5.13. 89헌가97)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들 결정에서는 헌법으로 바라보는 눈이 형성되지 못하여 하위법인 민법의 논리를 헌법으로 둔갑한 결정들이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양심이란 무엇이관데 통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실례를 했으면 실례한 사람의 사죄가 요구되는 것이 사회상규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사죄 요구를 법원이 사죄광고의 형식으로 하라고 결정하면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예. 법정에서의 증인 선서, 입영명령 등)을 법원(국가)이 강제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양심이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명하면 그것이 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이란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받는 경우만큼, 이를테면 목숨을 걸 만큼의 강한 옳고 그름의 신념의 문제지 단순한 강요·거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³²⁾ 위 국유지상의 시효취득을 배제한 국유재산법을 위헌이라 결정한 사건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선의 등으로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의 취득시효제도상의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취급하여 내린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가와 개인 사이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³³⁾

사실 과거에 헌법쟁송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³⁴⁾ 1987년의 민주화의 과실이라 할 헌법재판소의 출범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가지고 다투는 헌법쟁송이 활성화하게 되리라는 점은 쉽사리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쟁송의 체험이 전무하다고

31) 최 대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46권 3호(2002), 201-226쪽 참조.

32) 최 대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사례중심 헌법학」, 297-332쪽; Dai-Kwon Choi,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Court-Ordered Apology for Defamatory Remark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8 no.2, pp. 205-224(Summer 2000) 참조.

33) 최 대권,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위헌여부,” 「사례중심 헌법학」, 474-506쪽 참조.

34) 최 대권, 「헌법학강의」(서울: 박영사, 2001 증보판), 409-413쪽(“헌법재판의 역사”) 참조.

할만큼 드물었던 현실에 비추어 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이 새로 출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헌법쟁송법의 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이론이나 헌법쟁송의 체험을 지니지 못하고 평생 민·형사사건을 다루어본 경험뿐인 전직 판·검사·변호사로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 이뤄져 출발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방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판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선도적 역할의 하나였다. 그 외에서 수많은 헌법소송과 관련하여 논문 등 저술과 헌법참고인의 자격 등으로 헌법쟁송법의 발전과 체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³⁵⁾

이러한 선도적 역할의 하나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이 여학생만을 선발함은 남녀평등 위반·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논거를 든 남학생들의 헌법소원에 따라 이대가 헌법소송을 당하였을 때, 이대는 사립대학이라 학생선발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닐뿐더러 여성 교육의 전통, 과거 SKY대학에 이은 성균관대·한양대에 맞먹는 사시합격 실적, 적극적 여성고려정책(소위 affirmative action) 등의 논거를 들어 이대를 지지하는 논문³⁶⁾을 작성·발표함으로써 합헌결정³⁷⁾에 기여했다. 그런데 아펜젤러, 스크랜턴 등 미감리교 여선교부 선교사가 그들의 헌금과 기부금으로 마련한 터 위에 세운 감리교단 미션스쿨 이대가 김활란 총장이 이대부지 위의 기념교회로 봉헌한 감리회 소속 대신교회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해오에 따라 커다란 배신감을 지니기에 이르렀다. 대신교회는 내가 속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의 존재 이유를 밝혀보려는 우리의 연구과제의 한 주제로서는 미션스쿨 대학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서 더욱 그렇다. 서울역 건너편 언덕 위의 남대문교회는 연세대 부지 위에 서 있지만 소송관계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일이 없다.

이대가 감리회 유지재단(이대와 관계에서 미감리회 여선교부의 지위·역할을 이어 받은 한국감리교본부) 및 감리회 소속 대신교회를 피고로 하여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로 등기부상 이대 소유인 (교회)부지를 사용대차로 쓸만큼 썼으니 이제 자기네들이 쓰게 성전인 교회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이다(성전 건물 자체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감리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다). 우선 대신교회가 이대와 사용대차를 체결한 적이 없거니와, ① 미감리회와 그 여선교부가 이대의 터를 마련하고 거기에 미션스쿨인 학교를 세운 역사와 ② 김활란 총장이 그 이대의 터 위에 기념교회로 대신교회를 세워 봉헌하고 지원해 온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③ 미션스쿨 대학의 존재 이유³⁸⁾를 살펴보면, 이대 측의 처사는 법적으로 신의칙(信義則) 위반을 구성하며, 권리남용이라 할 수 있다. 그

35) 「사례중심 헌법학」 수록된 논문과 헌법판례 등 참조.

36) 최 대권, “사립여자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가 양성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인가,” 「공법연구」, 39권 3호 (2011), 293-321쪽.

37) 헌법판소 2013.5.30.결정(2009헌마514).

38) 이화학당 정관 제1조는 “...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을 한다.” 고 하고 있고, 또 이대 학칙 제1조에서는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교수·연구하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여성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점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해 보면 이대와 감리회 유지재단 및 대신교회 3자는 교육을 통하여서이나 교회활동을 통하여서이나의 차이가 있을 뿐 선교를 공동으로 하는 동역자그룹(partnership) 또는 신앙공동체(sacred community)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대신교회 부지는 이 동역자그룹이 공동소유(합유)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단순한 공유(共有)의 경우와 달리,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이대가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것은 명의신탁이 될 뿐이다.³⁹⁾ 종래에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남편 이름으로만 등기하거나 문중의 재산을 장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의 사정은 이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예컨대 문중의 장손이 문중재산의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맘대로 팔아먹거나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다고 오래 같이 산 부인을 상대로 집 쓸 만큼 썼으니 이제 집 비우고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⁴⁰⁾

그런데 이대와의 소송을 위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수십 명의 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의논해 보았는데, 예외 없이 법적 대응으로는 증여와 취득시효 두 주장뿐이고 합유 주장을 제시하는 법률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대신교회가 위임한 로펌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여서 증여와 취득시효 주장 이외에 합유를 이해시키는데 어렵게 여러 시간, 여러 날이 걸리게 마련이어서, 그래서 사건담당 법원재판부 판사들도 이대의 단독소유를 지지하거나 교회측의 증여 내지 취득시효 주장의 지지 선택 이외에 합유에 관해서 이해 못 하기로는 마찬가지로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합유·총유와 같은 공동소유 문제는 이전의 사법시험, 오늘의 변호사시험의 예상되는 출제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라 판·검사나 변호사들이 사시 등 시험때 공부했을 리가 없으리라는 가정이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학은 실은 사시(시험)법학이지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없다고 오랫동안 주장돼왔으며, 대학 사이의 합격률 경쟁 때문에 로스쿨체제 도입 이후에는 더욱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래서 합유 등 공동소유의 이해를 증진키 위해 이 주제를 학문(법사회학)적으로 접근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했으며,⁴¹⁾ 교회 측 입장을 보강키 위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게 되었다(2021.11.3.일 자).

제출된 합유에 관한 이 참고자료에 대응해서 이대를 대표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자기들의 단독소유·사용대차 주장을 보강하거나 대신교회 측의 증여·취득시효·합유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논거는 전혀 주장·제시하지 아니한 채, 대신교회 측에서 제출한 합유에 관한 참고자료에 대응하기 위한 이대 측의 참고자료로 위 합유에 관한 참고자료의 저자(최 대권)가 보수주의자라며 전혀 법 논리가 아니라 인신모욕적인 주장을 펴면서 이를 증명하려는 듯 이 저자가 두 주제 즉 자유민주주의 및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문제

3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3호 참조.

4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1호 및 제2호.

41) 최 대권, “합유에 대한 법사회학적 이해: 상호배척이 아닌 이웃사랑과 공의 실천을 위한 공생공영의 법적 주장(Partnership-Ownership(hapyu) Claim: Legal Argument for Sacred Community),” 「홍익법학」, 22권 3호(2021), 1-11쪽.

에 관해 시민단체에서 행한 연설내용 즉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는 연설 및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논설을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혹시 재판부 판사가 지녔을 진보적인 사상에 호소해서 이대 측에 유리한 결론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저자는 “원고 측은 좋게 보면 법원을 법리가 아니라 경제나 정치를 논의하는 곳으로 착각했거나, 나쁘게 보면 다투어야 할 법리를 모르거나 혹은 원고 측 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청구임을 솔직히 자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며 “법원은 정치를 논하는 곳인가?: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면서” 라는 타이틀의 반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2021.10.3.일 자). 학문의 뒷받침 없는 또는 선도적 역할이 없는 실무의 실태를 그림 그리듯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 대학이 대학의 존재 이유에 걸맞게 학문하는 곳인지의 문제를 가늠해 보았다. 그리고 선진대학에 이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선진대학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은 첫째로는 극적으로 대학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의 존재 이유는 학문하는 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우리나라 대학이면 다 있는 대학원의 현실이 과연 그러하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 현실을 금방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형의 그럴싸함에 비추어 우선 그 교육 내용의 질과 양을 보면 선진적이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대학원생에게 부과하는 독서량이 우선 부족하다.⁴²⁾ 독서량이 절대 부족한데 거기서 학문적인 질적 변화(승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에 풀타임으로 뛰면서 오후 늦게나 주로 주말에 편성된 대학원 강의에 출석하는 대학원생이 풀타임 대학원생보다 많은 현실이 이 현상에 기여한다. 학위논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국 사례를 거론하는 비교연구가 유독 우세한 것도 한 표현이리라. 질적 깊이가 중요하지 피상적으로 외국사례를 많이 나열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리 중요하랴. 잘 나가는 유명인들, 특히 정치인들이 취득한 학위논문의 표절 시비가 유독 많은 것도 그 한 표현일 것이다.

학문적인 질적 성취 없이 어느 수준의 논문을 쓰려니 표절은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미국 유명 대학 학장으로부터 너희 나라에는 표절에 관한 규정이 없느냐는 공식 질의 서한을 받았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 대학에 유학 간 우리 졸업생들 여럿이 표절 시비를 일으키곤 했기 때문이다. 대학원 과정에 한국 학생을 안 뽑겠다는 학교도 있었다. 한 번은 우리 대학의 교수 신규 채용 시 제출받은 미국 명문대학(Harvard) 학위논문이 표절이어서 그 대학 대학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명백하게 표절한 논문이 너희들의 논문심사를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 는 항의성 질의 서한을 보냈더니 그 대학원장의 답신이 ‘너희 나라에서 문제 안 삼아 잘 나가는데 우리가 왜 그 문제를 문제 삼겠느냐’ 는 답신을 받고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있다. 그 대학에는 본국인과 외국인 사

42) 내가 유학했던 미국 대학(U.C. Berkeley)의 대학원과정에서 접했던 필수 독서량과 비교할 때 그렇다.

이에 이중기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자기 나라 안에서 경쟁할 본국 학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한국대학이 세상을 리드하는, 선진대학으로의 변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선 학문의 선진대학이 되도록 대학에 투여하는 기금(돈)의 문제와 정부 규제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⁴³⁾ 나는 대학 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정확한 실상을 전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예컨대 미국의 명문대학이 운영하는 적립기금이나 연구하는 교수(학자)나 대학원 교육 등에 나가는 연구비 등의 질과 양이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크고 다르다는 것을 잘 안다. 동아일보의 “김도연 칼럼”에 의하면 하버드대의 적립기금이 63조 원을 넘었다는데, 서울대는 그 1% 남짓이고, 한국 모든 대학의 기금을 다 합쳐도 10조 원 정도란다.⁴⁴⁾ 대학등록금은 포퓰리즘의 표적이 되어 지난 13년간 등록금은 동결되었고 반값 등록금이 정치구호가 된다.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이를 이끌고 선도해야 할 대학의 장단기의 여러 학문연구 프로그램 지원자금 및 지원체제가 원활치 아니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교수들에게는 일률적 호봉제가 적용되지 성과급여제⁴⁵⁾는 없으며, 내가 체험했던 연구비들은 잔소리(규제)가 많았다. 그리고 연구성과가 정부 등에게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부처 이미지나 자기네가 미는 정책 부각 또는 홍보용으로 쓰려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반하여 비판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아니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경우에는 진리나 실상을 보려하지 아니하고 심히 반발한다. 한편 한번은 자기네가 기대했던 “보고서” 정도보다 내 학문적 욕심에 따른 제대로 된 장문의 연구 결과⁴⁶⁾를 내놓았더니, 실무자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며 감탄해마지않던 체험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학문연구 장려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 연구비 또는 프로젝트 지원은 많이 보지 못하였다.

43) 박 복영, “죽어가는 대학, 재정 개선책 마련 시급하다,” 「조선일보」, 2021년 11월 9일.

44) 「동아일보」, 2021년 11월 4일. 그리고 「조선일보」, 2021년 10월 19일, “‘큰손’ 미국 부자 대학들” (‘만물상’).

45) 나는 대학의 작은 연구소 운영을 해 본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매년 하는 업무평가는 형식적이었다. 나는 미국 버클리대 유학시 친하게 지나던 나이 많은 과 대학원 비서이자 내가 연구조교(Research Assistant)로 여러 해 모셨던 스칼라피노(R. A. Scalapino) 교수의 비서이기도 했던 그녀로부터 교수들의 성과급여제의 실상을 잘 알게 되었다. 60년대말~70년대초에 그 또래의 연봉이 3만불 정도였는데 스칼라피노 교수의 급여는 5만불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연봉 문제는 교수 본인과 총장 사이에서만 아는 문제지 다른 동료 교수는 모르게 되어 있다. 잘 나가는 스칼라피노 교수는 하버드대로부터 두 번이나 초청을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그를 버클리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총장이 그의 연봉을 올려주고 동북아연구소(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를 붙여주고 연구비도 많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었던 것이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나를 포함해서 각각 다른 프로젝트의 조력을 맡긴 5인의 연구조교가 있었다. 이것은 그가 책이나 논문 저술 등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다섯 이상이나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위로부터 연봉말고 따로 성과급 자금이 내려오는데 단과대나 과 차원으로 내려오면 실제 분배는 평등 분배였던 체험을 나는 지니고 있다.

46) 최 대권, “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 정부형태·정당·정치자금·선거제도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33권 1호(1992), 156-180쪽.; 최 대권, “정치개혁을 위한 몇 가지 생각(II): 정부형태·정당·정치자금·선거제도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33권 2호(1992), 93-125쪽.

이러한 실상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도 세계적인 선진학문을 이끄는 선진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나는 붙들고 있다. 이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이러한 명제를 내놓는 대통령 후보가 아직 없는 것이 몹시 안타깝다. 이전에 “서울대를 없애자” 또는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자”는 포퓰리스트적인 정치구호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대가 그렇게 선진적인 대학이라면 또는 학문하는 선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도, 적어도 지방국립대학만이라도 서울대 같은 선진대학으로 만들자는 정치구호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왜 안 나오는지 안타깝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이제는 국회(분원)까지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수도이전 아이디어보다도 더 훌륭한 지역균형발전 주장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론을 신봉한다. 세계를 이끄는 BTS 등 K-Pop,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으로 보여주는 한국문화는 옛 중국 사서에서 말한 가무(歌舞)에 능하다고 칭찬한 동이족(東夷族)의 장기(長技)를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인터넷에 뜨는 한국인의 IQ비교표를 보면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낸 유태인의 그것보다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한국인이야말로 사람의 머리로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를 발명해낸 유일한 민족이 아닌가?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사용한 신기전(화전, 火箭)은 실은 로켓의 원조가 아닌가? 우리의 한국대학을 과학을 앞세워 학문으로 세계를 이끄는 선진대학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야말로 지정학적인 우리의 최상의 생존 전략이자 창조주가 우리에게 준 사명이며 목표이기도 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믿는다.

지성사로 본 일본의 대학과 비판적 지식인

조 판자 / 서울대 일본연구소

1. 모순의 해소 없이 ‘역사적 정의’ 도 없다

한일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일본의 양심’ 을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이 소환된다. ‘한국병합 10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에도 자국의 아시아 침략을 비판하는 학계와 문화계의 원로들이 참가했다.⁴⁷⁾ 1910 한일병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1965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며 ‘역사적 정의’ 를 확립하자는 성명이었다. 문제는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층이 고령화와 함께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⁸⁾ 그렇다면 일본의 비판적 지성은 쇠퇴하고 ‘일본의 양심’ 은 타락한 것일까? 일본이 그러하다면 ‘한국의 양심’ 은 ‘역사적 정의’ 를 지켜내고 있는 것일까?



한일병합 10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에 참여한 일본측 지식인들이 1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김창욱 경북대 교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아라이 신이치 이바라키대 명예교수, 야마다 쇼지 린코대 명예교수, 도쿄/링남구 기자

만일 일본의 소장학자가 위 공동성명에 참여했다면 ‘반일 일본인’ 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거꾸로 한국의 소장학자가 한일병합과 한일협정의 불가역성을 말한다면 ‘친일파’ 로 매장될 것이다. 객관성에 기초한 가치중립의 연구는 애국심이나 당파성에 근거한 여론몰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과 일본의 날선 대립만이 문제일까? 인권과 다

47) 사진자료: 「한겨레신문」, 2010년 5월 10일.

48) 문재인 정부의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에 대해 아베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이미 해소된 상태라며 통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 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등 경제보복 조치로 대응했다. 일본경제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은 정부의 일방적 ‘대결 외교’ 에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국가 간 협상을 반복하려는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일본 국민 79%가 공감을 표명하고, 혐한론자들은 1965년 한일협정을 무효화하고 한국과 관계를 단절해도 무방하다는 댓글을 단다. 한국과 일본의 여론 조사에 대해서는 中國の軍事的压力「脅威」は日本88%・韓国72%…読売・韓国日報の共同世論調査, 2021.06.09., <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10608-OYT1T50284/>

양성, 소통과 공생이 강조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이념적 양극화와 분노, 혐오 문제가 가중되고, 편견과 가짜뉴스가 사건 사고를 만들어낸다. 가상 세계가 현실을 증강시키고, 반지성주의가 ‘해석 공동체’의 주관성을 재현하면서 새로운 서사와 기억을 덧씌워 간다. 서로 다른 주관과 객관이 이해관계로 충돌하면서 ‘당사자’의 입장만을 중시하다가 결국 혼돈 속에서 서로의 상식과 기억이 맞서는 싸움터가 되고 만다. 이러한 현실에서 ‘역사 왜곡’과 ‘역사적 정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일본에 대한 연구 관점은 다각적이며, 어느 하나만이 바른 것은 아니다. 메이지유신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민통합에 성공했다는 근대주의 사관도, 서구적 근대화의 결과로 침략전쟁을 일으켜 패배했다는 반근대주의 사관도 일본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볼 수 없다. 일본의 근대는 애초에 내전으로 시작해서 패전으로 끝났지만, 20세기까지 인류 사회는 전쟁을 겪으면서 변화 발전했다. 근대 일본은 청, 러시아, 영국, 미국 등 당대 동양과 서양의 최강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스스로도 희생을 치렀고, 한반도는 그 지정학의 요충지로 미중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여전히 분단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 전쟁의 역사는 한일관계를 넘어서 개개인에서부터 국가 간 관계를 가로지르는 인류사의 유산으로 후손들이 함께 풀어야 할 부(負)의 유산이다.

역사는 모순의 발전 과정이었다. 선인들은 창과 방패처럼 갈라져 서로의 입장에서 시비를 주장하다가 갈등과 희생을 거듭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창과 방패의 선악을 구별할 공정한 잣대를 공유하지 못했다. 그 모순된 상황의 해결 없는 일방적 비판이나 ‘역사적 정의’는 여전히 독선적 구호일 뿐이다. 모순 속에서 서로의 입장은 통일되지 않는다. 그 모순을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인류 공통의 지혜를 융합해낼 대안적 지성이 필요하다. ‘역사적 정의’는 당파적 주관성과 과거 해석의 문서(성명서)에서 벗어나, 누구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회 진보의 동력이 되어 미래 글로벌 사회의 지식 문화로 스며들어야 한다.

현실비판의 지식정보와 문화콘텐츠는 차고 넘친다. 필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다. 이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한 만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본을 심판하고 사죄를 받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가 초연결 사회로 변하고 갖가지 지식문화가 팽창한 만큼 생각을 확장시켜야 한다. 일본인을 포함하여 과거의 모든 희생을 빛낼 수 있도록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융합해내는 길은 무엇일까? 제국주의 팽창과 불균등 발전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은 한일의 역사인식 갈등을 되풀이하는 것에 있지 않다. 한일관계의 갈등을 두 나라의 민족감정에 매몰시키지 말고 성동격서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제국주의의 잔재로 분쟁과 가난에 허덕이는 지구촌에서 기아와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질서를 만드는 기획과 실천을 시작할 수 있다.

한일관계를 벗어난 세계적 연결 고리를 주시하며 이 글은 일본의 대학과 지성사의 맥락에서 비판적 지식인을 이해하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한 후, 새로운 지성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전후 동아시아에서 고착된 좌우대립의 편향적 인식을 벗어나서 당대 환경에서 어떤 모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한일관계만이 아니라 젠더, 세대, 시민운동, 국제사회의 모든 단위에서 대립과 갈

등이 불거진 오늘의 시대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적 지혜를 찾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2. 메이지의 ‘계몽적 지식인’

일본의 대학은 식산흥업과 부국강병을 위한 문명개화 및 인재 양성을 요청하는 시대 환경에서 태어났다. 대학이 교양(liberal arts)의 산실, 학문의 전당이란 이념을 확고하게 부여받은 것은 전후 GHQ 점령하에 교육개혁을 추진한 결과이다. 메이지기 대학의 모태는 서양서와 지식 기술을 수용하고 연구하던 막부(중앙)와 번(지방)의 번역 교육기관 및 의학교이다.⁴⁹⁾ 일본의 번역 문화가 독보적으로 발전한 것은 제국주의 팽창을 위해 지역 연구가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뿌리는 침략 야욕이 아니라 낯선 정보를 연구하고 수용하는 성실함에 있다.

1877년 도쿄대학은 막부의 번역학교(開成所)와 의학교를 주축으로 하면서 한학(漢學) 연구기관(昌平學校)을 흡수하여 법·문·이(法文理)의 3학부 체제를 설립한다. 관학에 앞서 1868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최초로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을 설립했다. 1862년 서구견학 사절단을 수행했던 후쿠자와가 귀국 후에 난학교(蘭學塾)를 영학교(英學塾)로 만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다. 게이오대학의 설립 이념은 ‘독립자존, 실학정신’에 있다. 여기에 교수와 학생의 생활 및 연구 공조를 전제로 공동체를 형성한 ‘반학반교’(半學半敎), 졸업생과 사회를 매개하여 동창회와 산학연대의 산실이 된 ‘사중협력’(社中協力),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지속하는 교육재단을 만들게 된 ‘일관교육’(一貫敎育)이 민학(民學)의 이념으로 부가된다.

문명개화에 주력했던 당대 지식인들은 근대적 법과 사상의 제도화 및 대중적 계몽을 위해 활약했다. 1873년(메이지6년) 서구 지식을 흡수한 지식인들이 계몽학술단체인 메이로쿠샤(明六社)를 결성하여 잡지(明六雜誌)를 발행하고, 유신 정부도 서구의 무도회 문화 등을 보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메이로쿠샤에는 은행가, 기업인, 귀족, 정치인, 종교가들도 참여했는데, 여기에서 후일 일본의 공식 아카데미를 대표하는 일본학사원(日本學士院)이 탄생한다. 계몽적 지식인으로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문교 행정, 일부일처제, 영어국어화를 주장하다가 테러를 당함),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 사회진화론, 법학),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자유론, 여성교육), 니시 아마네(西周, 법학, 철학),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도덕교육 修身治國非二途論), 츠다 마미치(津田真道, 군사형법, 인신매매 금지법)가 활동했다.

한국과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과 청일전쟁 지지론에서 그 침략성을 읽는다. 후쿠자와는 천부인권을 옹호하면서도 독립자강을 추구했던 냉철한 책략가이다. 막부정권을 해체시킨 메이지의 계몽적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청과 연대하여 개화와 정권을 탄압한 조선 정부는 아시아의 독립과 발흥을 저지하는 ‘공공의

49) 막부의 번역기관은 1811년 蠶書和解御用이 그 기원이다.

적’이다. 그들은 유럽제국의 동남아 식민지 팽창 시기에 청과 조선이 문명개화에 실패하고, 나아가 러시아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 일본의 독립이 위협하다는 위기의식 하에서 움직였다. 당시 청일전쟁의 지지는 일본의 영토 확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시아의 구질서를 타개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후쿠자와에게 ‘독립자존’이란 애국심을 바탕으로 문명국으로서 서구 제국과 교류할 실력을 갖추는 길이다. 『문명론의 개략』(1875)에서 그는 ‘내셔널리티’를 보국심(報國心)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 그것이 보편적 정의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간파했다. “자국의 권리(權)와 의무(義)를 신장하고, 자국의 국민(民)을 부유케 하고, 자국의 지덕을 닦고, 자국의 명예를 빛내려고 공부하는 자를 보국의 민(民)으로 칭하고, 그 마음을 보국심이라고” 한다. 애국심은 자국 내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지만, 생리적으로 배타성을 갖는다. “보국심과 편파심은 이름이 다르지만 실은 같은 것”이다. 보국심은 “타국에 대해 자타의 차별을 만들고, 비록 타국을 해할 뜻이 없어도 스스로에게 후하고 타국에게 박하며, 자국은 스스로 독립하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일시동인(一視同仁)·사해동포의 대의와 보국진충(報國盡忠)·건국독립의 대의는 서로 도리에 맞지 않고 양립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충고한다.⁵⁰⁾

전후에 마루야마 마사오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실학에서 도리(道理)와 물리(物理)의 분리를 발견했다.⁵¹⁾ 천인합일의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자연의 ‘물리’와 인간의 ‘도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근대 정치사상에서는 그 연속성을 해체하여 인간성을 해방시키고 정치적 자립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이다. 마루야마는 일본의 근세 정치사상사에서 자연으로부터 벗어나 작위(作爲) 즉, 인간의 주체적 의지와 행위가 진화하는 ‘근대성’을 그려내면서 그 대단원에 후쿠자와 유키치를 얹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도리와 자연 물리의 이치가 다른 것일까? 도리와 물리를 유교적 지배질서에 가둔 전근대의 도그마도, 인간을 자연과 종교에서 해방시킨 근대의 세속적 인간관도 모순 속에서 발전하는 시대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인식론이다. 우주 자연의 이치와 인간 삶의 이치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만큼, 도리와 물리의 합일, 즉 천인합일의 이론 및 실제 생활에의 적용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자연 현상은 모순 없이 질량과 에너지의 법칙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880년대 말부터 정부의 구화주의(歐化主義) 정책을 ‘귀족주의, 맹종주의’로 비판하면서 국수주의와 평민주의를 제창하는 저널리즘이 활발해졌다. 1870년대 후쿠자와가 국민주의에서 애국심과 배타성의 모순을 솔직히 인정했다면, 그들은 국수주의 문화와 평민 중심의 국민주의를 긍정한다.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평민사(平民社)를 결성하여 ‘아래로부터의 서구화’를 추동하면서 잡지 『국민의 벗(國民之友)』(1887)을 발행했다. 평민주의 민권운동은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이 시작되자, ‘국민의 팽창’ 논리로 국가주의를 긍정한다.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와 구가가쓰난(陸羯南)이 활동한 정교사(政教社)는 잡지 『일본인』(1888) 및 신문 『일본』

50) 福澤諭吉, 『文明論之概略』, 岩波書店, 1995, pp.274-275.

51) 丸山眞男, 福澤における實學の轉回—福澤諭吉の哲學研究序說, 丸山眞男集 3, 東京: 岩波書店, 1995, 107~130.

(1889)을 발행하면서 국수주의 문화 확립에 기여한다. 그 국수주의는 서구적 편향성과 배타적 편협성을 모두 거부하며, 동서양을 관통하는 보편타당한 가치 속에서 일본적 주체를 정립하자는 것이다.

『일본인』을 발행한 미야케는 1891년에 『진선미 일본인』과 『위악추 일본인』이라는 상반되는 개념의 책자를 출판했다.⁵²⁾ ‘진선미’란 서구의 과학기술과 동양의 학문을 두루 갖추는 진, 열강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의로운 선, 가볍고 섬세(輕妙)한 일본 독자의 미를 추구한다. ‘위악추(偽惡醜)’는 학문과 교육을 부국강병의 도구로 관리하려는 일본학술회와 문부성을 꼬집고, 쇠약한 민력(民力)을 외면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의 배금주의,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며 서양 문화를 흉내내는 경박한 풍조를 비판적으로 겨냥한 말이다. 『위악추 일본인』의 마지막 장에서는 우에노 공원에 모이는 빈민과 노동자들의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파리코뮌과 사회주의를 소개하면서 사회적 차별 완화에 힘쓸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나온다.⁵³⁾

『일본』을 발행한 구가는 1891년 제국의회에 임하는 일본의 여러 정론을 고찰한 『근시정론고(近時政論考)』에서 자신들의 언론활동을 ‘국민론과’로 선언한다.⁵⁴⁾ 그는 나폴레옹 군대에 정복당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국민정신의 각성이 일어났다면, 일본의 국민론과는 서구화의 문화 풍조에 반발하여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1876년부터 일본의 지식계에는 프랑스혁명사를 위주로 유럽의 혁명사를 소개하는 번역서가 다수 출판되고 있었다.⁵⁵⁾ 구가는 국수주의를 표방했지만, 일본 국민론과의 사상적 기원이 유럽 내셔널리즘에서 비롯함을 솔직히 인정한다. 이때 강조된 국민정신은 종교 및 정론의 차이와 무관하게, 국적을 함께하는 자들이 일치단결하여 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투표의 공공성과 국민정신의 연대감을 강조한 르낭의 연설 「국민이란 무엇인가」(1882)를 연상시키는 내용이다. 구가의 국민주의는 사회의 공정성을 추구한다. 마루야마가 구가 가쓰난의 진보적 건전성에 주목한 이후, 그 사상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중정(中正)주의로도 해석되었다.⁵⁶⁾

1897년 국수주의 정치평론가 미야케와 구가는 아시아주의 정치가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와 함께 청의 망명객인 Kangyuei와 량치차오를 지원하기 위해 동아회를 만들었다.⁵⁷⁾ 다른 한편에서는 1898년 귀족원 의장인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磨)가 황색인종과

52) 두 권 모두 柳田泉編, 『明治文学全集 33. 三宅雪嶺集』, 筑摩書房, 1967에 수록.
 53) 三宅雄二郎, 『偽惡醜日本人』, 政教社, 1891(明治24年5月), pp.81-84.
 54) 陸羯南, 「近時政論考」, 『近時政論考』, 岩波文庫, 1972, p.87. 구가는 도쿄대 법학과의 전신인 사법성 법학교에서 프랑스 법을 공부했던 만큼, 프랑스 내셔널리즘의 전파에 주목했다.
 55) 함동주, 「메이지 초기 서양사수용과 프랑스혁명관의 사회문화사」, 『동양사학연구』 108, 2009.9, pp.196-200.
 56) 陸羯南, 「近時政論考」, pp.78-79. 마루야마를 비롯한 중정 개념의 다양한 평가 및 천황제 국수문화와 결합된 국민주의, 조약개정운동에서 귀결되는 자국중심의 현실주의에 대해서는 표세만, 「구가 가쓰난(陸羯南)의 “국민” 문화-메이지 내셔널리즘의 한 단면」, 『인문과학연구』 15, 2006. 6, pp.183-210 참조.
 57) 청일전쟁의 패배 후, 청의 광서제는 Kangyuei와 량치차오를 등용하여 변법자강(變法自強)운동을 시도했지만, 서태후와 위안스카이의 쿠데타로 ‘100일 변법’으로 끝나고 Kangyuei와 량은 일본 망명을 선택했다.和田民子, 「19世紀末中国の傳統的經濟・社会の特質と発展的可能性」, 『日本大学大学院総合社会情報研究科紀要』 第8号, 日本大学大学院総合社会情報研究科, 2007, pp.287-290.

백색인종과의 경쟁을 강조하며 중국에서 무역과 교육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동문회를 결성했다. 이 두 조직은 1898년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로 합치면서 서양의 중국 분할로부터 중국을 보전하고 부흥시키자는 취지를 내걸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3. ‘비판적 지식인’의 뿌리는 ‘우익=대아시아주의’

문명개화의 핵심 주체들은 한학(주자학, 양명학, 병학 등 유교 연구)과 국학(고사기, 일본서기 등 일본의 고전 연구)의 교양을 겸비하고 서구 지식을 흡수한 하층 무사들이다. 유신 전후의 두 시대를 살다간 그들은 근대 국가의 이념과 체제를 정비하고 국민교육과 사회문화의 거점을 구축했다. 밖에서 볼 때 그들은 일본의 국권을 옹호하는 내셔널리스트들이다. 하지만 유신의 격동기에 2차례의 내전을 겪었던 그들은 자연과 인맥, 사상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서로에 대해 창과 방패처럼 대립하기도 했다. 서구화, 근대화의 관점과 방법은 서로 엇갈렸지만, 그들 각자는 그 시대의 국제적 환경에서 일본에 걸립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서구 견학에 나섰던 메이지정부의 주류 세력은 부국강병의 내치에 주력했지만, 지방의 재야에서는 열강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을 요구하고, 중화주의에 젖어서 일본의 외교사절을 모멸한 조선을 치자는 정한론이 일어났다. 그 결과 유신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西南戰爭)이 벌어졌고, 패배한 재야의 인사들은 자유민권운동을 일으켰다.⁵⁸⁾ 이들은 국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정부의 서구화 정책을 비판했다. 그 일부는 쑨원, 김옥균과 같은 아시아의 개혁세력을 지원하고 대아시아주의를 제창하면서 대륙낭인으로 활동했다.

아시아 연대의 직접적인 대상은 조선과 청의 개혁파였고, 주적은 전제정권이였다. 연대의 이념은 현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동요하면서, 청일-러일전쟁의 주전론과 침략의 명분으로도 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 민중연대에 충실한 ‘비판적 지식인’의 사상적 뿌리는 서구 문명을 이식하고 만국공법 하에서 서구 제국과 교류하려고 했던 주류 지식인보다는 자유민권운동과 정한론, 아시아 침략에 일조했던 대아시아주의에 맞는 모습을 띤다.

1880년 처음으로 아시아주의 단체 흥아회가 발족했다. 청일수호조규에서 이홍장과 친교를 맺은 해군장교 소네 도시토라(曾根俊虎)는 일본·조선·중국이 구미제국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아시아를 부흥시키자는 취지를 내걸었다. 소네는 게이오의숙에서 양학을 배운 인연으로 후쿠자와를 고문으로 초빙했고 유길준도 회원으로 맞이했다. 개국 문명화·협동·합방과 같은 대등한 신질서의 구축을 표방한 흥아회는 중국어학교를 세워 중국학과 대륙낭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⁵⁹⁾

58) 세이난전쟁에서 반란군의 사이고 다카모리가 전사한 후, 정부군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도 암살당했다.

1881년 결성된 현양사(玄洋社)는 후쿠오카를 근거지로 삼은 민권운동 단체에서 출발한다. 설립자인 히라오카 고타로(平岡浩太郎)는 세이난전쟁에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이끄는 반군에 동참했던 까닭에 도쿄에서 1년 간 징역살이를 마치고, 1878년부터 후쿠오카의 자유민권운동에 가담했다. 그 이념은 황실과 국가의 존엄 및 인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대아시아주의를 펼치는 것이다. 히라오카는 임오군란의 소식에 조선으로 의용군을 파견할 계획도 세웠고, 쑨원을 지원하는 등 현양사의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했다.⁶⁰⁾ 현양사의 후신인 흑룡회의 지도자 우치다 료헤이(内田 良平)는 그의 조카이다.

1882년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는 사회의 평등과 공중의 최대복리를 강령으로 내걸고 동양사회당을 결성했다가 해산당하자, 이번에는 현양사와 함께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을 지원하면서 대동합방론을 구상한다. 한문체인 『대동합방론』은 다루이가 1885년에 집필을 시작하나 오사카사건으로 투옥되는 바람에 1893년 나라 지방에서 모리토모(森本藤吉)라는 이름으로 출판된다. 이 책은 러시아의 남하로 조선의 자주 독립이 유명무실해질 상황을 내다보며, 한국 및 중국과 함께 대응할 일본의 태세를 연구한 것이다.

청일전쟁 이전 동북아 정세에 대한 그 현실인식의 요점을 보자.⁶¹⁾ 일본과 조선에서는 서북 숙살(肅殺)의 기운과 달라서 동쪽 기운인 친화(親和)를 발육시킨다. 일본은 화(和)를 존귀하게 여기고, 조선은 인(仁)을 존중한다. 양국이 국정의 본원과 이해를 연합하여 ‘대동’ (大東)이라는 국호로 합방할 수 있다. 세계 60여 개국의 무역금액 순위는 영국 1위, 러시아 7위, 중국 12위, 일본 18위, 조선 47위로, 중국은 백성이 곤궁하여 민심이 흉흉하지만 “동방의 강국”이다. 이처럼 다루이는 청과도 ‘동국합중(東國合從)’ 하여 아시아를 방위하고 부흥시킴으로써 서양제국의 분열과 경쟁 상태, 황/백인종 사이의 빈부의 격차를 극복하고, 세계를 통합하는(宇內一統) 모범과 업적을 만세에 남기자고 한다. 결론에서는 “아시아 황인국의 일대연방(亜細亞黃人國之一大聯邦)”을 수십 년 내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이상론은 청일전쟁으로 일본 내셔널리즘이 분출하면서 제국주의론을 보완하게 된다.⁶²⁾

아시아주의자들은 서로 연계하며 활동했다. 후쿠오카의 낭인인 스키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는 루소의 민약론과 프랑스혁명사에 감명을 받고 도쿄로 나가 자유당의 오이 겐타로와 교류했다. 1885년 후쿠오카로 귀향한 스키야마는 현양사의 히라오카와 도야마 미쓰루(頭山滿)를 만난 후 그들을 보좌하며, 현양사의 경제적 기반 확립과 규슈 지역의 언론 확립에 힘쓴다. 『후쿠류신보(福陵新報)』(1898년 『九州日報』로 변경)의 번외(番外)기자로

59) 소네는 청불전쟁에 무관심한 이토 정부를 비판하고서 말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대륙낭인으로 살았다. 黒木 彬文, 「興亜会のアジア主義」, 『法政研究』 第71卷 第4号, 九州大学, 2005, pp.615-655. 狭間直樹, 「初期アジア主義についての史的考察(2)曾根俊虎と振亜社」, 『東亜』 411卷, 霞山会, 2001.9, pp.88-98. 홍아회의 활동과 조선 개화 지식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현주, 「1880년대 전반 조선 개화지식인들의 ‘아시아 연대론’ 인식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2011, pp.307-347. 최종길,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조선인의 반응-홍아회를 중심으로」, 『사림(성대사림)』 56권 0호, 2016, pp.97-125 참조.

60) 黒竜会, 『東亜先覚志士記伝 上巻』, 黒竜会出版部, 1933-1935, pp.860-868.

61) 이 단락의 인용·요약 부분은 森本藤吉 『大東合邦論』, 1893, pp.1-8, 38-39, 56-70, 84-85, 105-132, 141 참조.

62) 대동합방론에 대한 우호적 해설로 竹内好, 「日本のアジア主義」, 『日本とアジア』, 筑摩書房, 1993, p.318-323(초판: 『現代日本思想大系(9) 아시아主義』, 筑摩書房, 1963).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이 활약했다.

1896년 흥아회의 소네는 일본을 공동방위하기 위해 러시아와 청이 군사 밀약을 맺은 사실을 상세하게 분석한 『러청의 장래』를 출판한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의 대가로 만주에 동청철도(東清鐵道) 부설권을 획득하고, 랴오둥반도를 조차했다. 소네는 “세상을 덮을 용기와 위대한 목적”을 가진 러시아와 “지기쇠모(志氣衰耗)”한 청의 동맹을 주종관계로 보며, 러시아를 ‘시대의 대세’로 인식한다.⁶³⁾ 러시아가 동북3성(遼寧省, 黑龍江省, 吉林省)을 점령하고자 하며, 흑룡강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 경영한다는 보고도 상세하다. 머리말에서는 러시아 세력이 장차 청과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의 대세에 미치는 득실을 따져보라고 촉구한다. 이로써 중국 혁명을 지원하려는 일본 내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1880년대에 반정부 전선을 형성했던 민권운동가들은 1890년대 의회진출과 청일전쟁을 계기로 국민적 통합 구도에 합류되어간다. 오이 겐타로의 경우를 보자. 그는 프랑스 민선의원 선거법에 대해 번역 출판하고, 유신정부를 전제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비판했다. 1874년 가토 히로유키의 민선의원 시기상조론을 무사의 우민(愚民)론으로 비판하며 ‘하류의 민권설’을 펼쳤다.⁶⁴⁾ 농민 출신인 그는 수감 생활 중에 토지평분(平分)법을 연구하여 출감 후 출판한 적도 있다.⁶⁵⁾ 1890년에는 자유당의 부흥을 위해 나카에 조민과 결합하나 선거 결과가 부진했다. 민권 사상가 나카에 조민과 결별한 오이는 다시 다루이와 함께 동양자유당을 만든다. 1892년 11월에 창당한 그 취지문에는 국권을 옹호하는 내셔널리즘과 제국의식의 팽창 과정이 잘 드러난다.

오늘의 세계는 국제적 경쟁의 세계이며, 오늘의 시대는 국민적 운동의 시대다. 우리 일본이 세계의 대세로 활보하고 동양의 활기 속에 우뚝 서려면 오랫동안 대외정책의 국시를 정하여 대외경제의 장계(長計)를 세우고, 병략상략(兵略商略)을 병행 추진하여 부강의 근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 · · · ·) 관민조야(官民朝野) 동심협력하여 크게 대외정책을 강구하고, 국고는 5·6백만 내지 1천만 엔의 자원을 지출하여 무형적 철도를 중국·조선·시베리아에 부설하고, 상공(商工)을 비롯한 학자·정치가 등을 지도하여, 아시아 대륙에 향하여 각자 독특한 기량을 떨치어 일대 운동을 이루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운동의 세력이 능히 동아의 형세를 일변시키면, 대유럽 정책도 또한 역시 성립되지 않겠는가. 어찌 국제적 경쟁의 장계가 아니겠는가.⁶⁶⁾

동양자유당이란 이름에서부터 서구제국주의와의 경쟁을 강렬하게 의식한 일본발 아시아주의의 취지가 드러난다. 1880년대 조선의 개혁에 개입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을 공유했던 오이와 다루이는 1890년대에 일본의 자본으로 아시아를 개발하자는 장기 계획을 세운다. 이에 동의한 투자가로부터 남양무역과 이민사업을 제안 받은 오이는 무역상회

63) 曾根俊虎, 明石順吉 編, 『露清の将来』, 明石順吉, 1896, pp.1-3.

64) 하류민권설과 프랑스 민주주의 수용에 대해서는 山口光朔, 「フランス民主主義思想と自由民権」, 『講座・日本社会思想史/明治社会思想の形成』, 増補版: 芳賀書店, 1969. pp.95-106 참조. 논쟁 당시 가토는 천부인권설을 수용했지만, 1882년부터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 루소를 천부인권의 망상가로 말하고, 프랑스혁명에서 민권 남용이 폭정의 폐해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加藤弘之, 『人權新説』, 谷山楼, 1882, pp. 9-11.

65) 大井憲太郎, 『時事要論』, 板倉中, 1886. pp.65-90.

66) 平野義太郎, 「東洋自由党組織の趣旨」, 『馬城大井憲太郎伝』, p.294.

의 경영을 시도하고, 1898년 헌정당 결성에도 적극 참여했다.⁶⁷⁾

‘강좌파’로 불리는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은 오이를 ‘자유당 좌파, 급진파’, ‘민권 좌파’로 주목했다. 여기에서 ‘좌파’ 오이와 ‘우익’ 대륙낭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강좌파의 주요 필진인 법학자 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는 1938년 오이 겐타로의 일대기를 출판하면서, 그를 민권 신장에 공헌하고 아시아주의 이상을 펼친 ‘준결, 장군’으로 불렀다.⁶⁸⁾ 오이는 1922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우익’ 호칭을 모면한다. 하지만 봉건성 해체와 근대적 개발을 추구하고 전쟁을 혁명의 계기로 삼는 태도는 일부 비전문자를 제외하고 좌익과 우익에 공통된 시대적 추세로 나타났다.

히라노 자신은 전후 일본에서 진보적 평화운동가로 이름을 알리면서 재일조선인의 반미운동과도 연대했지만, 그도 전시기에 옥중 전향하여 대아시아주의를 피력했다.⁶⁹⁾ 1945년에 출간한 『대아시아주의의 역사적 기초』에서 “아시아에서 식민지 태세 타파의 선구자는 우리 일본이며, 앵글로색슨의 세계 구질서 타개의 창시자도 또 일본”이라고 쓴다.⁷⁰⁾ 히라노는 전후 일본에서 아시아의 부흥과 반미 평화운동을 지속하면서 전전 일본의 대동아공영의 이념과 아시아해방전쟁의 의의를 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주의에서 좌익과 우익을 구별하는 것은 당대적 정황과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정확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만, 불세비키 이론이 유입된 1920년대부터 사회사상 운동에서 좌/우 갈래가 나뉘어 대립한 것도 사실이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1920년대 “다이쇼 중엽에서 쇼와 초기에 걸쳐 우익과 좌익의 대항관계”가 펼쳐진 가운데, 좌익들이 천황제의 민족문제에 직면하여 전향한 후에 “귀환하는 곳이 대체로 아시아주의, 사이고(西郷)”였다고 한다. 그 결과 “아시아주의는 우익이 독점”하고, “좌익은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리즘을” 포진시켰다는 분석이다.⁷¹⁾ 우익 혁명가인 기타 잇키(北一輝)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의 평민사와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의 흑룡회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흑룡회에 합류하면서부터 우익이 아시아주의를 독점했다는 것이다.

다케우치는 메이지 정부가 대륙 침략정책을 ‘아시아 공동방위’의 논리로 ‘은폐’했다면, 대아시아주의는 오히려 정부의 침략 ‘은폐’에 반대했다고 지적한다. 히라노 요시타처럼 중일전쟁 이후 국책에 편승한 지식인들이 정부의 은폐에 가담했다면, 현양사와 흑룡회는 그 거짓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⁷²⁾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그들의 진의에 있지 않다. 아시아에서 구체제의 변혁은 또 다른 전쟁과 혁명, 정치적 지배와 사회적 모순을 일으켰다. 그 와중에 서구제국과의 적대적 대립을 절대시하며 ‘아시아 해방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좌우익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다.⁷³⁾

그러나 서구로부터 유입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감흥을 느끼지 않는, 전후의 신도사상가 아시즈 우즈히코(葦津珍彦)는 좌익과 우익의 구별을 무시한다. 그에 따르면 나카에

67) 高橋賢, 「大井憲太郎と南洋貿易」, 『愛知大学総合郷土研究所紀要』 第58号, 愛知大学総合郷土研究所, 2013, pp.191-204.

68) 平野義太郎, 『馬城大井憲太郎伝』, 大井馬城伝編纂部, 1938, pp.1-4.

69) 平野義太郎, 『大アジア主義の歴史的基礎』, 河出書房, 1945, 서장.

70) 平野義太郎, 『大アジア主義の歴史的基礎』, 河出書房, 1945, 서장.

71) 竹内好, 「日本のアジア主義」, p.339.

72) 竹内好, 「日本のアジア主義」, 『日本とアジア』, p.291.

73) 이 책의 제5장 4절 참조.

조민의 대러 주전론도 전향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권운동의 조류를 가장 정직하게 단적으로 반영” 한다.⁷⁴⁾ 나카에는 청년시대부터 사이고를 동경했고, 메이지 10년대에는 현양사원들과 함께 대륙옹비를 꺾하였으며, 메이지 20년대에는 굴욕조약 반대를 외쳤다.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은 존왕양이, 정한론, 민선의원 건립과 국회개설 운동을 거쳐 오면서 늘 국권의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아시즈의 논리는 일본 근대사에서 데모크라시와 내셔널리즘이 결부된 사실을 드러낸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공황이 닥치자 1920년대 일본에서는 반근대적 농본주의가 발흥하고 농촌자치론이 부상했다. 이것이 흑룡회의 아시아주의 및 쇼와유신 세력의 국가사회주의와 결합하게 된다. 곤도 세이쿄(権藤成卿)는 1920년 『황민자치본의(皇民自治本義)』를 저술하여 사직(社稷) 자치론을 펼친다. 사직은 고대 중국에서 천자나 제후가 새로 건국할 때 제사를 지내던 토지신과 곡신을 이르는 말로, 국가는 사직(토지와 곡물)을 공유하며 성립한 자치집단을 의미한다. “사직을 근본으로 하는 일본 민족의 전범이 공동화협(公同和協), 공존공제(共存共濟)”에 있다는 자치론은 단순한 농업자치국을 넘어선, 원시공산주의에 자유·평등한 사회적 진화를 결합시킨 캉유웨이(康有為)의 ‘大同’과 유사한 이상국가론으로 해석된다.⁷⁵⁾

곤도의 책은 아시아적 농경 생활에 기초한 공동체를 자본주의 근대 국가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제사장인 천황의 직접 통치로 만민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국가개조론을 펼친 셈이다. 해군의 혁신과 장교에게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명저”로 평가되었고, 그 숭배자들에게 곤도는 “일본정신을 체득하고 시무(時務)를 아는 활학자(活學者)”로 숭배된다. 아시아주의자들과 교류한 곤도의 사상은 오카와 슈메이와 기타 잇키의 일본개조론, 아시아부흥론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⁷⁶⁾

농본주의자들은 1929년 세계 대공황과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정치적 테러에 직접 관여하거나 만몽개척에 참가했다. 농촌의 근로학교인 애향숙(愛郷塾)을 설립한 다치바나 고자부로(橘孝三郎)는 1932년 우익 테러(5·15 사건)에 가담한다. 농촌출신의 청년장교들은 병농일치의 국가개혁을 꿈꾸며 황도(皇道) 구현을 위해 군부 쿠데타를 기도한다. 우익은 1936년 2·26 사건을 쇼와유신으로 호칭한다. 농업학교를 창설하고 농업 교육과 무도(武道) 교육의 결합을 주장한 가토 간지(加藤完治)는 ‘만몽개척 이민’의 이주 책임자로 활약하고 ‘만몽개척 청소년의용군 훈련소’를 건립한다.⁷⁷⁾ 이처럼 1930년대에 농본주의의 다양한 정서와 실천이 일본의 대륙 경영에 동원되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농본주의와 아시아주의를 포함한 우익 세력은 전범으로 소환되고, 부활한 공산당은 다시 ‘천황제 타도’를 중심 의제로 삼았다. 그러나 천황 친정으로 ‘일본개조’ 및 ‘아시아 향토공동체’의 실현을 주장했던 아시아주의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그들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가 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방해하고 천황의 통수권을 찬탈하여 전선을 확대한 것으로 전쟁 책임을 군부에 돌렸다.⁷⁸⁾ 우익은 군부 과시

74) 葦津珍彦, 『明治維新と東洋の解放』, p.115.

75) 井田輝敏, 「権藤成卿の思想構造」, 『松山大学論集』 第9巻 第6号, 1998. 2, pp.408-401.

76) 위의 글, p.430.

77) 中村薫, 『加藤完治の世界: 満洲開拓の軌跡』, 不二出版, 1984; 한석정, 노기식, 『만주 동아시아의 융합 공간』, 소명출판, 2008, p.203.

즘의 ‘악’이 아니라, 자본주의 문명화를 비판한 혁명적 대안 세력으로 주목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경유착으로 부패한 의회제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도시화로 폐쇄된 농촌을 구제할 방법을 실천한 셈이다.

4. 전후 비판적 지성의 분화와 쇠락

전후 일본의 지식계는 패전을 딛고 민주주의와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비판지’를 다양하게 발흥시켰다. 서구 학문을 흡수한 지식인들은 천황제의 신화성에서 탈피하여 시민적 주체성이 확립을 추구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를 팽창시킨 일본의 근대를 연구했다. 그 중에서도 이와나미서점 출판사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이와나미 문화인=진보적 지식인’들이 비판적 지식인의 주류를 형성한다. 이들 각자는 전전의 경험이 상이하고, 전후의 학문과 실천의 행보도 다양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모을 수 없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일본과 미국의 단독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면서부터 일본사회에 비판적 지식인 그룹이 대두하였다. 당시 그들은 구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전면강화(全面講和)를 주장했고, 냉전시대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호헌 평화, 비무장 중립, 전후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논단을 이끌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아시아주의가 공존했기에 비판적 지식인들의 사상적 계보와 실천적 지향은 단선적이지 않고, 전전과 전후를 연결하는 지점도 각기 다르다. 서구와 아시아를 잇는 중점에 일본을 놓고 그 사상지형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서구와의 관계에서 일본 근대를 조명하거나, 서구의 식민지를 경험한 아시아에서 일본 근대와 아시아와의 관계를 사상적, 실천적으로 모색했다.

마루야마는 전후민주주의의 계몽적 지성을 대표한다. 그는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정’을 연구하여 농촌 공동체가 초국가주의에 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정신구조를 극복하고자 했다. 미국에 의해 이식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그는 자유의 내면적 확립과 일상의 실천을 화두로 삼았다. 전공투 학생들의 공격을 받은 그는 “정치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인간의 정치활동에 의해서만 데모크라시는 언제나 생생한 생명을 부여 받는다”고 믿었다.⁷⁹⁾ “민주주의란 인민이 본래 제도의 자기목적화—물신화—를 부단히 경계하고 제도 실현의 움직임을 부단히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세에 의해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⁸⁰⁾

대학과 언론 출판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후의 비판적 지성은 일본의 지성사 계보에

78) 중국에서 활동한 아시아주의자와 관동군(이시와라 간지), 그리고 동아협동체론의 전향 좌익은 도조 히데키와 대립했다. 이러한 사실은 우익의 반근대적 아시아 혁명론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근거로 활용된다. 오카와 슈메이가 도쿄재판에서 도조 히데키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이 유튜브에서 회자된다. 東京裁判 - 東条英機の頭をはたく大川周明, (<https://www.youtube.com/watch?v=DiXcg36Oa-M>).

79) 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来社, 1964, pp.458-459.

80) 丸山眞男, 『日本の思想』(岩波新書, 1961, p.156)

서 볼 때 얼핏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교양주의를 잇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 다이쇼의 리버럴리즘이 농본주의나 천황제 국체론의 내셔널리즘에 압도당했듯이, 전후의 계몽적 지성도 일본과 아시아의 민족주의적 에토스에 전복되어 간다. 민중사상사 연구자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는 전후의 계몽적 지성이 다수 일본인들의 생활경험에 밀착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⁸¹⁾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이 이식한 전후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풀푸리 내셔널리즘의 자율성을 옹호하려고 했고, 신좌익은 일본자본주의 지배구조와 결탁된 전후민주주의를 비판했다.

1960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투쟁의 폭력화를 견제하며 “국회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형성되자, 신좌익 계열에서 요시모토 다카야키(吉本隆明)가 「의제의 종언」을 선언했다.⁸²⁾ 의회제 민주주의에 안주한 공산당과 언론, 지식인의 기성세대를 모두 ‘거짓 민주주의’로 야유하고, ‘싸우지 않는’ 전후민주주의에 사멸을 선고한 것이다. 마루야마는 1969년 도쿄대 전공투에 의해 ‘전후민주주의의 기만적 지배구조를 사상적으로 지지한 어용학자’로 공격당한다.

도쿄대 법학과 일본정치사상연구에서 마루야마의 후배와 제자를 중심으로 마루야마 학파가 형성되는데, 그 내부에서부터 ‘비판적 지성’이 분화하면서 ‘근대의 초극’을 환기시키는 새로운 사상연쇄를 자아낸다. 마루야마가 농촌 공동체를 초국가주의의 배양 기지로 보았다면, 이제 근대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치사상에서 비껴나가는 독보적인 연구 성과들이 활발해진 것이다. 후지타 쇼조(藤田省三)는 농본주의를 관료 정치에 반대한 “비정치적인 자주적 공동체” 운동으로 이해하고, 상징천황제의 정신구조에서 ‘안락의 파시즘’을 읽어냈다. 하시카와 분조(橋川文三)는 향토적 자치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우익의 논리와 심정을 연구 과제로 삼았다. 하시카와의 작업은 전후의 험란한 시대 변화 앞에서 서구문명에 대한 노예라는 자각과 ‘노예의 반란’ 정신을 촉구한 다케우치 요시미, 신좌익의 정신적 지주로 등장한 요시모토 다카야키(吉本隆明)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시카와는 우익에게서 내셔널리즘과 데모크라시의 상관성을 이끌어낸다. “일본의 ‘우익’이란 극히 순진 소박한 무사주의(士族主義)에 불과”하지만, 그들도 근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행위자였음을 밝힌 것이다. 그 실례로 정한론의 사무라이로 자유민권단체인 애국사의 일원이었던 시마다 이치로(島田一郎)가 거론된다. 시마다는 1878년에 “공의(公議)를 두절하고 민권을 억압하여, 정사(政事)를 사(私)적인 것”으로 취급했다는 이유로 유신정부의 수뇌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를 암살했다.⁸³⁾ 하시카와는 시마다의 명분이 루소의 ‘일반의지’에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마루야마가 「군국지배자의 정신형태」에서 추악한 무법자(폭력)로 인식한 대륙낭인의 사상을 일본 민족의 ‘생명사상’과 ‘죄의식’ 등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한다.⁸⁴⁾

81) 安丸良夫·喜安朗, 『戦後知の可能性: 歴史・宗教・民衆』, 山川出版社, 2010, p.4.

82) 吉本隆明, 「擬制の終焉」, 『民主主義の神話-安保闘争の思想的総括』, pp.43, 70. 의제(擬制)는 법률상의 용어로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일한 효과로 취급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형법상에서 전기(電氣)를 재물로 보는 것과 같은 일인데, 요시모토가 의도한 ‘의제’는 의회제 민주주의에서 의회의 결정을 국민의 의사로 동일시하는 것을 ‘위선, 가짜’로 비판하는 함의를 갖는다.

83) 橋川文三, 『ナショナリズム』, 紀伊国屋書店, 1994, p.186.

한편, 아시아주의의 새로운 해석은 중국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행된다. 다케우치는 ‘국가의 총력을 들고서’ 싸운 것은 일부의 군국주의자가 아니라,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이었지만, 국민은 군국주의자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총력’을 냈던 것이라고 말한다.⁸⁵⁾ 패전의 허탈감은 일본 아시아주의의 자부심, 즉 식민지로 전락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킨 아시아의 ‘맹주-주체’라는 자부심을 앗아갔다. 대신 서구제국의 침략을 대행한 ‘지배자=서구의 노예’였다는 자각이 퍼지고, 패전과 점령으로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라는 위기의식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다케우치는 루쉰(魯迅) 연구를 통해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를 비교하면서 일본의 ‘근대화=종속화’를 비판했고, 아시아의 독자적 역사발전을 전망하는 민족주의의 부활을 촉구했다.⁸⁶⁾

「근대주의와 민족의 문제」(1951)라는 글에서 그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도 일본공산당도 근대주의에 젖어 민족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불러일으켜 지배를 강화한 파시즘에 저항하지 못했다며 근대주의를 비판한다. 당시 다케우치는 일본이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자주적 국민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의 내셔널리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⁸⁷⁾ 그러나 전전과 전후에 걸쳐 일본공산당이 민족문제를 외면했다고 보기 힘들다. 다케우치가 민족문제를 제기하던 1951년 당시에도 공산당과 급진적 노동운동에서는 일본을 ‘식민지’로 인식하고, 소련과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의 강화회담에 반대하고 있었다.

다케우치는 1959년 글에서 ‘근대의 초극’이 복고와 유신, 존왕과 양이, 쇄국과 개국, 국수와 문명개화, 동양과 서양이라는 과제를 양손에 엮고서 달려온 일본 근대의 아포리아(난제)를 응축시킨 명제였다고 지적한다.⁸⁸⁾ 일본 근대사에서 그 어느 하나도 포기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다케우치도 민족주의와 근대주의가 방패와 창처럼 대립하면서 공존해온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전후 부흥에 성공하고 안보투쟁이 활발해진 1950년대 말부터 우익의 정서와 행동 원리에 대한 학술 연구가 시작되었다. 일본인의 희생을 좌파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개죽음’으로 묘사했지만, 국가에 대한 분노와 비판만으로 희생된 영혼이 구제될 수 없었다. 자본주의와 국가주의에 포섭된 ‘우익=전범’의 부정적 이미지와 다른 차원에서, 우익사상이 ‘민족·민중 사상’의 한 범주로 영입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해석학에서는 서구적 합리주의로 접근할 수 없는, 동양적 전통과 맞닿은 ‘일본인의 정서’,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농본주의’, 공동체를 중시하는 ‘향토주의’ 등이 포착된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지배 권력의 국가주의로부터 ‘저항 민족주의’를 분리시키고 그 의미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과 비슷하다.

새로운 시대 분위기에서 하야시 후사오의 ‘대동아전쟁 긍정론’도 제기되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이 개항기부터 서양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동아

84) 橋川文三, 『昭和維新試論』, 講談社, 2013, pp.68-73.

85) 竹内好, 「近代の超克」(1959), 『近代の超克』, 富山房, 1979, p.314.

86) 竹内好, 「中国の近代と日本の近代—魯迅を手がかりとして」(1948), 『日本とアジア』, pp.11-57.

87) 竹内好, 「アジアのナショナリズムについて」(1951), 『日本とアジア』, p.114.

88) 竹内好, 「近代の超克」, 『近代の超克』, 富山房, 1979, p.338.

시아 100년 전쟁’을 수행했으며 일본의 전쟁은 패전으로 끝났지만 1945년 이후 중국 혁명,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대미 전쟁이 지속됐다.⁸⁹⁾ 그의 평론은 체계적 논리를 결핍했지만 앵글로색슨족의 세계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전쟁사를 부각시키며 그 세계사의 맥락에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대동아 전쟁’의 의미를 매겨두려고 한다. 즉, 비동맹권의 반제 민족운동을 타고 고조된 ‘아시아 연대의식’에 기대어, 전후 일본의 군사적인 식민화 상태를 구제하고 전일본의 영미제국에 저항했던 민족주의의 현재적 의미를 복원시키려는 의도다.

진보적 지식인은 아니지만 과시즘과 결별하며 천황제를 공동체의 문화적 기초로 재정립하려는 전통 우익도 있다. 전후 보수주의의 한 갈래를 대표하는 신도계의 아시즈 우즈히코(葦津珍彦)는 ‘유럽의 반동성’과 ‘아시아 민족주의’의 대결 구도를 설정한다.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가 발행한 『사상의 과학』에도 글을 쓰고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신뢰를 받았던 아시즈는 우익의 대부인 도야마 미쓰루(頭山滿)의 지도를 받고서 흑룡회와 함께 활동했기에 스스로 대륙낭인의 마지막 세대로 말한다. 아시즈를 지도한 도야마는 “시세에 아첨하지 않고, 세속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이익을 찾지 않고, 허명을 추구하지 않고, 악명(惡名)을 감수하고, 일어나면 참간(斬奸)의 검을 휘두르고, 높고 고귀한 조국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익”이라고 가르쳤다.⁹⁰⁾

아시즈는 천황의 왕도정치를 직접 실현하는 일본과 존황신도(尊皇神道)를 주장함으로써 미시마 유키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에 따르면, “20세기 세계사는 아시아 내셔널리즘의 웅대한 전개를 기록한다. 19세기 일본의 메이지유신은 이 아시아 내셔널리즘 발전사의 서곡이었다.” “일본 군부의 주관적 의도가 어떤 것이었을지라도, 일본의 군사력이 아시아의 식민지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작용을 한 객관적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⁹¹⁾ 메이지유신에서부터 ‘아시아 내셔널리즘의 발전사’를 정립한 것은 러시아·소련과 영미제국과의 ‘최종전쟁’을 숙명으로 삼았던 ‘동아시아 제국 일본’의 전쟁사에 ‘제3세계 민족운동’의 의의를 부여하는 효과를 낳는다.

1960년대 후반, 신좌익 운동의 자극을 받아 신우익이 대두한다. 신우익은 미일안보협력을 부정하고 전후체제 타파를 외친다. 1970년대 평론계에는 하시키와와 다케우치의 계보를 잇는 마쓰모토 겐이치가 등장하여 우익의 사상적 기반과 정치적 성격을 재정립한다. 마쓰모토는 기타 잇키와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 등을 통해 우익사상에 내포된 아시아 연대의 가능성과 좌절을 보여준다. 저널리스트 출신의 나카노는 동방회 총재로도조 히데키의 독재에 저항하다가, 1943년에 동방회 회원들과 함께 ‘일본의 패전’ 낭설을 유포한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출소되었지만,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아들과 동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결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⁹²⁾

89) 「大東亞戦争肯定論」은 『中央公論』 1963년 9월호부터 연재를 시작했고, 1964, 1965년에 걸쳐 출판된 두 권의 논집은 출판사를 바꾸면서 1968년, 1976년에 거듭 간행된 후, 반미 아시아주의가 부활한 2001년과 2006년에 재출간되었다. 林房雄, 『大東亞戦争肯定論』, 番町書房, 1964, pp.19-23, 135-138.

90) 荒原朴水, 『大右翼史』, 秀文社, 1966, 표지의 안쪽에 제시됨. 인용문의 번역은 한상일, 「일본의 우익 사상과 아시아주의」, 『일본비평』 10호, 2014. 2에서 재인용.

91) 葦津珍彦, 『明治維新と東洋の解放』, p.5.

기타와 나카노의 ‘저항 의지’를 재조명한 마쓰모토는 우익 사상의 본질이 내셔널리즘과 아시아주의에 있다고 밝힌다. 「사상으로서의 우익」(1976)이란 평론에서 마쓰모토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구미의 선진 자본주의 열강의 압박 하에 저항으로서 성립한 사상”이라면, “내셔널리즘은 우익 사상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단언한다. 일본의 우익이 “아시아의 혁명운동과 독립전쟁에 연대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행동이 아시아 내셔널리즘의 발현이었기 때문”이다. 동어반복처럼 들리는 우익 옹호론은 ‘지배세력=보수’를 삼입함으로써 새롭게 정리된다.⁹³⁾

마쓰모토는 일본의 권력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면서 서구문명을 수입한 ‘리버럴=보수’가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배제와 통합을 반복하며 줄곧 권력을 유지했다고 진단한다. 전전 일본의 지배자가 우익이라는 인식은 전후민주주의가 만들어낸 신화라는 것이다. 그는 ‘좌익/우익’과 ‘지배/저항’의 대립항 사이에 ‘보수’를 끼워 넣는다. ‘보수’는 원래 자유주의자를 의미하는 리버럴리스트의 일본식 번역어라고 한다. 즉, 대미 협력을 유지하며 근대 이후 국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성향의 지배 세력이 보수다. 메이지 국가체제와 근대화 노선에 대해 우익은 민족의 입장에서 반대했고, 좌익은 계급의 입장에서 반대했다고 한다.⁹⁴⁾ 이로써 ‘반미우익’이 아닌 ‘친미보수’에게 아시아 침략의 원죄를 되돌려 줄 논리적 근거가 준비된다.

마쓰모토의 논리는 도쿄재판에서 ‘침략전쟁의 주범’으로 심판받은 우익을 구제한다. 제국주의 전쟁은 미국의 압력으로 근대적 문명개화를 추진한 국가의 귀결점이며, 그 책임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침략전쟁에 우익을 이용하고, 전쟁책임자로 우익을 심판했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구성된다.

그러나 ‘우익 구하기’의 서사는 방어적 어법으로 마무리된다. 보수와 결탁한 우익이 “침략적 일본에 저항하지 않는 아시아를 요구”함으로써 “아시아주의의 타락”을 스스로 가져왔다는 것이다.⁹⁵⁾ 결국, 우익은 서구에 의해 강요된 근대사에 저항하여 아시아의 민족적 연대와 해방의 역사를 창조하고자 했으나 현실에서 늘 실패했다. 그 트라우마를 원천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전후사에 ‘일본적 한의 정서’가 서린다. 보수는 전후에 다시 미국과 제휴하여 지배구도를 장악했지만, 우익은 전후민주주의에 의해 또 다시 거세당한 ‘역사의 실패자’로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탈냉전으로 확산된 ‘탈전후’ 운동에는 전후민주주의의 ‘이식’된 가치와 제도를 부정하거나 지양하려는 움직임이 포함된다.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세계에서 반미 열풍이 불자, 넷우익은 미국에 의해 규정된 전후체제의 타파와 일본의 전쟁범죄를 심판한 ‘도쿄재판사관’의 극복을 주장했다. 전후 좌파 진영에서 일본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락한 식민지로 규정했던 논리가 확대되어, 일본의 ‘대미 중

92) 마쓰모토 겐이치, 「아시아주의자의 원상(原像):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의 경우」, 『일본비평』 10호, 2014. 2.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방문한 적이 있는 나카노의 사상과 운동에 대해서는 千坂恭二, 「中野正剛と東方会: 日本ファシズムの源流とファシスト民主主義」, 『思想としてのファシズム』, 彩流社, 2015, pp.14-40 참조.

93) 松本健一, 『思想としての右翼』, 論創社, 2007, pp.57-58.

94) 위의 책, pp.5-7.

95) 위의 책, p.59

속성’에 대한 ‘민족적 책임’을 거꾸로 묻고 있다. “대동아전쟁의 정체, 그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이었다”라는 주장이 일본의 서점가와 인터넷에 떠돌았다.⁹⁶⁾ ‘아시아해방을 위한 반미투쟁’이라는 자기정당화의 해석학이 일본인의 반미적 자주성을 고취시키는 망령이 되었다.

『영속패전론』(2013)이란 베스트셀러로 각광을 받은 시라이 사토시는 전후 일본의 핵심 문제가 대미종속의 ‘영속패전 구조’에 있다고 역설한다. 1977년에 태어난 신예의 ‘비판적 지식인’ 시라이는 일본의 전후체제가 대미종속(식민지)을 본질로 한다고 이해하며, 그 사상적·정치적 극복의 과제를 중시한다. 이는 아시아의 민족통일전선이나 프롤레타리아 연대를 강조하다가 일국 내셔널리즘에 회귀한 냉전기 좌익, 거슬러 올라가 백인 제국주의에 저항한 전전 우익의 민족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들은 ‘주체의 결핍’과 ‘영속패전’이라는 시간의식에 일본을 가두고, 투명하고 자립적인 정치공동체를 욕구한다. 그 현실 인식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그들이 동아시아 내 역사인식의 자장에서 그러한 욕구와 의지를 키워온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전후 일본이 ‘영속패전 레짐’에 빠져 있는 것일까? ‘친미보수’의 거세나 ‘반미정권’의 수립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주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대미 군사적 의존을 벗어난다고 해서 일본이 자립적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전후체제의 타파를 말하는 넷우익이나 2000년대의 새로운 비판적 지식인들에게서 그 가능성에 대한 근거나 대안은 찾을 수 없다. 경제 평론가이자 독서가인 이케다 노부오는 『일본전후사론』(2015)을 서평하면서 리버럴 지식인의 지적 쇠락을 날카롭게 꼬집는다.⁹⁷⁾ 이케다는 전면강화(全面講和)에서 안보반대, 반원전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상주의 슬로건만 제시해오면서도 현실 역사를 바꾸지 못한 진보적 지식인을 역사의 ‘패자’로 말한다.⁹⁸⁾

5. 동시대 모순의 답을 찾는 새로운 지성으로 융합해야

이 글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에 대한 반성적 주체 확립의 요구에서 일본의 비판적 지성이 출발했으며, 그것이 아시아의 민족주의에 공명하고 아시아와의 연대를 추구하면서 발전하다가 쇠락해온 과정을 밝혔다. 전후 일본에서 비판적 지성은 반미성전에 투혼을 바친 전전 일본인들의 사상적 에토스를 환기시키고, 그 근대의 초극 의지에 공명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의 내셔널리즘이 충돌하면서 뒤죽박죽 얽힌 집단의 기억 속에서 전후 일본의 비판적 지성의 성찰적 자세는 사라지고, 단순한 자기공정의 역사인식이 유언비어처럼 조장되고 있다.

96) 清水馨八郎, 『大東亜戦争の正体 それはアメリカの侵略戦争だった』, 祥伝社, 2011.

97) 池田信夫, 「首相の「破局願望」をめぐる対話 『日本戦後史論』」(2015. 5. 1), アゴラ-言論プラットフォーム(<http://agora-web.jp/archives/1640441.html>).

98) 池田信夫, 『戦後リベラルの終焉 なぜ左翼は社会を変えられなかったのか』, PHP新書, 2015.

서구 근대와의 사이에서 자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연대하려던 일본의 민족주의 및 아시아주의는 2000년대에 또 다시 좌절했다. 한중일 3국의 내셔널리즘이 충돌하는 원인과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연대와 융합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 글은 일본의 지적 쇠락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쇠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이다. 과거의 계몽적 지성과 비판적 지성은 그 시대의 환경에서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지적 노력의 산물이다. 그 시대의 모순을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대의 지성을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 상황과 결핍은 무엇인가? 미중분쟁 구도에서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의 대아시아주의나 비판적 지성처럼 ‘반미민족통일전선’을 주창하지 못한다. 그럴 필요도 없다. 새로운 ‘자주독립’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감화시키는 문화력과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다. 모든 사회가 평화와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인류에 통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사상)을 세울 수 있어야 ‘자주 독립’이 가능해진다. 인류 사회를 감화시키는 개인과 국가의 능력이 진보한다면, 자주 독립의 문제를 군사적 주권에서 구할 절박성은 점점 없어진다.

한국과 일본은 그 사상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세계를 이끌려는 미국의 정의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가 물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면, 그 물길에 인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콘텐츠를 띄우면 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 식민지배와 개발독재, 노동착취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인간’을 깨우치고 세상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는 인문 사회의 사상과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이 아닐까?

오늘의 대학과 연구자는 인간 삶의 도리를 자연의 이치와 일치하는 경지에서 찾는 등, 새로운 연구 관점으로 현대 사회의 모순 해소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인간을 물질로 연구하는 의학과 공학, 인간을 언어로 논리화한 인문학 담론들은 모두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방법론으로 인간의 전체성을 가렸다. 인간이 무엇인지, 우주는 어떠한지, 인간과 우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어떤 학설도 온전하게 답하지 못했다. 인공지능과 우주과학이 발전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멈추는 오늘날, 우울증과 혐오,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물리학과 기술은 진화하고 있지만, 인간 문제의 난맥상은 건잡을 수 없이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비판적 지성’이 아닌, 모순의 답을 찾아 분열과 갈등의 에너지를 융합해내는 ‘대안적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인간의 영성을 자연의 이치에서 과학적으로 밝힐 필요성이 높아진다. 대학의 자연과학과 인문학, 의학 연구에서 모두 홀시되었던 인간의 영성 연구가 ‘호모데우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영성을 연구하여 새로운 사회교육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해야 할 것이다.

Session II

[이 황직 (숙명여대)] | 사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여성학의 도전과 새로운 실천
[김 영선 (성공회대)] 4

아카데믹 노마디즘:
소명으로서 연구와 연구자의 삶/생존에 대한 소고
[양 혜원 (이화여대)] 5

탈콧 파슨스의 대학론과 한국 대학
[박 치현 (대구대)] 6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여성학의 도전과 새로운 실천

김 영선 / 성공회대 실천여성학전공

1. 들어가며: ‘페미니즘 리부트’는 한국여성학의 리부트인가?

지난 2015년을 전후하여 여성혐오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여성들의 집합적 행동이 그 다음해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살해사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불법촬영, N번방과 데이트폭력, ‘래디컬’ 페미니즘의 등장과 퀴어 및 트랜스 주체의 시민권을 둘러싼 정치적 이슈와 쟁점이 온라인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광장에서의 ‘검은 시위’와 촛불집회, 피해생존자들의 ‘미투’ (me too)에 대한 연대 실천을 통해 증폭되었다. 불평등한 젠더구조의 현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 페미니즘의 언어가 여성들의 자기 경험에 대한 인식론의 틀로써 수용되면서, 전면에 등장하게 된 페미니즘의 외연 확장 상황을 손 희정(2017)은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로 명명했다.

‘페미니즘 재부상’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는 청년여성들의 여성운동의 성과와 IMF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라는 기반 위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성이 겹쳐진 세대적 공통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 보명(2018)은 2015년 이후의 새로운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특징에 대하여, “강단의 여성학 이론이나 제도권의 여성정책에서 다루어지거나 해결되지 못한 청년세대의 삶의 문제들이 논의, 실천의 중심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2030세대’ 페미니스트 주체들의 급부상 및 그들의 저항 담론은, 페미니즘 리부트와 그 이후, 제도학문으로서의 한국여성학⁹⁹⁾ 및 제도화된 진보여성운동 진영의 자기갱신, 즉 ‘탈제도적 제도화’의 경로에 있어, 어떠한 동학이 되었는가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겠다.

99) ‘여성학의 제도화, 제도화된 여성학’은 여러 측면에서 사유가 가능하다. 먼저, 제도로서의 학문이란 대학 또는 학회나 학술지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생산과 환류일 것이며, 이는 운동으로서의 학문이라는 개념과 조응된다. 백 영서(2018:16)는 후자에 대하여, “제도로서의 학문의 이념, 관행, 제도 그리고 (그것을 지탱해주는) 지배적 사회 현실의 폐쇄성을 비판하면서 다수 민중을 향해 열린 학문을 생활세계에 기반해 수행하려는 지향을 의미”한다며, “운동으로서의 학문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고, 제도권 안에서든 밖에서든 제도권의 주류 학술 담론과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탈제도적 흐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제도여성학’을 대학 및 학회, 학술지로서 제도화된 학문으로 정의하며, 동시에 젠더불평등 사회구조의 변혁이라는 목표를 학문 정체성에 핵심 요소로서 가진 페미니즘 실천 학문으로 정의한다.

‘페미니즘 리부트’가 과연, 한국여성학의 리부트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발표문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여성학 제도화의 궤적 및 2010년도 전후, ‘여성학의 위기’ 담론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행된 당대의 진단과 전망을 현재의 맥락에서 교차적으로 재점검하면서 다음의 문제를 다루려 한다. 첫째, 대학 안에서 수행되어 온 제도화된 여성학교육의 위축과 “페미니즘 붐”, 즉 ‘페미니즘의 대중화’라는 모순 현상을 지속케하는 ‘구조화된 구조’는 무엇인가? 둘째, 국가주도 관리기구를 통해 빠르게 변모하는 지식장의 압력 가운데에서 여성학 지식생산구조의 지속가능성 및 대학 내 여성 혐오와 차별의 상황에서 이론과 실천의 합일이라는 여성학 고유의 학문적 정체성을 어떻게 여성학 교육을 통해 다시 지켜낼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성학의 이중의 과제 해결에 요청되는 윤리적 태도와 공통 감각,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의 조건은 어떻게 구성 가능한가?

2. ‘여성학 위기화’ 담론의 내용 및 문제의 진단

학술적, 종합적 지식체계를 갖추면서 자기재생산 기반을 가진 제도학문으로서의 여성학, 그 학문의 원형은 서구의 68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여성학의 역사는 시기구분(periodization)에 따라, 또 제도화의 핵심 장소—대학, 학회, 학술지—및 이들이 서로 맺는 관계 방식에 따라, 구성 궤적과 시대적 특징이 도출될 수 있겠다. 1970년대 서구여성학의 발전과 1975년 유엔이 제정, 선포한 ‘세계여성의 해’를 계기로 한국 여성운동계는 큰 자극을 받았다.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가시화된 집합적 움직임이 잇달아 대학 안팎에서 일어났다. 1977년 이화여대에 여성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여성학 교재 편찬 및 교과과정 개발이 한국 최초로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1982년 학부가 아닌 대학원에 학과의 형태로 여성학 석사학위 전공과정이 개설되었다. 뒤이어 한국여성학회가 창립되었으며, 1985년부터 학회지 「한국여성학」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한국여성학 제도화의 역사를 살펴 본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여성학회를 비롯한 여성/젠더 관련 학회들(한국여성문화학회,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사학회 등등)에서 자기점검과 자체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여성주의 이론 담론의 주요 내용과 사회적 의미, 자기 학문의 현재와 방향에 대한 점검과 성찰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김 승경 외, 2006; 장 필화, 2008; 이 나영, 2011; 김 영선, 2011, 허 성우, 2013).

제도화 초기 단계인 1980년대에는 한국여성학의 학적 정립을 위한 교양과정과 학위과정으로서의 여성학이론 및 방법론, 교육과정과 강의구성에 대한 핵심적 논의들이 주로 생산되었다(박 영혜, 1982; 정 세화, 1984; 정 대현 외 1985; 장 필화, 1990; 이 기숙, 1990). 이후, 여성주의와 여성학이 어떻게 기존의 개별 분과학문의 젠더화(gendering)에 기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분과학문 내부의 여성 또는 젠더 연구의 흐름

과 향방에 대해서 분석하는 논문들이 출판되었다(이 재경, 1999; 이 영자, 2000; 조 주현 2000). 또한, 이 시기에 한국의 ‘토착적’ 여성주의 이론 생산의 (불)가능성과 더불어 한국 여성운동의 ‘운동성’과 ‘현장성’의 동력 상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재점검하는 논의들이 있었다(조 순경, 2000; 강 남식 외, 2002). 2000년대 이후에는 제도화된 여성학(과/협동과정)의 위기실태를 진단하며, 이의 본원적 원인에 대한 반성적 시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시대, 강화되는 대학에 대한 국가관리 시스템과 시장/자본의 권력 강화 속에서, 한국의 여러 비판사회과학 학문들과 인문학이 동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학문 후속세대 재생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다각적인 탐색이 시도되었다(김 혜경 외, 2009; 이 나영, 2011; 변 혜정, 2011; 이 명선 2013).

사실 1980년대 이후 여성학이 학과나 프로그램으로 존재한 곳은 이화여대가 유일했으나,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한국여성학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베이징대회에서 유엔이 제시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국 정부가 여성 이슈를 정부 의제에 포함시키면서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기획하고 수행할 필수 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지자체까지 ‘젠더전문관’의 공고 및 채용이 이루어졌다. 광역 단위에서도 여성가족재단이 잇달아 설치되었고, 공공연구기관이 성평등 정책연구들이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대학에도 ‘여성정책’ 과목이 새롭게 개설되었으며, 박사과정의 세부전공으로 ‘정책’이 자리잡았다. 이처럼 여성학의 확장성에는 국가의 제도화를 매개로 한 젠더전문가의 사회적 수요와 고용 시장의 구성이 있었다. 김 은실(2016)은 이를 ‘역설’이라고 해석하며, “성주류화 정책을 통해 여성학과 졸업생을 수용하는 사회적 공간이 생긴 것은 대학들이 여성학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설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한국의 대학들이 잇달아 여성학 석/박사과정을 일반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학으로 기능했다. 이 시기에 대학 교수평가와 승진, 학술지 평가가 한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분류에 따라 이루어졌고, 1999년 한국여성학회가 여성학을 학술지 학문분류에서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 기재하였다. 여성학의 제도적 성장과 연구자 확대의 배경에 대하여, 이 나영(2010)은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대학 내 전임 여성교수의 충원 문제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상당수 ‘여자’ 학자들이 전임교수로 부임하게 되었고, 이들 중 여성주의 인식론에 노출되고 여성운동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대학 내 여성학/젠더연구의 확산에 기여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학 제도화의 공고화와 더불어 동시에 여성학 위기담론이 시작되었다. 그 양상은 여성학 교양 과목의 신청자 수 급감과 함께 대학원 지원자 감소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났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구가톨릭대, 상지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의 여성학과가 없어지고 계명대의 여성학대학원의 폐원과 더불어

어 2007년 개설된 계명대 여성학 박사과정은 사회학과의 한 전공으로 흡수되었다.

전북지역 및 전북대학을 사례로 삼아 지역에서의 여성학 교육의 양상과 흐름을 살펴본 김혜경(2009)는 지역의 경우 늦은 여성학 교양강좌의 개설과 빠른 축소, 강좌개설 대학의 범위가 넓지 않았으며, 강좌 규모도 대체로 한 클래스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 관련 강좌의 변화의 중요 특징으로 인문적인 교양으로서 여성학 강좌의 약화와 더불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난을 바탕으로 교양과정의 개편으로서 실용 강좌의 확대추세가 있었음을 보고했으며, 비록 여성학 교양 강좌 수는 감소하였으나 더불어 학과 전공 내 여성 관련 강좌의 약진을 강조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1980년대 말 이래 진보적 사회운동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던 지역에서의 페미니즘 연구의 동력이 약화된 현실, 전문 연구자의 공급 부족, 젠더 이슈의 미발달 등의 지역 여건의 착용”이라고 보았다.

여성학의 제도적 공고화와 동시에 시작된 위기의 근간에는 대학사회가 한국사회가 겪은 신자유주의와 물질주의, 성과주의의 회오리를 정면으로 통과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한 저변이 붕괴되거나 내상을 입을 때 예외없이 대학사회도 그러한 내진을 똑같이 겪었다. 대학구성원의 위계화, 성과주의와 획일화된 정량 평가 문제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고질화된 구조적 문제이다. 제도여성학의 성과 및 한계가 ‘여성학위기’ 담론 속에서 노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학이 시도해 온 학문의 관습적 경계와 분절성, 이러한 영역을 재설정하려는 학제간 논의가 가져온 새로운 도전과 연구 및 교육 실천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핵심적 가치이기도 하다.

여성학의 제도화 과정은 학과 및 교과과정이 설치된 각 대학의 체계나 제도 차원과 결합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면서도, 공통적으로는 학부에 독립학과로 존재하지 못함에 기인하는 대단히 취약한 기반에서 이루어졌다. 여성학의 대학 내 설치와 폐지, 재설치, 또는 신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들은 이 나영(2013:445-6)이 지적한 대로, “개인적인 문제나 개별학과, 학교의 문제로 한정하기보다는 학계 전반의 변화, 사회적, 구조적,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민정부 이후 진행된 대학정책의 변화, IMF 이후 가속화된 시장화 정책,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원)생수 감소라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가속화되는 대학의 현실과 맞물리며, 이는 대학 서열 구조, 학과 중심의 학사 구조와 전공의 지위제(위계제)”라는 뿌리깊은 한국대학들의 구조적 병폐와 맞물린다. 또한 “분과학문으로 공고화되기도 전에 위축된 제도적 문제, 보편화, 상업화된 페미니즘의 사회적 위상, 여성학 박사 전공자의 불확실한 진로,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설립, 추진되었던 여성가족부의 위상변화” 와도 연동된다.

3.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변화의 흐름: 그들은 왜 페미니즘을 독학하는가?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은 대학이 여성학을 다루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살펴 보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다각도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 교육과정 및 전공의 교육과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두 교육과정은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어느 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곧바로 다른 교육과정에서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문제를 단편적, 단선적으로만 제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난점이 있다.

대학 내 여성학교육의 현황을 양적 분석으로 살펴본 이 예담(2019)은 “대학 내 여성학 강좌는 20대 초반 신입생 세대의 높아진 페미니즘의 니즈를 잘 만족시키고 있는가” “여성학 내에서 진행 중인 풍부한 담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진다면, 자꾸만 여성주의적 말과 글들이 미끄러지고 튕겨져 나오는 느낌 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198개 대학¹⁰⁰⁾의 교육과정편람에 수록된 봄/가을 학기별 실제 개설 과목을 전공과 교양을 구별하여 (여)성, 젠더, 섹슈, 페미, gender, sex, wom, femi로 검색해 데이터화하였다.¹⁰¹⁾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하여, 여성학 관련 기구/전공 개설비율은 여성학과가 학부 또는 대학원에 설치된 경우가 1%, 여성학 연계전공/협동과정이 설치된 비율은 4%, 여성학 관련 연구소 설치 비율은 10%였으며, 여성학 전공 교과목은 편람이 공개된 156개 대학에 100개교로 약 64.1%, 여성학 교양 과목목이 명시된 대학은 편람이 공개된 총 146개 대학에 108개교로서 74.0%였으며,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학기별로 살펴보면, 평균 2과목이 개설되었다.

<표 1> 실제 개설과목 현황

		개설과목이 공개된 대학(개)	여성학 관련 수업이 개설된 대학(개)	비율	개설과목수 평균(개)*
2017-2	전공	114	51	44.7%	2.08
	교양	108	77	71.3%	2.87
2018-1	전공	122	47	38.5%	2.11
	교양	128	85	66.4%	2.72
2018-2	전공	96	47	49.0%	2.11
	교양	101	68	67.3%	2.94
2019-2	전공	87	27	31.0%	1.62

100) 198개 대학은 교육부 공시대상 4년제 대학교 중, 교대/과학기술대/예술대 포함, 기술대 제외한 총 대학을 이른다.

101) 제외된 과목은, (1) 교양과목 중 결혼, 연애 등에 대한 기존 인식을 고착시키거나 단순히 여성의 이미지메이킹에 집중된 과목들(아름다운여성생활 등), 여대생커리어개발 과목들, (2) 전공과목 중 기술적으로 여성에 대해 다루는 과목들(여성건강간호학, 여성 성악 발성 등)이다(이 예담, 2019: 4).

(109개)	교양	87	57	65.5%	2.00
--------	----	----	----	-------	------

*출처: 이 예담, “대학 내 여성학의 현황-교과목에 대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포럼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발표집』(2019), 4쪽.

김 민정(2019)은 페미니즘과 사회변화에 대한 대학 제도가 어떻게 반응 내지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학 내 교양교과목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를 전후하여, 8개 대학에서 ‘성’ 강의 개설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페미니즘 수요에 대하여 대학이 반응하였다”고 해석하였으며, 교과목명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변화로서, “가족, 결혼을 다루는 과목들의 감소”와 “페미니즘, 젠더, 섹슈얼리티가 포함된 교과목의 개설수 및 명칭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¹⁰²⁾

대학원의 여성학 관련 전공 입학생 수의 변화 및 개설 대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10월 총 9개 대학에 여성학/젠더 관련 학위과정이 대학원 개설된 것에서 2021년 현재 여성학 석, 박사과정이 설치된 학교는 이화여대, 동덕여대, 계명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신라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¹⁰³⁾이다. 특히 충남대는 2021년에 일반대학원에 학과가 아닌 협동과정 프로그램으로 처음 여성젠더학과를 개설하였다. 참여한 교수진의 소속 대학 인문대학 중심이다. 지난 2007년 여성학 협동과정 폐지 통보 후, 2011년 1학기 마지막 석사 졸업생을 배출한 숙명여대도 2022년을 목표로, 현재 ‘젠더학 협동과정’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그램 재설치의 이유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높아진 젠더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조용하기 위해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과 기존 학과 교수진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⁰⁴⁾

대학은 오랫동안 여성학을 학습하는 핵심적 장소이자 네트워크의 생산지였다. 그러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은 온라인 및 온라인의 경계를 넘어 연결된 오프라인에서의 학습 소모임의 확산에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가장 먼저 감지한 층은 출판계 쪽이다. 20~30대 여성들이

102) 김 민정(2019)이 분석에 포함한 학교는 전국 14개 대학이며, 모두 남녀공학이었다. 지역 대표성을 기준으로 대학명에 도나 시 단위의 지역명이 포함된 국립종합대학교의 ‘성’ 강의 개설여부 및 강의 내용에 관한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교양과목은 사실, 대학 내 교수와 학생, 관련 행정 인력, 수업개설 의사결정기구의 의지와 욕구와 서로 경합하고 상충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청년세대의 페미니즘 지식에 대한 욕구가 대학 내 성 강의에 질적으로 과연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민정은 14개 대학의 2019년 1학기 개설된 수업과 비교군으로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막 시작되어 아직 교양교과목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을 2015년 1학기의 강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103) 여성젠더학과는 2020년 일반대학원의 협동과정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신설되었다. “여성학은 생물학적 여성의 삶과 경험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 다양한 전문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 분야로, 과거 역사적인 여성의 종속과 억압을 인식하고, 여성이 자율성과 자결권을 지니는 사회모델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 방법론에 의거 연구/교육하는 학문”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젠더학’은 여성과 남성의 젠더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방식, 젠더가 권력, 특혜, 섹슈얼리티, 인종과 교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자료출처: <https://grad.cnu.ac.kr/grad/grad/newmajor.do>]

104) 숙명여대에 개설될 학과명은 다음과 같다. 젠더학 협동과정(가칭)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수여 학위는 문학 석사(젠더학 전공), Master of Arts in Gender Studies (M.A. in Gender Studies) [자료출처: http://asianfem.sookmyung.ac.kr/modules/doc/index.php?doc=gender&_M_ID=120]

열광적으로 페미니즘 독서에 몰두하고 생존을 위해 지식을 쌓기 시작한 “페미니즘 대중화”의 흐름을 타고 페미니즘 관련 서적들이 연달아 출간되기 시작하였다.¹⁰⁵⁾

페미니즘에 입문한 이들이 대부분 이전에는 페미니즘 관련 도서를 읽은 적이 없는 이들로서,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메갈리아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게시물이나 링크된 글들을 읽으면서 동시에 현실의 부당함을 온라인을 통해 성토했으며,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후 페미니즘 서적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로를 가진, ‘독학자’ 페미니스트들은 가상 세계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집회, 전시, 특강, 독서모임 등에 참여하고 다시 이러한 경험을 온라인으로 가져가는 “상호매개적” 운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김 주희, 2017). 이러한 페미니스트 독학자들의 등장에 대하여, 김 민정(2020:147)은 “페미니스트 지식에 대한 열망에 제도권이 제도로 부응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 강단의 여성학과 제도권의 여성정책이 청년세대 여성들의 삶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페미니즘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선택지에 한계가 있음을 반영” 한다고 보았다.

페미니스트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이 대학 밖의 다양한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주목한 문화연구들은, 청년여성들이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서 페미니즘을 소비하고 있음을 밝혔다(김 현미, 2021). 리부트 이후, 새롭게 등장한 청년여성,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앞선 세대의 ‘영페미(영 페미니스트)’에 대한 시간적 의미에서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영영페미’라고 부르거나 ‘메갈리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로 ‘메갈’이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체 명명 방식에 대하여, 이들은 ‘영영페미’의 호명을 스스로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선배없는 페미니즘”이라는 언어는 기존의 제도화된 운동 조직과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치적 위치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정체성을 둘러싼 ‘차이’의 장치이기도 하다. 이들 2030세대의 성장 시기는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학의 위기담론 및 총여성학생회 및 운동조직의 해체와 밀접히 맞물려 있다. 돈과 스펙이 되지 않은 일에 대한 이른바 ‘노-오력’과 반주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대학이 아니라 친숙한 온라인 공간이 자기의 고민 해결과 실천에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

대학을 매개로 하지 않은 새로운 주체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낼 페미니즘의 정동(affect)은 무엇일까?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온라인 공간 및 광장에서 세계와 접속하는 이들의 전략적 행위에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속해 있는 조직, 일터, 장소에서의 백래쉬-즉, 극단적 혐오, 적대감, 차별의식-상황에서 수행하는 주체들의 전략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찾은 곳, 또, 간절히 찾으려는 곳이 익명의 공간으로써, 자유롭게 접속하거나 로그오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대학은 관계의 비대칭성과 위계의 재구조화를 강화시키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닐

105) “페미니즘 출판전쟁,” 「한겨레신문」, 2016년 8월 18일.
[자료출처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757359.html>]

까. 날로 심화되는 치열한 경쟁구조, 승패의 시각으로 업적을 평가하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계발, 자기경영의 압박에 겹겹이 둘러 쌓여있는 학생들의 시선 아래 대학은 어떠한 장소이고, 어떠한 장소여만 할 것인가?

오 혜진(2019)은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이 어떤 페미니스트가 될 것인가를 열 어두고 고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의 문법과 현재적 지형 이 가지는 영향력에서 거리 두고 상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즉, 세미나, 학회, 동아리, 소모임, 여성학 관련 수업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가 능한, 논쟁과 토론을 해도 단절되지 않는 관계와 공간을 확보해서 ‘안전함’ 을 느껴야 자신의 태도와 생각, 여성주의 지식을 갱신하는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서는 지속적으로 소속감을 갖고 꾸준한 활동의 터가 되는 페미니스트 공동체들을 발굴 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또한 대학 정규 교육 안에서 페미니즘을 발 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젠더 연구 커리큘럼 의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학생사회의 붕괴를 대학구성 원들이 함께 목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의 문제들은 이 시대, 대학의 존재 이유를 함께 성찰하는 데 있어 긴급하게 요청되는 핵심적 화두이기도 하다.

4. 한국여성학의 새로운 기회구조와 과제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학을 기반으로 제도화된 한국여성학은 지난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살해 사건 및 미투운동 후, 이제 새로운 단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학교육과 여성학의 현장에서의 감지된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교양 여성학 과목을 둘러싼 학생들의 관심 주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대학의 소모임을 통한 여학생들의 모임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대학에서 이들에 대한 공격이나 혐오, 특히 익명 앱을 통한 공격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이 반영된 여성학 커리큘럼 개편은 학교가 처한 맥락-즉, 여성학 석 박사과정의 설치 정도나, 관련 전임 교수진의 배치 등등, 그리고 학교의 교과목 배정 등, 여러 역학 속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리다.

둘째, 여성학 석박사 과정의 새로운 신설 및 부활은 페미니즘의 대중화라는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여성학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젠더전문관으로서의 공공영역에서의 수요 확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성학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학부에서 여성학 연계전공을 통해서 여성학이 무엇 을 하는지에 대한 감각 및 학습 내용을 미리 경험한 학생들이며, 특수대학원을 진학

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 자신이 일과 공부를 양립하기 위한 시도 및 판단이 중요한 동기로 작동한다.

셋째, 지역에서 새로이 등장한 2030대 비혼 여성으로 구성된 페미니즘 독학자 및 이들의 학습 소모임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들은 페미니즘 대중서적 출판 시장에 있어 핵심적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삶의 경로에서 그 선택지에 지역 여성단체와의 접촉 및 여성학 대학원으로 유입,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추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정밀한 분석을 요한다.

장 필화(2016: 38)는 여성주의적 가치는 가부장제 사회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면서, 새로운 감수성(sensibility)은 주변화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재평가하며, 속도, 효율, 생산성에 대해 새롭게 정의한다고 보았다. 여성주의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떤 정도는 이러한 감수성을 공유한다면서, 여성주의 가치가 가부장적 규범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가치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성연구의 ‘지식인 공동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주의 연구자의 탄생의 어려움과 부족에 대하여 정 희진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여성주의는 이론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다. 지배 언어와의 불일치가 몸의 통증과 폭력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약자에게 말과 실천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알고 있다. 훈련된 여성주의 연구자가 한 명 탄생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그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해도 생계와 활동을 병행하는 연구 작업의 어려움이 결국 ‘개인의 건강 문제’로 지속되지 못할 때 가장 좌절스럽다. 연구자 부족은 언어 부족만을 초래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연구자가 적을수록 논쟁과 연대가 모두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학과는 과별이 되고, 비판은 감정적 가십이 되기 쉽다” (2018: 31-2).

여성학이 탑재한 급진적 학문 정체성은 권력 속에 내재된 서구중심성, 남성성, 서구중심주의의 위계와 계급적 편견을 해체하고자 하는 데 있었고, 지식에 배태된 가부장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된 여성학은 무엇을 자신의 핵심지식으로 잡아야 하는가, 지식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또는 해야만 하는가, 지식은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갖고 있는가, 또는 갖고 있어야만 하는가 등의 정치윤리적 물음을 스스로 던지며 성장해왔다.

동시대, 대학과 사회, 또한 대학과 운동의 격차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에는 연구의 제품화, 규격화되는 학술논문에 대한 문제들, 새로움을 추구하는 대학 내부의 목소리가 발화되지 못함 등이 흔히 거론된다. 대학 제도화의 탈제도화 및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담론이라는 이중의 난제 속에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한국여성학의 새로운 기회구조는 어떻게 새로움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

최 기숙(2018)은 “새로운 연구는 목적의 창신과 조응해야 하며, 효용의 혁신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 결과 인간과 사회의 지형을 새롭게 개방함으로써 의미 있는 발견에 도

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공감대를 거쳐 성숙한 방향으로의 변혁을 이끄는 데 비로소 새로움에 대한 의의가 완성 “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결국, 개념이나 방법론, 역사와 맥락을 재고하여 새롭게 열릴 사유와 실천의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봄이라는 자체가 주는 반성과 성찰의 힘이 아닐까. 과거의 경험들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자원으로 만들고, 이것을 미래의 전망과 연결시킬 때에 비로소 임파워먼트가 가능하다. 자기갱신을 요청하는 여성학,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세계를 확장하고, 이 세계의 불완정성과 불평등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곳이 대학이든, 그 밖이든 각자 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서로가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그 시작이 아닐까.

도움 받은 글

- 김 민정, “페미니즘 리부트와 대학 내 성(性)강의,” 『한국여성철학』, 33권(2020).
- 김 보명,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 사회』, 118호(2018).
- 김 수아,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주체들— 디지털 미디어 시대와 페미니즘,” 『페미니즘연구』, 19권 1호(2019).
- 김 영선,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궤적과 과제,” 『현상과인식』, 34권 3호(2010).
- 김 주희, “‘독학자들’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식문화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 : 신간 페미니즘 서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3호(2017).
- 김 현미, 『페미니스트 라이프스타일』(서울: 반비, 2021).
- 김 혜경 외, “지역에서의 여성학 교육의 현재와 특성: 전북지역 및 전북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권 3호(2009).
- 박 은하/이 민경, “넷페미의 현재와 미래, 그 가능성을 찾아서,” 『대한민국 넷페미史』(서울: 나무연필, 2017).
- 백 영서, “사회인문학의 방법도 태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사회인문학 백서: 10년의 궤적과 전망』(서울: 새물결, 2018).
- 오 혜진,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9).
- 이 나영, “한국 ‘여성학’의 위치성: 미완의 제도화와 기회 구조의 변화,” 『한국여성학』, 27권 4호(2011).
- 이 예담, “대학 내 여성학의 현황-교과목에 대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포럼,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발표집(2019).
- 정 희진(유음), 권김 현영, 루인, 정 희진, 한 채윤, 『미투의 정치학』(서울: 교양인, 2018).
- 최 기숙, “글쓰기는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이 될 수 있는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사회인문학 백서: 10년의 궤적과 전망』(서울: 새물결, 2018).

아카데미적 노마디즘

소명으로서 연구와 연구자의 삶/생존에 대한 소고

양혜원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1. Personal에서 시작하는 이유

요즘 서점에 가보면 ‘나’로 시작하는 에세이집들이 선반에 즐비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만, 아직도 학계에서 personal narrative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긴장이 있다. 학계는 ‘사건’이 아닌 ‘이론’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개인은 가능한 뒤로 숨는다.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방식 및 서술 방식이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숨긴다 하여 일찍이 비판했지만, 여성학이라는 분야가 전문화되고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면서 개인은 뒤로 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카데미아로 들어간 여성학은 그곳의 관습에 의해 길들여진다는 주장이 확인되는 지점이다(Messer-Davidow, 2002).

그러나 내가 personal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 저항하고 싶어서라든가 그럴만한 무슨 특별한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구 질문(inquiry)을 시작하는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남들이 하는 방식이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거나 잘 수궁이 되지 않을 때, 그래도 전문가가 했으니,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왜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하는 데서 나의 연구 질문은 시작된다. 이것은 나의 중요성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해해가는 과정이고,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작가 페트리샤 햄플(Patricia Hampl, 1999)에 의하면, 자기 서사는 자기를 근원이자 주체로 삼으려는 글쓰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자기를 활용하는 글쓰기이다.

해서 이 소고는 나의 학계 입문기를 통해서 연구란 무엇이고, 학계라고 하는 무형의 네트워크와 유형의 물적 토대 속에서 연구자들의 삶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덧붙이자면, 이 이야기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대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박사 과정을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진학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교육자들이 고려했으면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다.

2. I think I did everything wrong: career trajectory of a non-traditional student

이 발표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 성공적인 박사 과정과 그 이후를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중요하다든 네트워킹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주어진 기회를 다 활용하기는커녕 더러 놓쳐버리기도 했고, 슈퍼바이저의 긴밀한 진로 지도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만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그래도 한 가지는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먼저 이번 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다음 절에서는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1) Non-traditional foreign student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일본으로 건너가 방문연구원으로 있을 때, 나 자신을 senior junior scholar라고 소개하곤 했다. 알다시피 junior scholar란 박사 학위를 받고 약 5년 정도까지의 시기에 있는 학자로서 이제 막 학계의 관행을 배워가는(learning the ropes) 사람이다. 그러나 마흔 후반에 박사 학위를 받은 나는 연령상 시니어에 다가가 있어서, 젊은 친구들 틈에서 다소 애매한 나의 위치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나이를 그렇게까지 인식하지 않았다. 내 동료 중에는 일흔이 넘어서 박사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미국 사회가 그렇게 내놓고 나이를 따지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달랐다. 연구소에서 만나는 다른 포닥생들은 모두 20대, 많아야 30대였기에 쉰에 더 가까운 나이에 이제 갓 박사 학위 받은 신참 행세가 제법 어색했다. 연령 차별이란 이런 것일까. 나이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당신은 좀 다르군’ 하는 시선은 감내해야 했다.

사회별로 남녀평등 지수를 재는 방식 중 하나가 여성의 고용비율인데, 한국이나 일본은 M자 곡선을 그리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M자 곡선이란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에 여성의 고용률이 뚝 떨어졌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반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그 사회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일차적 임무로 본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뜻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일-가정 양립을 놓고 여성계가 씨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가운데가 꼭 꺼진 이 시기는 말하자면 경력단절의 시기인데, 이 단절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로 돌아가 학위로 경력을 만회하는 것이다. 이미 박사 학위가 있었던 나의 친구도 육아 휴직 후 MBA를 해서 그간의 단절을 만회하려 했다. 물론 학교로 돌아가는 이유는 비단 그뿐만은 아니다. 이미 일을 하는 여성이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잠시 일을 쉬고 학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꼭 경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색하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이유에서 이제 학교에는 나이든 학생들이 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들을 non-traditional student라고 해서 학교가 이들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나는 말하자면 이 non-traditional student로 분류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집안에서 처음 대학을 가거나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도 비전통 학생으로 분류되는데, 내가 방법론 수업을 들었던 교수는 라틴계 이민자 가정 여성으로서 집안에서 처음 대학에 갔을 뿐만 아니라 처음 대학교수가 된 사람이었다. 이런 경우, 이 업계에서 성공하는데에 필요한 문화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학교는 학생 demographic 파악에서 유의미한 요소로 보게 된다. Mollie Dollinger(2019)는 박사 학위가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국한되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다행히도” 박사들의 분포가 “젠더, 인종, 문화, 교육 배경, 나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면에서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140). 말하자면 서구 사회의 경우, 백인, 남성, 청장년, 중/상류층에 국한되었던 고등 교육의 기회가, 유색인종, 여성, 중노년, 노동자층(이민자 포함)으로 확산되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나의 주변적(marginalized) 요인은 유색인종, 여성, 중노년이었다. (한국은 동질성이 강한 사회라서 이렇게 교차적인 요인들을 다 보려는 면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awareness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인종들끼리도 다른 것은 당연하고, 시민권을 가진 유색인종인가 아니면 나처럼 학생 비자로 온 유색인종가에 따라서 자원이 다르게 분배된다. 장학금은 물론이고, 지도 교수도 유학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느낀다. 자기 나라 학생은 끝까지 슈퍼바이징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유학생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학위 받는 데까지만 봐주면 된다는 점에서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만약 공부를 마치고 계속 남기를 원한다면 학생 쪽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나의 경우 학업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커리어 자문 면에서는 지도 교수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글들을 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나와 같은 나이든 학생은 한편으로는 인생 경험이 있기에 20대 학생처럼 돌볼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학계가 낫설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처음 그곳에 발을 디디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 연령주의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늙수그레한 외모로 신참 행세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와 비슷하다. 내가 어색할 때도 있지만 나는 괜찮아도 상대가 불편해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쪽 관행이 자꾸 의식이 되어서 생각이 복잡해지기도 한다. 게다가 띄엄띄엄 공부를 하다 보니 나의 지도 교수들은 이제 다들 은퇴를 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킹조차 어려웠다.

그나마 나의 석사 전공이 여성학이어서 나이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만약 영문학이나 철학, 사회학처럼 계보가 오랜 다른 전공이었다면 늙은 학생이라는 자의식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학사를 졸업하고 8년 만에 여성학을 공부하려 학교로 돌아갔는데, 여성학은 그냥 학문적 관심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뒤늦게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오히려 전통적 학문이 아니라서 생기는 어려움이

따로 있었다.

(2) Non-traditional discipline

여성학은 시작부터 학제간 학문으로 출발한 분과이다.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의 성격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지만, 문학과 철학에서도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가 활발했다. 그러나 여성학이 점차 전문화되면서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과 누구나 진입해서 연구할 수 있게 학제간 성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Buker, 2003). 그리고 여성학의 운동적 성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과 아직도 여성학을 학문으로 보지 않는 학계에서 제대로 학문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 운동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다. 나의 경우 여성학 박사 과정까지 있는 여성학 전문 코스에서 석사를 하고, 여성학을 서브필드로 하는 종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하면서 두 접근 방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내가 박사 학위를 한 학교는 여성학 과정은 응용 여성학이라고 해서 석사 과정만 있었는데, 이 과정은 주로 현장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다. 그 외에 박사 과정에서 여성학은 종교학과만 서브필드로 존재했지만(Women's Studies in Religion, 종교여성학), 젠더 관점의 분석은 어느 분과든 기본이어서, 역사학과에 여성사를 전공한 교수가 있었고, 문화학과에는 퀴어 이론을 전공한 교수가 있었다. 학교 자체가 transdisciplinary 접근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두고 있어서 분과간에 텅 세 없이 교류가 활발했다. 그래서 나의 경우 학위는 종교학으로 받았지만 내 논문 지도 교수는 역사학과 교수였다.

그러나 여전히 취직을 할 때는 전통 분과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종교여성학 프로그램 지도교수는 박사생들이 공부할 때는 본인 관심사대로 하게 하되, 그것을 주류 학문에 어떻게 위치시켜서 취직에 도움이 되게 할지가 과제라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취직을 할 때는 종교여성학보다는 종교학을 내세우게 된다. 아무래도 종교학의 기본 과목을 소화하면서 사이드로 젠더 관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성학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다닌 학교가 학제간 성격을 극대화한 경우라면 그 반대의 경우가 럽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이다. 럽거스 대학은 여성학 박사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가 코스와 학자 코스를 분리해서 아예 트랙을 달리 하고(지원 자격 자체가 다르다), 학자 코스의 경우 페미니스트 계보학(Feminist Genealogies),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페미니스트 지식생산(Feminist Knowledge Production)을 필수 과목으로 두어서 여성학의 학문적 전문성을 강조한다. 럽거스 대학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아서 분위기는 잘 모르지만, 여성학을 별도의 분과로 두고 박사 과정까지 있는 이화여대의 경우로 미루어 짐작하면, 분과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학제간 성격보다는 페미니즘 관점 자체를 강조한다. 럽거스 대학의 경우 페미니스트 계보학을 아예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더 전통적인 분과들처럼 확고하게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학 분과를 따로 두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은 상

황에서 이 전공을 택한 학생들의 취직 경로는, 역시 이화여대의 경우로 미루어보아, 창의적 접근을 더 요구하리라 본다.

참고로, 최근에는 여성학과들의 명칭이 젠더학 혹은 여성과 젠더학으로 바뀌고 있는데, 내가 나온 학교도 이제는 그 명칭을 Women's and Gender Studies in Religion으로 바꾸었고, UCLA도 Gender Studies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럿거스 대학의 경우 학과 명칭은 Women's Gender and Sexuality Studies이다. 이는 페미니스트 이론이 '여성'이라는 범주의 생물학적 본질성, 동질성을 문제 삼아온 역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같은 비서구 사회의 경우 처음부터 여성학 대신에 젠더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여성학이라고 하면 오히려 여자들끼리 따로 무엇을 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남자들의 의심을 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

여성학이 이처럼 학제간적 성격을 내세우기보다 스스로의 전문성을 구축하려는 경우 다른 분과에서 선불리 접근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Buker, 2003), 이는 기존 분과 안에서도 페미니스트 관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일본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있을 때 종교학 전공자인 일본인 여교수와 함께 종교와 페미니즘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종교여성학에서 중요하게 꼽는 학자를 내가 인용했다고 해서 워크숍 자리에서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인용한 학자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페미니즘 관점이 강한 사람들은 나의 접근 방식을 페미니즘이 아닌 것으로 많이 해석했는데, 학자로 성공하려면 필수라고 하는 네트워킹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종교학과 여성학은 사실 화해하기 어려운 학문이다. 서로의 신념 체계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방법론 수업을 들었던 그 라틴계 여교수도 "Wow, two belief systems at once" 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흥미로운 분야이기도 한데, 이 두 분과가 만나기 어려운 이유는 여성학 쪽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에도 종교와 관련된 학회들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는 아직 페미니즘을 접하지 않은 처녀지 같은 곳도 있어서, 페미니즘 관점의 논의는 아예 진입을 시키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마치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듯이, 종교학과 여성학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반응이었다. 이런 식의 반응은 한국과 일본에서 경험했는데, 아마 미국에서도 종교여성학이 아닌 좀 더 전통적인 기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분야를 접했다라면 비슷한 반응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비단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만난 독일인 백인 여성은 불교 전공자였는데, 종교여성학에 대한 내 발표를 듣고 자기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매우 흥미로워했다.

어떤 면에서 종교학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 아이러니한데, 종교학도 분과적 정체성이 확고한 학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학과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전공자들은 대개 하나의 종교를 전문으로 하지 종교학이라고 뭉뚱거릴 수 있는 전공은 사실 없다. 모든 종교를 하나의 이론이나 방법론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19세기 말부터 열심히 시도되다가 20세기 후반 초입에 포기되었고, 이제는 각 종교가 하나의 분과를 이루는 실정이

다. 게다가 종교학 자체의 고유한 방법론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기존에 종교학은 경전 해석과 분석이 중심이었지만, 오늘날 종교학은 철학,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과 결합해서 이 분과들의 방법론을 사용하며, 그중에서 여성학은 가장 최근의 addition 일 뿐이다. 최근에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에서는 종교학의 이런 넓이와 열린 자세가 기존 분과에서 종교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면서도, 종교학 자체의 정체성을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Lewis, 2020). 그렇다면 종교학과 여성학을 매우 생똥맞은 결합으로 보는 이유는 분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다른 모든 분과에서 그렇듯, 젠더 관점의 저변 확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젠더 관점은 여전히 여성학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듯하다. 그나마 여성학과 융합이 잘되고 있는 사회학에서도 한계가 지적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이 재경, 2014).

(3) Academic nomad

미국에 있을 때 박사생들 사이에서 tenure라고 하는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본적은 없다는 우스개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최근에 어느 동료는 신기루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만큼 박사-박사후 과정(또는 강사)-전임교수라고 하는 트랙은 아주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었다. 이번 발표를 신청하면서 글의 제목을 잡을 때 연구자로서의 여정을 묘사할만한 문구로 academic nomadism이라는 말이 떠올라 혹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나 구글에 검색해보니 벌써 상용이 되는 표현이었다.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다.

하나는 전임으로 자리 잡기까지 1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 자리를 잡고 permanent address가 생기기까지 이 주에서 저 주로 옮겨 다니면서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노마드라는 표현을 썼다. 유학생인 나의 경우,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날 때 트렁크 두 개로 어디든 간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에 이미 노마드의 삶으로 들어서 있었다. 그나마 인터넷의 시대가 노마드에게 고마운 것은 우편 주소는 항구적이지 않아도 이메일 주소는 항구적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역으로 인터넷 시대가 노마드의 삶을 부추겼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딘가에 ‘적’을 둔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메일 주소의 확장자가 학교 어카운트냐 아니면 포털 어카운트냐에 따라서 소속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메일 주소는 항구적이지만, 확장자가 포털 어카운트라면 이 사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정교수들은 학교 메일을 쓰지만 비전임들은 학교 메일이 있어도 개인 메일을 쓴다. 자리를 옮기게 되면 기존의 학교 메일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학교 메일을 쓰는 게 오히려 이사 다닐 때마다 주소 신고하는 듯한 번거로움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않을까 한다. 나의 경우도 학교와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면 개인 메일을 쓴다.

노마디즘의 또 한 가지 형태는 비전임 전임을 막론하고 더 나은 기회나 커리어 개발

을 위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이다. 전 세계적 이주 현상을 학계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 경우에는 노마디즘 보다는 이동성(mobility)라는 표현을 쓴다(Tight/Maadad, 2014). 물론 academic mobility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수백년 전부터 대학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지식을 교류했고, 배움에 있어서 이러한 mobility는 중요하다고도 지적되지만, 오늘날 academic mobility는 본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특징으로 대두된다고 한다(Suárez-Ortega/Risquez, 2014). 오늘날 박사생들은 어디든 일자리가 있는 곳이면 간다는 심정으로 전 세계로 cv를 뿌리고 지원을 한다. 나의 지인(한국인) 중에도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싱가포르에 정착한 분이 있는데, 나 또한 언제든 이곳을 뜰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이동으로 인해서 주목받는 것은 인권으로서 학자들의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 of scholars or right to academic mobility)이다. Klaus Beiter(2014)에 의하면, 많은 나라가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대학 소속의 직원이나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전파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책임으로 여기는 직업의 특성상 그들의 학문적 활동이 자국의 체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그들의 이동의 자유에 제약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위험한” 정신의 소유자로 묘사되기도 했다고 그는 말한다(245). 그런데 내 경험상, 이 ‘위험한 정신의 소유자’ 라는 인식은 학문 커뮤니티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다. 한때 이 정도면 사상 탄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목소리에 대해 배타적인 집단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노마디즘이 고용과 관련한 노마디즘이라면 (그리고 나 자신도 고용 면에서 노마디즘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한 아카데미 노마디즘은 이 외에 또 다른 두 가지 경험에 대한 것이었다. 우선은 분과 소속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 학회 저 학회를 기웃거리면서 어디에도 정박하지 못하는 떠돌이 같다는 생각을 했다. 네트워킹이라는 것을 하려면 학회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분과의 특징 때문에 내 전공과 연구 관심사가 딱 들어맞는 학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귀국 직후 닥친 코로나로 인해 학회들이 전반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두 번째는 학술적 글쓰기와 대중적 글쓰기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적 글쓰기를 먼저 시작했다) 가끔 느끼는 떠돌이 의식이 있다. 미국에서 종교개혁 수업 시간에 어느 학생이 학술지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 교수는 그것을 배제를 위한 게이트키퍼가 아니라 질이 보장된 연구물을 내기 위한 quality control로 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오랜 세월 번역가로 살면서 지식의 민주적 확산에 대해 나름의 소신이 있었던 나도 학자들이 실제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어렵게 이야기하며 권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적잖이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박사 공부를 하면서 학자들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다. 막상 공부를 해보니 박사 논문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엉터리 학자도 있겠지만 성실하고 실력 있는 학자도 많았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accessible한 언어로 재미있게 쓴 학자들의 책을 많이 접하면서 글쓰기의

새로운 전범을 배우기도 했다.

그래도 여전히 두 장르의 글을 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느 쪽에서도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요즘 보니 비전임이 규범이 되고 학교에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아예 저술로 방향을 트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때로는 지식 소매상이라고 자칭하기도 하는 이 그룹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자리 잡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그룹이 그래도 학계와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시장 논리나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quality control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의 모든 윤리적 함의와 함께 ‘연구’라는 것에 제대로 헌신한 학자들이 더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A sense of calling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갈 때 나는 펀딩을 받지 않았다. 나이도 많고 하니 펀딩 받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믿는 구석은 공부하러 떠나기 전 나와 가족의 생계 기반이 되었던 나의 번역 노동이었다. 살림하고 아이 돌보며 번역을 할 때는 이중 노동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살림과 육아를 연구로 대체한다면 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그리고 그렇게 2년간 일본에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했다. 그 사이에 펀딩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연구 주제로 펀딩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번역과 연구를 병행하다 보니 연구가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웠다.

그래도 이 시기는 나에게 바울의 아라비아 시기였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곧바로 일로 뛰어들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실제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시작한 것은 예수라기보다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 동안 바울은 분명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종교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했을 것이다. 그와 비슷하게, 일본에서 머무는 2년 동안 내가 박사 논문에서 시작한 물음이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가 더 명쾌해졌다. 코스웍에서 공부한 것까지 다 돌아보면서 책을 한 권 썼고, 몇 개의 단편 글들을 쓰면서 종교여성학에 대한 내 나름의 분명한 시각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교수 자리가 아니었다. 내가 교수가 된다 해도 연구를 하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한다면 즐겁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연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이라는 것을 그 2년의 시간 동안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킹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슈퍼바이저로부터 진로 조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박사 4년반 박사 후 2년을 보냈지만, 그

래도 내가 한 가지 갖추었던 것은, 이처럼 학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학위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Shelley Kinash와 Madelaine-Marie Judd(2019)는 박사 학위 이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질로 세 가지를 꼽았다: 정체성, 업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전략적 행동.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체성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업계의 필요에 맞게 조율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여가 무엇인지 모르면 낭패다. Kinash와 Judd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clear sense of one’s self), 자신이 택한 업계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사회에 자신이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129).

한국에 돌아와서 보낸 2년은 그러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업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사실 처음 귀국했을 때는 연구재단이 어떤 곳인지도 모를 정도로 업계에 대해 무지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일자리 제안이 있었고, 연구 주제가 나랑 딱 맞지는 않았지만 새 연구 분야를 넓힌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맞춰서 연구 프로포절을 내고 취직이 되었다. 연구비 주는 곳에 맞추어서 하는 연구가 늘 기꺼웠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내 관심사와 만나는 지점을 찾으려 노력했고, 업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조금 파악이 되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로 지원을 해서 연구 사업도 얻어냈다. 모든 연구소들이 그렇겠지만 내가 속한 곳도 내부 역학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임기 자체도 기한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assessment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다음 단계의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박사 지원에서부터 박사 과정 그리고 그 후까지 누가 나에게 뭘 가르쳐준 적 없이 혼자서 헤쳐나갔다. Mollinger(2019)는 많은 학생들이 슈퍼바이저가 그 과정을 안내해줄 때는 논문도 출판하고 그랜트도 지원하지만, 진정으로 헌신된 학생만이 스스로의 동력으로 길을 낸다고 했다. 나 또한 박사 과정 때부터 교수의 지도 없이 알아서 학회에 신청해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고, 일본으로 갈 때도 내가 알아서 마땅한 곳을 찾아서 지원하고 나중에 지도교수에게 추천서만 부탁했다. 교수가 학술지에 논문으로 내 보라고 한 기말 페이퍼 두 개를 자신감 부족으로 끝내 내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아쉽지만, 그것 또한 좋은 교훈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내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연구란 무엇인지, 연구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을 써보고 싶다.

Mollinger는 박사 공부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숙고할 기회, 미지의 것에 대해 질문하고 조사하고, 숨겨져 있던 그리고 오해받던 것을 표면으로 드러낼 이 기회는 자신만이 아니라 세계도 바꾼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행동이지만, 독립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140). 이 말은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신의 확고한 연구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정체성이 확고해야 업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한 Kinash and Judd의 말과 연결되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사회와 나, 업계와 나라고 하는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표현한다면, 프레드릭 뷰크너가 정의한 소명과 맞닿아 있다. “소명이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굶주림이 만나는 곳이다.” 나에게도 즐거우면서 세상의 필요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일을 나는 연구에서 발견했다. 미숙함과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도 그 소명을 따라 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작년에 연구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미국 대학들이 대학교육을 반성하면서 소명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연구들을 접했는데 (Schwehn/Lagerquist, 2014; Cunningham, 2015), 한국의 대학교육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교육을 고민하며 기획된 학술대회라서 해보는 제안이다.

도움 받은 글

- 이 재경, “한국사회학에서의 여성연구: 통합(integration)과 분리(segregation)의 이중전략,” 「여성학논집」, 31집 2호(2014).
- Beiter, Klaus. 2014.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Academic Mobility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Nina Maadad/Malcolm Tight(역음), *Academic Mobility*(Bingley: Emerald Publishing, 2014), pp. 243-265.
- Buker, Eloise, “Is Women’s Studies as Disciplinary or an Interdisciplinary Field of Inquiry?,” *NWSA Journal*, 15권 1호(2003).
- Cunningham, David(역음), *At This Time and In This Place: Vocation and Higher Education*, Oxford Scholarship Online(2015).
- Dollinger, Mollie, “Guidance for the Modern Ph.D Candidate,” Molly Dollinger(역음),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Doctorate: The Importance of Supervision, Networking, and Becoming a Global Academic*(Bingley: Emerald Publishing, 2019), pp. 133-140.
- Hampl, Patricia, *I Could Tell You Stories: Sojourns in the Land of Memory*(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9).
- Kinash, Shelley/Madelaine-Marie Judd, “Succeeding beyond Your Doctorate: The Importance of Identity, Industry Awareness, and Decisive Action,” Molly Dollinger(역음),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Doctorate: The Importance of Supervision, Networking, and Becoming a Global Academic*(Bingley: Emerald Publishing, 2019), pp. 117-132.
- Lewis, Thomas A. 2020. “Theory and Method and the Stakes of a Fragmented Discipline: Or, What Economics Taught Me About the Study of Relig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88권 4호(2020). doi:10.1093/jaarel/lfaa060.

-
- Maadad, Nina/Malcolm Tight(엮음), *Academic Mobility*(Bingley: Emerald Publishing, 2014).
- Messer-Davidow, Ellen, *Disciplining Feminism: From Social Activism to Academic Discourse*(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2).
- Schwehn, Kaethe/L. DeAne Lagerquist(엮음), *Claiming Our Callings: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Vocation in the Liberal Art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Suarez-Ortega, Magdalena/Angelica Riskey, “The Impact of Mobility on the Lives and Careers of Female and Male Academics in Higher Education,” Nina Maadad/Malcolm Tight(엮음), *Academic Mobility*(Bingley: Emerald Publishing, 2014), pp. 79-94.

탈콧 파슨스의 대학론과 한국 대학

박 치현 / 대구대학교 성산교양대학

파슨스는 대학을 행위체계(action systems)의 층위에서는 문화적 체계(cultural system) 이면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조직화된 하나의 사회적 체계(social system)로서 보면서, 인지적 합리성(cognitive rationality)을 추구하는 ‘인지복합체(cognitive complex)’로 규정한다. 인지복합체는 인지합리성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대학은 문화와 특수한 관계를 갖는 사회적 체계다. 대학에서는 이처럼 지적인 합리성이 기능적 우선성(primacy)을 가지므로, 도덕적인 것, 감정적인 것, 종교적인 진리 등은 이차적인 기능으로 밀려난다. 결국 파슨스에게 대학은 문화와 사회를 매개하는 제도이다. 문화적 대상이자 생산물인 지식이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실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018년 말과 2019년 초 대학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이자 쟁점은 그동안 누적된 비정규 교수(주로 시간강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출된 ‘개정 강사법’을 둘러싼 것이었다. 대학 교육의 절반 가까이 감당하던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특히 교원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학을 정상화하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적지 않은 대학들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졸업학점 축소, 교양과목 줄이기, 폐강기준 완화(폐강이 많이 되도록 유도), 같은 강좌 합쳐 대형강좌 만들기, 전임교원 강의시수 늘리기, 사이버강좌 늘리기 등 ‘반교육, 반연구’ 적이라 할 수 있는 구조조정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강좌 관련 조치들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강의시수 증가는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수업의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강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존 대학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여러 갈래로 제기되어 왔다. 가장 주된 비판은 대학의 기업화를 비판하는 논리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대학’ 비판이다. 대학은 학위 장사꾼이 되었으며, 기업에 종속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의 운영원리부터 목표까지 시장적 기업적 논리에 따른다는 것이다. 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은 기업적 경영적 원리에 충실하므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한 교수가 강의를 여러 개 할수록 자신의 주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강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라리 해당 과목에 전문성이 있는 외래강사의 강의를 맡을 것이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가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교육부 대학평가의 엄청난 구조조정 효과는 여전히 국가가 대학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며, 따라서 대학을 기업이나 기업적 논리가 지배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대학의 80%를 점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전임교원들로의 기득권 집중을 지적하면서 전임교원의 특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대학비판 논리들은 대부분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며 널리 공유되는 시각들이다. 대학이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산업적 요구에 종속되는 측면이 널리 관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시각들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모두 다 대학을 이상화(idealization)한다는 점이다. ‘대학은 상아탑이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세속사회에서 신성성이 부여된 공간’이라는 전제를 공유한다. 대학이 대학답지 못하므로 대학을 망친 존재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대학보호 논리로 악용하여 대학은 신성한 공간이므로 정부가 대학의 행정에 개입하지 말라(이를테면 등록금을 대학자율로 올리게 해달라, 대학이 수익사업을 더 맘대로 하도록 해달라 등등)고 주장하면서, 대학의 여러 문제를 피해가려는 듯한 주장을 제시한다. 도덕적 비난은 대중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여론을 모으거나 정치적인 동원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 대한 이 같은 이상주의적이고 철학적인 이념화는, 그것과 현실 대학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이제 규범적 기준으로 무력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인 대학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모색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 진단은 대학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오래 전에 ‘고등교육의 사회학’을 시도해야 한다는 사회학계의 요청이 있었지만, 막상 사회학계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 축적이 없었으며 대부분 대학의 기업화 비판, 국가에 의한 교육통제 비판 등 단선적인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사회학계에서도 이론적 시각과 경험적 연구의 제대로 된 결합은 요원해 보인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고전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의 대학론은 사회학자 파슨스의 거대한 체계기능주의(system-functionalism) 이론을 통해(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현대 대학의 진화와 기능을 분석한다. 사회학 이론의 시각과 대학을 근대성의 전개 과정 속에 배치하는 역사적·경험적 고찰 양자를 모두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토대적인 이론 모색과 경험적 현실 이해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2. 문화와 사회를 매개하는 대학

파슨스는 1967년부터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회장직을 역임했는데, 여기서 발간하는 저널 Daedalus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의 조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egre, 2012: 70). 이미 1968년 5월 파일럿 보고서인 “The American Academic Profession, A Pilot Study” 가 제출되었으며, 그밖에도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Platt, 1981: 155. 특히 각주 3, 4번 참조). 그는 이미 대학에 대해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식과 그 진보의 가치를 사회화하는 수행, 그리고 아카데미 직업 수행에 대해 특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1) 파슨스 근대화론과 대학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면, 주로 교육을 통해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 기능이 강조되거나, 아니면 부르디외의 교육재생산 이론처럼 계급구조의 재생산 기능을 강조하는 이분법적 논의가 대부분이다. 물론 파슨스는 보수주의자로 여겨지면서 전자에 가깝게 평가되어왔다.²⁾ 두 가지 논의는 교육제도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교육제도의 독자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반면 파슨스 주장의 특징은 교육을 체계기능이론의 관점에서 유형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계의 핵심 제도로 간주하면서, 현대사회 근대성의 진화 과정에서 ‘교육혁명’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파슨스 논의에서 대학은 서구 교육혁명의 핵심 기관이 되며, 그것은 민주혁명을 잇는 역사적 전환으로 자리매김 된다.

종교개혁 : 종교와 정치(국가)의 분리/분화
산업혁명 : 정치(국가)와 경제(시장)의 분리/분화
민주혁명 : 정치(국가)와 사회공동체(시민사회)의 분리/분화
교육혁명 : 사회공동체(시민사회)와 유형유지 체계(문화)의 분리/분화

<표 1> 서구 근대의 체계분화 과정

2. 파슨스의 체계이론에서 대학의 기능

파슨스의 사회적 체계 도식에서 특이한 지점은 통합 체계(사회)와 유형유지 체계(문화)를 구분한 것이다. 보통 정치(국가)와 사회를 구분하거나, 정치(국가), 경제(시장), 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오랜 관행이었다. 학자들은 이 같은 이분법과 삼분법 사이에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논쟁해왔다.³⁾ 사실상 파슨스는 ‘사분법(四分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와 문화를 구분하는 것은 기이할 뿐 아니라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려워 보인다(Luhmann, 2014: 46). 이 같

2) 하지만 파슨스는 교육에 의한 기회의 평등 관념이 ‘능력주의(meritocracy)’ 관념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Parsons, 1999: 141).

3) 대표적인 것이 ‘시민사회론’이다.

은 통합체계와 유형유지 체계의 구분은 특히 대학 제도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는 것이 파슨스의 견해이다. 대학은 사회적 체계의 유형유지 하위체계이면서 동시에 행위체계의 문화 하위체계와 깊숙이 관련을 맺고 있다(Parsons, 1977: 214-215).

문화 체계 (상황정의) L	유형 유지 L	사회 공동체 I
	경제 A	정치 G
사회적 체계 (정서) I		
행동 체계 (지능) A	인성 체계 (수행능력) G	

<표 2> 일반행위체계와 사회적 체계의 위상도

파슨스가 대학을 연구한 저서이자 본 연구가 주된 텍스트로 고찰할 「미국의 대학」(*The American University*, 1973)의 두 가지 의미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출될 수 있다. 먼저 사회의 ‘유형유지 하위체계’에 대해 대학이라는 사례를 통해 경험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의 유형유지 하위체계와 통합 하위체계의 관련성을 탐구하고, 일반 행위체계의 사회적 체계와 문화적 체계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문화와 사회를 개념적으로 좀 더 정확히 구분한 것이다. 대학은 ‘문화’를 다루는 사회적 체계인 유형유지 체계에 속하지만, 통합 기능에도 적합한 기관이다. 다시 말해 대학은 문화와 사회를 매개하는 제도이다.

① 현대의 ‘인지 복합체’로서의 대학

<표 3> 문화체계의 하위체계들

구성적 체계 (유형유지) L	평가적 체계 (통합) I
인지적 체계 (적응) A	표현적 체계 (목표달성) G

* 괄호안은 상징적 교환매체

<표 4> 유형유지체계의 하위체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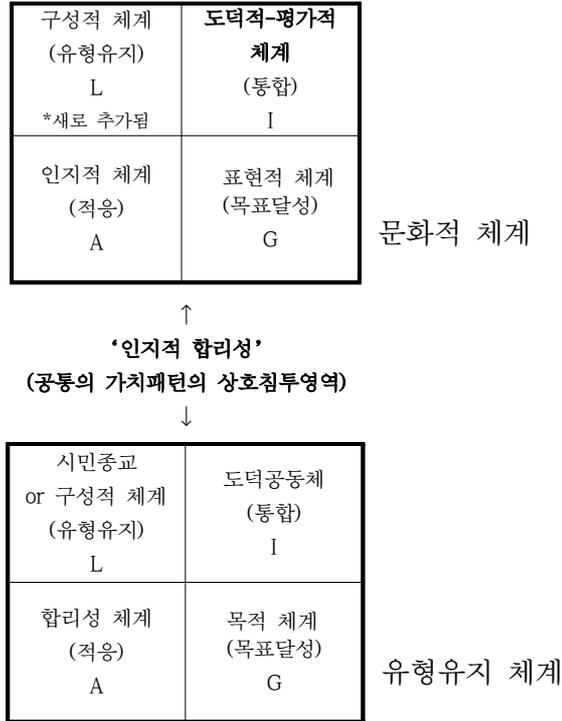
시민종교 or 구성적 체계 (유형유지) L	도덕공동체 (통합) I
합리성 체계 (적응) A	목적 체계 (목표달성) G

주지하다시피 연구와 교육은 대학의 주요 기능이다. 파슨스는 대학이 현대 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수호하는 ‘인지 복합체cognitive complex’가 형성되고 보존되는 장소라고 말한다. 인지 복합체는 분과들 간의 전문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속성을 가진다. 인지적 복합체는 ‘인지적 합리성cognitive rationality’⁴⁾에 의해 규정되는데, 인지적 합리성은 지식과 유능함이라는 가치, 그리고 주장의 진리성을 평가하는 합리성에 호소한다(Parsons, 1973: 57).

인지복합체는 인지적 합리성을 체현하는데, 먼저 인지적 합리성의 생산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인지적’은 문화적 체계의 층위이며, ‘합리성’은 사회적 층위라고 할 수 있다(윗글, 38). 따라서 인지적 합리성은 문화적인 것과 사회적 것의 층위를 연계(상호침투)시키는 또는 연계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패턴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 ‘인지적 합리성’ 개념은 베버의 ‘가치합리성Wertrationalität’ 개념을 원용하여 구성된 것이다. ‘인지적’은 지식인이 복무해야 하는 특정한 ‘목표’ (진리)를 의미하며, ‘합리성’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수단’ (연구)을 의미한다.

〈표5〉 문화적 체계와 유형유지 하위체계의 상호침투: 인지적 합리성(Parsons, 1973: 37)



인지적 합리성은 행위체계의 하위체계인 **문화적 체계의 평가적 체계(I)**가 **사회적 체계의 하위체계인 유형유지 체계(L)**와 **상호교환(interchange)**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상호침투 영역에서 생산된다(윗글, 36). 인지적 합리성은 일종의 가치패턴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 혹은 집단) 행위들의 지향 패턴(pattern of orientation)을 인도하여, 행위들을 선택하는 효과를 갖는다. 가치패턴은 바람직한(desirable) 행위지향을 규정한다. 행위자들은 바람직한 행위를 하도록 규제되므로(윗글, 37), 이로써 행위자들의 지향과 사회적 대상물들의 매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제도화된 가치들은 상호침투 영역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행위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가치와 그 경계 내에서 제재된다(sanctioned). (윗글, 36)

인지복합체는 (· · · · ·) 인지적 합리성의 가치요소들이 체현되어 제도화된 복합체다. ‘인지적’은 문화적 준거를 가지며, ‘합리적’은 주로 사회적 준거를 갖는다. 인지적 합리성은 가치패턴으로서 문화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층위를 연계하며,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윗글, 38)

파슨스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화된 가치’는 지나치게 일반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분화된 체계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⁵⁾ 사회

5) 파슨스는 미국사회의 일반화된 가치가 “도구적 행동주의(instrumental activism)”라고 지적한다. 도구적 행동주의는 미국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사회 유형으로 간주된다. activism은 환경에 적응하기 보다는 행위를 통해 행위 자유를 증대시켜 환경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Parsons, 1973: 41)

적 체계들의 ‘분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화된 가치패턴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일반화된 가치는 분화되는 체계들에 분화되어 제도화되는 것이다. 일반화된 가치는 이런 식으로 행위(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규범적(normative)’ 속성을 지니게 된다. 행위자(actor)가 어떤 대상(object)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할 때, 인지적 합리성은 바람직함이 아닌 “지적인 문제들”을 중시한다. 바람직한 행동에 구속되지 않고 지적인 문제들만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행위체계와는 독립분화된 체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지적 합리성은 도덕적, 감정적, 종교적인 것들을 괄호치고 지적인 것에 우선성을 둔다.

파슨스는 인지적 기준에의 강고한 집착과 베버의 가치자유 개념을 대조한다. “인지적 기준은 지식과 여타 인지적 산물 생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요인만을 구성” 할 뿐이다 (Parsons, 1978: 142; 강조는 파슨스). 다시 말해 인지적 기준이 곧바로 생산된 지식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인지적 합리성에 근거한 가치부여(valuation)는 인지적 타당성 기준에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동기(motivation)’도 존재한다. 정리하면, 기준의 존재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인지적 작업의 동기를 제공하는 정서적(affective) 의미부여도 필요하다.

타당하고 중요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기준, 가치부여, 동기, 정서] 4가지 요인의 특정한 조합이 필요하다. 이것들 중 하나만이 지식 생산의 유일한 수행자(agent)가 될 수는 없다. (윌클, 142)

문화체계가 적응기능(A)을 작동시키면서 재생산되려면 ‘지식’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지식은 문화체계의 하위체계에서의 ‘인지적 상징화(cognitive symbolization)’⁶⁾의 산물이다. 지식은 행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므로 사회적 체계에서는 ‘합리적 행위’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행위를 ‘인지복합체’를 구성하는 데로 이끈다.

‘지능(intelligence)’은 신경시스템과 관련된 생물학적 층위의 범주다. 지능을 가진 행위자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의미(meaning)와 접합된다. 지능은 지식과는 구별된다. 마치 돈이 상품과 구별되는 것처럼 말이다. 지능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생산하고 추구할지 행위자가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Parsons, 1978: 138). 지능적 행위란 따라서 지식에 기반하거나 지식을 지향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Parsons, 1973: 56). 지능을 가진 행위자는 자신의 인성을 형성하는 ‘능숙함(competence)’ 또는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학습(learning)을 통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인지복합체는 ‘합리적 행위’ 역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6) 인지적 상징화는 행위체계로서의 문화체계에 해당하는 용어이므로, **행위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인지복합체는 이러한 행위과정이 산출한 산물, 즉 문화적 대상물에 초점을 두므로 ‘지식’이라는 **결과물**이 적응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Parsons, 1973: 56).

<표 6> 인지복합체의 4가지 요소(Parsons, 1973: 57 재구성)

L

		합리적 행위 rational action I
지식 know- ledge		
지능 intelligence A		능숙함 competence (performance capacity) G

이 같은 인지적 합리성이 현대사회에서는 바로 대학에 제도화된다. 파슨스는 대학이라는 인지복합체에서는 인지적 합리성이 기능적 우선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지적 합리성이 “도구화된 실용적 관심과 구별”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Parsons, 1978: 103). 이러한 진술은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진술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현실세계에서의 대학의 사정과 매우 달라 보인다.

② 대학에서의 인지합리성의 제도화

파슨스는 대학에 제도화된 인지복합체의 구성양태에 대해 ‘대학의 핵심 섹터(core sector of the university)’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학에서 지식은 학문 분과의 지식이 라는 형태로 문화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 문화적 구조 내에서는 인지적 합리성이 기능적 우선성을 가지며, 분과별로 내용과 방법론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구조는 전문직, 응용학문, 사회전반에 대한 이념적 상황정의를 통해 사회적 것으로 제도화된다.

<표7> 대학에서 인지합리성의 제도화(Parsons, 1973: 106)

인지적 우선성의 핵심 (연구, 대학원의 전문성) L	사회적인 상황정의에 기여 (지식인, 제너럴리스트) I
시민 교양교육 (일반적인 학부교육) A	응용학문 및 전문직 훈련 (전문성) G

대학 제도에서의 ‘상황정의’ 는 주로 지식인들 -아카데미 지식인들뿐 아니라 문화적

인 상징의 의미를 보증하고 평가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는-에 의해 발전된다. 지식인들은 인간 조건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역설한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도덕적 기능뿐 아니라 표현적 기능도 수행한다. 이 때 그들은 인지적, 도덕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맥락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황정의를 공급한다.⁷⁾

대학(특히 미국 대학들)은 경제적 합리성과 양립한 상태에서 학문생산이라는 목표를 연구와 교육을 통해 수행한다. 대학들은 따라서 ‘도덕 공동체’이기도 하다. 먼저, **인지적 합리성에 대한 ‘가치헌신’**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 같은 가치헌신은 직접적으로는 순수한 지식 추구(일반 행위체계의 L), 간접적으로는 지식과 경험의 자원으로 이 같은 인지적 합리성을 활용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의학(G), 공학(A), 법(D) 관련 전문 직업들이 그 예이다. 다음으로, **제도에 대한 충성**이라는 가치헌신을 유지함으로써 그러하다. 이 같은 인지적 합리성에 대한 충성(loyalty)을 통해, 대학이 전체 사회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인지 복합체는 일반 행위체계의 ‘문화적’ 하위체계에 속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유형유지’ 하위체계이다. 다시 말해 문화체계와 유형유지 체계 사이에 놓인 상호침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양자가 상호침투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인지복합체인 대학은 사회에 인지적 합리성의 산물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적 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대학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유형유지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가족이 담당하던 ‘사회화’ 기능마저 점점 학교로 이관된다. 사회적 체계의 층위에서 보면 가족과 마찬가지로 대학이 ‘유형유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Parsons, 1973: 149). 특히 대학에서 작동하는 (특히 **학부생에 대한 사회화 기능은 이념과 응용학문을 매개해준다.**⁸⁾ 파슨스는 학부교육이 점점 덜 직업적이고 덜 전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대학은 특히 세속적 가치를 제도화함으로써 현대의 규범적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므로, 더 이상 종교를 근거로 하지 않고서도 규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규범적 통합은 나아가 시민권과 계층상승에 기여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통합에도 기여한다.

교육혁명은 또한 중요한 **통합** 메커니즘들을 수반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세속 문화를 제도화**하는 수단이다. 이 밖에도 교육혁명으로 인해 **사회화된 능력**이 사회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자격**의 기준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성원들을 계층체계 내에 배분하는 기준으로서 점점 더 중요시된다. (Parsons 1999: 150; 강조는 인용자)

파슨스는 미국 인지복합체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인지합리성의 제도화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의 실용주의와 도구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공업, 군사, 의료 기술을 위한 자연과학의 발전을 추동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파슨스는 산업혁명과 교육혁명을 구분

7) 인지 복합체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회적 역할인 ‘지식인’에 상응한다. 지식인들은 특수한 지식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질서의 규범적 타당성을 보증하기 위한 책무를 지닌다(일반행위체계의 L). 지식인들은 모종의 도덕적 인지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를 평가하고(일반행위체계의 D), 사회 목표와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한다(일반행위체계의 G).

8) 파슨스는 미국 대학들의 사회화 기능은 미국 특유의 ‘제도화된 개인주의’의 성격을 강화하며, 다원적인 사회에 걸 맞는 인성 유형을 형성한다고 본다(Parsons, 1973: 118).

하는데, 산업혁명은 주로 근면한 인간을 창조했으며 지식을 곧바로 금전화하는데 치중했을 뿐 실용적 관심을 넘어서서 지식을 분과별로 조직화하는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특히 미국의 포폴리즘적인 반지성주의(호프슈테터가 대표적으로 지적했던) 하에서 지식 고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슨스는 ‘법학’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 법학은 19세기 중반까지는 그야말로 인지적 합리성 추구하고 거리가 먼 실용적 관심에 지배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하버드 대학 등에서 로스쿨이 설립되면서 법률가가 미국문화와 사회조직의 세속화의 징후가 되었으며, 법학이 과학적 가치를 흡수하기 시작했다(Parsons, 1973: 120).⁹⁾ 특히 19세기말 부유층들은 유사-귀족적 지위를 획득했는데, 그 기반으로 이들은 유럽 문화와 과학을 준거로 삼았다. 예술작품 수집이나 후원 같은 부유층들의 기부나 후원에 사회적으로 명예를 부여하는 문화가 미국에 생겨났다. 이를 통해 실용적 이유가 주된 것이 아니게 되고, 인지적 복합체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¹⁰⁾ 주로 교회의 후원에 의해 설립된 미국 대학들에 세속화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신학적 세계관과 세속적 분과학문 간의 간극을 채웠다. 이로써 학문분과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사회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들의 위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19세기에 대학에 다니던 대학생들은 거의 상류층이었다. 20세기처럼 계층상승을 추구하는 하층중간계급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법학과에서 잘 드러난다. 법학은 학부생들에게는 ‘판매가능한’ 학문이다. 파슨스는 전문직 학문의 제도화에는 상류층 학부생들과 하버드의 찰스 엘리엇(Charles Elliot) 총장이 도입한 선거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윅글, 122) 이러한 과정을 거쳐 큰 틀에서 교수진의 ‘전문직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보여주고 보증하는 것이 정년(tenure) 제도와 학문 자유 정신이다. 교수진은 인지적 합리성이라는 가치에 헌신하는, 일종의 신탁적 책임을 지는 존재로 여겨진다. 테뉴어 지위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며, 학문 자유는 시장 경쟁과 관료제적 통제, 심지어 민주적 압박으로부터도 교수진을 보호한다. 다른 한편 교수는 웬만하면 해임되지 않지만 다양한 층위에서 ‘평가’에 노출된다. 이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다만 교수진은 대학 외부의 학문공동체(주로 자신이 속한 분과 동료)로부터의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체계로서의 대학은 특정한 유형의 사회통제를 제도화한 조직이다. 반면 경제적 인센티브나 정치적 권위 권력에 의한 통제는 최소화된다. 대학에서는 가치헌신의 타당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위세와 영향력이 더 큰 규제력을 발휘한다.

파슨스는 인지적 합리성의 작동이 20세기의 교육혁명을 거치면서 **종합대학(“full university”)**를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대학’ 체제를 옹호한 것이다. 종합대학에는 법학, 의학, 경영학, 행정학, 건축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직’을 준비하는 분야들이 기초학문과 공존한다. 왜 이들 전문적 실용학문들이 굳이 종합대학에서 분리 독립하지 않고 순수학문들과 공존하는 것일까? 순수학문이나 교양학문들은 이들 전문 학과들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여겨지

9) 과학적 가치에 대한 열망은 수많은 미국 청년 지식인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유학을 가는 경로를 낳았다.
10) 파슨스는 록펠러나 카네기 재단의 학문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다.

는 측면이 크다. 그렇기에 필수적인 것이 된다(Parsons, 1978: 103). 파슨스는 적어도 상위 대학들에서는 학부교육이 교양교육의 측면이 크고, 하위 대학들보다는 직업준비로서의 특성이 약하다고 진단한다(윗글, 135)

인지적 합리성 원리는 학문에서의 ‘수월성’ 논리를 설명해준다. 파슨스는 아카데미 제도가 고유하게 층화된(stratified) 체계라고 본다. 인지적 역량과 성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학문적 성장은 향상을 전제로 하는 배움의 과정이며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문 향상에 따라 선생이 되고 연구자가 된다. 학위취득이 이러한 학문수행의 종점이라고 봐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인지적 합리성 원리와 학문적 수월성에 따라 제도화된 대학조직은 불평등한 경쟁체제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대학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대학과 사회적 연대

인지복합체로 대학을 고찰하는 여기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자칫하면 대학의 기능이 단순히 ‘지식생산’ 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파슨스는 “대학만이 이른바 ‘지식공장’ 인 것은 결코 아니” 라고 말한 바 있다. 파슨스의 대학 이론은 ‘사회학적’ 대학론이며, 대학과 사회가 맺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지적 복합체인 대학이 유형유지(L) 하위체계로서 특히 사회의 **통합(I) 하위체계**와 맺는 관련이 중요하다. 이러한 파슨스의 입장은 미국에서 대학과 (토크빌이 주목했던) 자발적 결사체가 맺는 역사적 관련성을 서술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이 ‘사회적 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포착할 수 있다.

파슨스는 대학의 학부생 교육과 관련하여 대학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보여준다. 학부생 교육이 사회와 관련된 핵심 기능은 ‘사회화’ 다. 현대화 과정에서 개인 인성의 사회화는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도 나누어지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학부교육은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화 기능은 무엇인가? 대학을 연대적 공동체로 볼 경우, 대학 내에는 다양한 하위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들은 일종의 ‘보호된 환경’ 을 구성한다. 이를테면 대학 바깥 사회의 경우 성별 간 분리의 관행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점진적으로 남녀 간의 분리를 극복하고 남녀 공동교육, 여성비율 증가, 남녀공동 거주 기숙사 등이 등장하면서 학부생들의 사회화 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파슨스는 대학이 하나의 사회조직이긴 하지만 여느 사회조직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파슨스가 보는 대학에서의 상호작용 핵심원리가 제시된다. 그는 대학을 ‘**동료적 결사체(collegial association)**’ 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동

11) 데이빗 슐리(David Sciulli)는 파슨스의 이 동료적 결사체(collegial association) 개념을 발전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오히려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는 문제를 해명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사회주의 체제에 관계없이 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권위주의가 증대된다는, 일종의 비맑스주의적 비판이론을 발전시켰다(Sc

료적 결사체에서는, 구성원의 위신(prestige)은 ‘등급화’ 되어있지만 구성원의 지위(status)는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위신의 불평등과 지위의 평등. 대학체계 내에서 구성원들은 인지적 합리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 등급화 되어 있을 뿐이다. 동료적 결사체는 특히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복합체(professional complex)에서 형성된다. 파슨스는 전문 지식을 다루는 전문직 내에서도 연대적 결사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양자의 결합가능성을 타진한다.

콜레지얼(collegial)은 마음 내키는 대로 이따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역할과 ‘일자리’ 를 통해 성원자격을 획득하는 형태의 결사체이다(Parsons, 1999:145).

현대의 대학교는 전문직 구조의 중심이 되었다(Parsons, 1999:145).

따라서 대학은 시장적 조직, 관료제적 조직과도 구분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결사체적 유형과도 구분되며, 순수하게 민주적인 결사체와도 다르다(Parsons, 1977:217). 물론 대학도 사회조직이며, 관료제적 성격 및 시장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은 학문적 권위에 따라 그리고 행정기구의 속성에 따라 관료제적 속성을 지닌다. 또한 대학(원)생들을 ‘소비자’ 로 보는 관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 경우, 교수와 강사는 시장에서의 상품공급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민주적 결사체와는 달리, 대학은 학문적 ‘역량’ 에 따라 층화되어 있다. 60년대 학생운동이 교수와 학생의 평등을 주창했지만(극단적인 경우 1인 1표 주장), 이들의 주장은 대학 체계에 대한 오해 혹은 이상론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파슨스는 평가했다. 이러한 현실적 양상에도 불구하고, 파슨스가 보기에 대학조직의 핵심인 교수진과 학생의 집합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학을 동료적 결사체로 만든다.

학생-교수의 관계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상업시장에서 판매자-소비자의 관계와 매우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표는 ‘입학(admission)’ 이라는 개념이다. 학생은 해당 학위 프로그램에 허용되며, 해당 학과 학생의 지위가 약속된다. (.....)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는 구성원 지위 제공과 더불어 연대가 중요하게 존재한다. 교육적 관계 양측의 상호 기대가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학뿐 아니라, 전문가-고객 관계의 특징이기도 하다. (Parsons, 1978: 106)

따라서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교육혁명은 시장과 관료제의 지배적 경향을 ‘제어’ 할 수 있다. 이 같은 대학의 결사체적, 나아가 사회적 연대와 관련되는 지점을 파슨스는 동료적 결사체란 표현으로 요약한 셈이다.

동료적 결사로 이루어지는 학문공동체는 유형유지 체계에 ‘제도화’ 되므로 사회적으로 연관된 기능 수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숙련노동력을 만들어 공급한다. 일반 행위체계 층위에서 학문공동체는 지식과 유능함을 생산할 뿐 아니라, 정서적 이해관심, 지성 등을 생산한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지적 분과에서의 인지적 수용력과 유능함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다양한 분과를 학습함으로써 현대 사회 환경의 분화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교양수업은 당면 문제 해결에 정향되어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지성과 유능

iulli, 1992)

함 함양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학생들의 이해관계는 대학이 가르치는 인지적 내용의 바깥에 놓이지만, 분명히 인성적, 정치적, 사회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이 같은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사회 또는 정치사회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대학의 ‘지식사회화’는 결국 학생-시민들이 ‘제도화된 개인주의’를 사회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대학생들은 고도의 (전문적) 분화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아카데미 공동체는 인지적 합리성이라는 가치를 책임지는 사회의 일부분이며, 사회공동체에 대답할 수 있다. 특히 순수학문들로부터 서서히 분화된 공학, 의학, 법학, 나아가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등은 전문가의 능력과 완전성을 강조하며, 전문가-고객 관계의 규칙을 형성함으로써 사회공동체에 직업(윤리)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공급한다.

파슨스는 대학에서의 사회화가 긴장(tension)을 수반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학생들은 때로 교수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인지적 절대성을 갖고 반박한다. 그런데 파슨스가 보기에는 이 와중에 역으로 ‘평등주의적 연대’가 드러난다. 그 결과 문화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 간을 가로지르는 탈분화가 간혹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심해지면 고등교육체계 전반의 정당성을 뒤흔들기도 한다.

일반 행위체계 층위에서는 한편으로 합리화의 과정과 인성 및 개인성의 형성 간의 갈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사회적 체계와 문화적 체계를 상호 연계하는 대학 체계는 일종의 ‘지식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지식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지식의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인지적 복합체로부터의 퇴각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반지성주의 등 대학 지식인들의 지적 능력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식 디플레이션은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대학생들의 학습이나 대학제도에 대한 몰입이 약화되거나,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이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좌절될 경우, 학생들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회적 체계의 층위, 그 중에서도 사회공동체의 층위에서 본다면, 지성이나 영향력 두 매체의 측면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교수진들은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진 망설임(reluctance)과 학업의 정체(停滯)를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지식인), 학생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대학교육의 가치, 조직, 목적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인지적 합리성이라는 대학의 제도화된 가치는 이제 무관하거나 심지어 위험하다고 까지 여겨진다.¹²⁾ 교육 시스템의 위계적 혹은 권위적 조직화가 과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육의 목적이 지배계급에 일차적으로 복무하는 것이라고 비판받는다.

대학이 지식 발견과 학습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지식 가치를 추구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학문적 자유와 역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파슨스는 대학체계가 시장 조건이나 관료적 운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정치적, 표현적, 도덕적 목적에도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인지적 기능이 중심적 이해관심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파슨스는 흥미롭게도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교육과 연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12)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80년대에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대학강의가 학생들의 비난거리가 된 적이 있다.

파슨스는 미국대학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60년대의 학생운동을 대학의 인지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 미국의 지식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학 수의 증가는 곧이어 지식 디플레이션을 낳았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대학이 진리 가치에 제대로 복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파슨스는 교육혁명의 완수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운동을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저항은 교육혁명을 실질적으로 완수하려는 움직임이 된다.

3. 한국 대학 분석에의 시사점

파슨스는 교육혁명이 산업혁명 및 민주혁명과 더불어 현대사회들의 구조적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교육의 가치, 즉 인지적 합리성은 다른 가치들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의 교육자들은 고도의 아카데미적 자질이나 명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는 대학체계 자체의 통합 또는 조직 원리인 ‘동료들 간의 결사’도 작동하기 때문에, 교수진들과 대학당국 간의 갈등, 나아가 교육기관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대학에서는 이렇듯 동료들 간의 결사 원리와 관료적 통제 원리가 공존한다. 따라서 교수진들은 때로는 행정당국에 방어적 입장을 취하곤 한다. 또한 인지적 합리성에 대한 추구가 연구와 교육 간의 분화를 보증하는데, 시장 메커니즘이 들어오면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 미국 대학들의 양적, 기능적 팽창은 그 같은 구조적 분화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전문직 분야나 연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교양적 분과가 쇠퇴하는 일이 벌어진다. 당시 대학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이 겪는 여러 갈등과 긴장에 직면하여 연구와 교육이 결합된 미국식 종합대학을 분야별로 분할할 것(예를 들면 학부교육과 연구를 분리)을 제안했다. 하지만 파슨스는 오랜 역사적 과정이 축적되어 이룩된 종합대학 체제를 옹호하였다. 대학의 여러 단위들은 그 자체의 목적에 복무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나아가 인지적 복합체 작동에 있어 사회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합대학의 기능적 이점이 그 역기능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슨스의 대학이론에 따라 한국의 대학체제를 살펴보면, 몇 가지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첫째, 대학을 ‘인지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지복합체로 보는 시각은, 대학을 ‘독립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으로 본다. 따라서 대학이 정부와 기업의 자급에 종속되거나 정치적 지향에 휘둘리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둘째, 인지복합체 기능은 역사적으로 분화되고 제도화된다는 역사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합리성을 대학(또는 전임교수)이 더 이상 독점할 수 없게 된다. 인지복합체 기능이 대학 외부에도 분화(differentiation)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 외부(비제도권 학술장, 사이버공간)의 인지적 합리성 작동을 고찰할 필요가 생긴다. 셋째, 대학을 교육혁명의 주축이자 시민권(citizenship)의 확대로 보는 시각은,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민주화의 증진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해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대

학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학문적 수월성/전문성과 지식의 대중성 간의 길항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료적 결사체라는 대학조직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교수, 학생, 교직원 등이 취해야할 입장과 대학 운영 원리에 대한 근본적 검토에 참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종합대학의 배분원리에 따른다면, 대학은 기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더라도 해당 연구팀에 모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정 비율을 비실용적 기초학문에 배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의 독립성(인지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도움 받은 글

· 탈콧 파슨스의 저작

Parsons, Talcott,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I-II*(New York: Free Press, 1937).

Parsons, Talcott, 'The Professions and Social Structure', *Social Forces* 17권 1호(1939).

Parsons, Talcott, *The Social System*(New York: Free Press, 1951b).

Parsons, Talcott/Edward Shil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 Theoretical Foundations for the Social Sciences*(Routledge: Transaction Publishers, 1951a).

Parsons, Talcott/Alfred Kroeber, "The Concept of Culture and the Social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권 5호(1958), pp. 582-583.

Parsons, Talcott, "The Point of View of the Author," *The Social Theories of Talcott Parsons*(Max Black 엮음)(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1b), pp. 311-363.

Parsons, Talcott, "'Introduction' to 'Culture and Social System'," *Theories of society : foundations of modern sociological theory*(New York: Free Press, 1961a).

Parsons, Talcott/Gerald M. Platt, *The American University*(New York: Free Press, 1973).

Parsons, Talcott, *Social Systems and the Evolution of Action Theory*(New York: Free Press, 1977).

Parsons, Talcott, *Action Theory and Human Condition*(New York: Free Press, 1978).

Parsons, Talcott, *American Society : A Theory of the Societal Community*(Boulder, Colorado: Paradigm Publishers, 2007. 유고. 집필 1979).

파슨스, 탈콧, 「현대 사회들의 체계」(윤 원근 옮김)(서울: 새물결, 1999).

· 기타 문헌

루만, 니클라스, 「사회의 사회」(장 춘익 옮김)(서울: 새물결, 2012).

루만, 니클라스, 「체계이론입문」(윤 재왕 옮김)(서울: 새물결, 2014).

알렉산더, 제프리, 「현대 사회이론의 흐름」(이 윤희 옮김)(서울: 민영사, 1993).

티리아키안, 에드워드 A., "Parsons 이후의 社會學," (이 온죽 옮김), 「현상과인식」, 3권

3호(1979).

하버마스, 위르겐, 「의사소통행위이론2」(장 춘익 옮김)(서울: 나남, 2002).

- Alexander, Jeffrey (1986) 'The University and Morality: A revised Approach to University and Its Limit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7(5) : 463-476.
- Fararo, Thomas, 2001, *Social action systems : foundation and synthesis in sociological theory*, Westport, Conn. : Praeger.
- Gaston, Jerry (1975) 'The American University by Talcott Pars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5) : 1257-1260.
- Gordon, Daniel (2014) 'Legitimation, Ambivalence, Condemnation: Three Sociological Visions of the American University in the 1960s and 1970s', *The American Sociologist*, Vol.45(1), pp.51-67
- Holmwood, John (2009) 'From 1968 to 1951 : How Habermas Transformed Marx into Parsons', in *1968 in retrospect : history, theory, alterity*, Palgrave Macmillan.
- Holton, Robert (2007) '13. Talcott Parsons : Conservative Apologist or Irreplaceable Icon?', George Ritzer&Barry Smart (ed.), *Handbook of Social Theory*, Sage
- Platt, Gerald M. (1981) "'The American University": Collaboration with Talcott Parsons,' *Sociological Inquiry*, Vol.51(3&4): 155-165
- Sciulli, David., 1992, *Theory of societal constitutionalism : foundations of a non-Marxist critical theor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gre, Sandro (2012) *Talcott Parsons : An Introducti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Turner, Bryan (1993) 'Talcott Parsons, univesalism and the educational revolution : democracy versus profession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1) : 1-24
- Turner, Bryan&Holton, Robert (1986) *Talcott Parsons on Economy and Society*, Routledge.quintessence
- Vanderstraeten, Raf (2015) 'The Making of Parsons's The American University,' *Minerva* 53: 307-325.